

괴벨스식 선동에 맞서 진실을 밝힌다

히틀러 나치의 프로파간다를 총괄한 파울 요제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 파시즘의 두뇌이자 입이었던 그는 허위를 진실로 조작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가령,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된다>,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섞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나에게 한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한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라는 그의 말들에서 파시즘의 집단적인 광기가 발휘되는 원리를 파악하게 된다.

이른바 <충남>사건,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괴벨스의 어록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최근 발표된 민주노총충남본부 부성평등위원회의 글은 그 백미와 같다. 오래되고 복잡한 이 사건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대중들이 <충남>사건을 조작해낸 사람들의 <되풀이되는 거짓말>, <진실과 거짓말의 혼합>, <한문장으로 범죄자화>하는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말에 민주노총충남본부대의원대회결정과 민주노총집결결정의 권위를 싣고 그들이 벌이는 범죄적이고 마녀사냥적이며 맥가시적인 선동은 가히 괴벨스가 살아돌아온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이다.

한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하였다. 이른바 <피해자>에게 인권이 있다면 이른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피해자중심주의>라고 해서 <피해자>의 말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며 단죄하는 모습과 마녀사냥의 광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분별력과 합리성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적인 집단의 말과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비록 그들의 <한문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구보다 무거운 한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광적인 선동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밤을 새는 노력으로 진실의 불을 밝히고자 한다.

문제는 괴벨스식 선동에 넘어가 <21세기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충남본부와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단체들이다. 이들은 조직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키고 진보운동단체의 생명과 같은 연대를 함부로 깨고 버리는 과오를 범하며 <가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황당한 이른바 <2차가해자>를 양산하며 나아가 동지적 연대단체인 코리아연대를 매도하는 월권과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회적갑>과 싸우다 <운동권갑>이 되어,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을 공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루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진보운동단체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연대의 정신을 깨버리며 스스로 <존경의 대상>에서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제헌병>·<국제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2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이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결코 놀랍지 않다. 이들은 <충남>사건에 악의적으로 개입해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을 계획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으킨 아산농민회와 적극적으로 방조한 충남도연맹, 그리고 한 술 더 뜨는 전농에 대해서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러하니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눈을 뚫아 하는 식,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전농이 나서는 것을 민주노총이 경계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전농이 거드는 <코리아연대의 민중의힘에서의 연대파기안건>이 제출되어 전대미문의 황당한 <운동권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대중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가족과 함께 자결하고 만 괴벨스의 처참한 최후처럼 파쇼적인 광기, 현대판 마녀사냥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끝이 좋을 리 없다.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코리아연대의 존엄과 명예, 연대를 지키고, <운동권율>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키고, 운동권의 참된 정신과 기풍을 지키기 위하여 <충남>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고 거짓과 광기, 패권과 종파에 당당히 맞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진실의 체계적인 기록인 이 비망록의 집필로부터 정의의 편에 선 간고한 투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심정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면서, 파시즘에 맞선 반파쇼민주전선처럼 그간 종파·패권세력에 맞아 터지며 당해온 <운동권율>들의 연대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할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2014년 5월18일

<운동권갑>과 <종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준)

목차

서문	1	글	30
괴벨스식 선동에 맞서 진실을 밝힌다		1. 피해자중심주의	
개요	4	2. <인권감수성>과 <계급/정치 감수성>의 심각한 이상증세	
진실을 밝힌다 - <충남>사건과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개요		3. 민주노총충남본부 제대로 서야 한다. 제대로 할 수 있다.	
도해	8	4.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 공대위입장 반박문	
1. <충남>사건과 민주노총의 월권·매도·횡포		5. 충남민중의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성명	
2.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과 운동권갑의 2중잣대		6. 코리아충남연대해산에 부쳐	
반박	10	7.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노릇 그만하고 연대파기 철회하라!	
1. 더 이상 괴벨스식 선동은 먹히지 않는다		8.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과 황당한 <연대파기> 책임지고 전농지도	
- 충남본부성평등위의 거짓과 궤변을 폭로한다		부 총사퇴하라!	
2.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성평등위원회의 입장문>의 거짓과 왜곡		9.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등의 건	
초점	16	■ 편집해설	
진실과 정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23가지 초점		1. 미확정이라는 의미에서 사건들의 명칭 앞에 <이른바>를 붙였지만 가	
- <충남>사건과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진실		독성을 위해 글의 맨 처음 나오는 용어에 앞에만 <이른바>를 사용하였음	
일지	22	예) <충남>사건 → 이른바 <충남>사건	
<충남>사건1. 민주노총충남본부의 <마녀사냥>		2. 단체명칭을 축약하였음	
<충남>사건2. 민주노총의 <연대파기>		예) 민주노총충남본부 → 충남본부, 코리아충남연대 → 충남연대	
<충남>사건3.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과 전농의 <연대파기>		3. 자료에 실린 원문이와는 편집부의 편집원칙을 적용하였음	
Q & A	24	예) '자료집' → <자료집>	
1. <1차가해>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4. <이동근>·<김재환>사건의 사건내용은 이른바 <가해자>들의 주장이며	
2. <피해자중심주의>·<2차가해론>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인용한 것임	
3. 그냥 <사과>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5.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초점>·<Q&A>·<자료>·<글>의 내용을 서	
4. <통합진보당당기위원회>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로 비교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각주를 달았음	
5. 민주노총 성폭력대뉴얼로 본 <충남>사건의 문제는 무엇인가?		6. <글>란에 나온 글들의 강조표시는 편집자가 하였음	
6. 충남민중의힘, 왜 해산되었는가?		<개요>는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설명하였다.	
7. <충남>사건에서 왜 <중파>와 <프락치>문제가 제기되는가?		<도해>는 복잡한 사건을 한눈에 알기쉽게 도표로 설명하였다.	
8. <반코리아연대담합>은 무엇인가?		<반박>은 <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원회입장문>을 전체적·부분적으	

로 반박하는 글이다.

<초점>은 <충남>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23가지 내용을 담았다.

<일지>는 37가지 <충남>사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Q&A>는 질문·답변형식으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글>은 편집부가 추천하는 내용으로서 외부인사들의 글도 실었다.

<자료>는 성명·공문·서한·글·영상·사진 등의 자료를 풍부히 담았다.

자료

*[공문·글·성명·서한·사진·영상·음성·기사등] 시간순

2013년

- 1 충남대련 간부징계건 공지
- 2 충남대련, 아산시농민회에서 벌어진 폭력·협박사건 해결요청
- 3 충남대련, 김00사건조치에 대한 사실확인요청과 충남대련의 입장 발표
- 4 충남도연맹, 충남대련 요청서에 대해 답변
- 5 충남대련, 한지은집행위원장 폭행·협박사건 해결요청(2차)
- 6 충남대련, 아산시농민회간부의 폭행·협박사건 해결요청
- 7 한지은, 아산시농민회에서 벌어진 폭력·협박 사건에 대한 해결요청
- 8 한준혜·지영철·한지은·차상엽·남창우·한혜인·방진호, 공대위 공문에 답변
- 9 <통합진보당 충남도당당기위원회 제소장>에 관한 (1)남창우·(2)방진호·(3)지영철·(4)한준혜·(5)한지은의 소명서
- 10 <이동근>사건 당기위제출 소명서(1)
- 11 <이동근>사건 당기위제출 소명서(2)
- 12 <이동근>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입장
- 13 공대위, 충남민중의힘에 <성폭력2차기해자> 활동중지요청
- 14 충남민중의힘, <2차기해자> 활동중지요청 논의
- 15 통합진보당여성위, 당기위에 제소된 성평등강사 교육자격을 통보
- 16 또다른피해자모임, 공대위의 <활동중지요청의건>공문에 대한 입장발표와 항의
- 17 또다른피해자모임, <우리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요구서한> 발표
- 18 <이동근>사건 징계무효입장과 재심청구
- 19 공대위, 공주민협에 2차기해자목 협박
- 20 코리아충남연대·충남대련, 충남민중의힘 상임대표·집행위원장 사임요구
- 21 코리아충남연대·충남대련, 충남민중의힘 대표자회의소집요구
- 22 코리아충남연대·충남대련, 공대위소속단체들 공대위탈퇴와 사과요구
- 23 또다른피해자모임, 통합진보당충남도당 당기위원장 사임요구
- 24 또다른피해자모임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끝장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25 또다른피해자모임, 이른바 <공대위 공개입장문>에 대해 반박
- 26 성폭력2차기해남용으로 인한 인권피해사례 워크샵 음성(QR코드)
- 27 또다른피해자모임, 통합진보당 당기위결정에 대한 항의방문
- 28 충남본부, 또다른피해자모임 게시물 충남본부자유게시판에서 임의삭제
- 29 또다른피해자모임 <충남본부의 글삭제·여론차단에 강력히 항의한다>
- 30 또다른피해자모임 <운동권잡들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31 또다른피해자모임 <진보갑>
- 32 또다른피해자모임 <진보갑, 스스로를 돌아보라>
- 33 코리아연대, 충남민중의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성명
- 34 또다른피해자모임 <우리는 왜 당기위를 거부하고 탈당하였는가>
- 35 또다른피해자모임 E-Book <2차기해는 없다> 발간(QR코드)
- 36 또다른피해자모임 <우리는 왜 민주노총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가>
- 37 또다른피해자모임 <우리는 왜 <2차기해는 없다>라고 주장하는가>
- 38 공대위의 천막난입폭력 직전 기자회견
- 39 공대위, <또다른피해자모임>천막 폭력난입 (QR코드)
- 40 또다른피해자모임 <공대위의 천막파손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41 공대위, <또다른피해자모임>천막 기물파손
- 42 또다른피해자모임 <계속되는 폭력의 끝은 어디인가>
- 43 또다른피해자모임 워크샵 <민주노총 반성폭력 매뉴얼을 기준으로 본 충남 지역 성폭력사건의 문제점과 과제>(QR코드)
- 44 또다른피해자모임 <천막농성 한 달을 맞은 우리의 입장>

48

- 45 또다른피해자모임 <천막농성은 접지만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46 공대위, <충남지역내 성폭력사건 기해자 및 2차기해자> 사과지도요청
- 47 아산시농민회 박정우, 폭행건으로 벌금 30만원 판결
- 48 공대위, <충남지역내 성폭력사건 기해자 및 2차기해자> 사과지도 재요청
- 49 공대위, <2차기해매도> 스톱카식 1인시위
- 50 이동근 통합진보당 <제명무효>확인
- 51 충남본부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및 대의원명단
- 52 공대위, 노동자대회에서 피켓시위·유인물배포
- 53 또다른피해자모임 <코리아충남연대해산에 부처>

2014년

- 54 민주노총, 충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치요청
- 55 코리아연대, 민주노총공문<민주기획1108-068호>에 대한 답변
- 56 박정우, 징역4개월 판결(1심)
- 57 민주노총, 코리아연대가 요청한 간담회수락
- 58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의 간담회수락 환영
- 59 진보노동뉴스, 코리아연대 항의방문단 폭언폭행에 대한 사실확인
- 60 코리아연대, 항의방문단 폭언·폭행 사실확인 및 해당상근자 엄중문책요구
- 61 민주노총, 본지가 폭행... 코리아연대 항의방문시
- 62 코리아연대 <폭언폭행>·<연대파기> 민주노총은 각성하라!
- 63 코리아연대, 메이데이집회장에서 <민주노총 각성하라!> ... <프락치혐의자> 문제제기
- 64 민주노총조합원, 폭언·폭행사건으로 한석호·조경석 징계제기
- 65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의 <연대파기 공식안건화>와 종파적 행태에 대해 엄중경고
- 66 코리아연대, 민중의힘에 답변공문청구와 추가질의·요구
- 67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노릇 그만하고 연대파기 철회하라!> ... 민주노총규탄집회
- 68 코리아연대, 전농중앙간부와 민주노총중앙간부 간의 <반코리아연대담합> 여부 확인
- 69 코리아연대, 통합진보당최고위급당직자와 민주노총중앙간부의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 70 코리아연대, 전국여성연대중앙간부와 민주노총중앙간부의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 71 민주노총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 입장문
- 72 충남대련, (1)전농·(2)한대련·(3)전국여성연대에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 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 73 전농, 충남대련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사업중단 결정 통보
- 74 <연대파기는 <21세기판 연좌제>... 민주노총규탄촛불집회
- 75 코리아연대 <이중자대 들어대는 민주노총, 연대파기 철회하라!>
- 76 코리아연대, 전농의 한심한 <연대파기>통보에 대한 확인과 항의
- 77 코리아연대,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의 촉구 ((1)민주노총·(2)통합진보당·(3)전국여성연대)
- 78 코리아연대, 민중의힘 차기대표자회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언건상정제기

*기타

- 79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규정
- 80 <한석호, 너 프락치지?>
- 81 <그때 나만 구속되지 않은 이유들>

개요

진실을 밝힌다 - <충남>사건과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개요

사건1은 개인적인 성격의 이른바 <충남>사건이고 사건2는 조직적인 성격의 이른바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이다. 사건1-A는 이른바 <이동근>사건이고 사건1-B는 이른바 <김재환>사건이며 모두 이른바 <피해자>와 이른바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그 진위여부는 여전히 미확인상태에 있다. 사건2는 이른바 <박정우·이연재·장명진>사건으로서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사건이며 <가해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는 사건1만 다루고 사건2는 전혀 다루지않는 2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전농은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본부는 사건1을 조직적인 사건으로 왜곡·확대하고 공대위를 꾸리고 충남연대(코리아충남연대)와의 <연대파기>를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9명의 억울한 이른바 <2차가해자>가 발생하였고 충남연대는 해산하였다. 또한 충남본부는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민주노총에 제기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사건1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결정하고 나아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기하였다. 즉, 충남본부는 민주노총의 성폭력매뉴얼·규정을 위반하였고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와의 간담회합의를 위반하였다.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충남본부의 월권·매도·횡포·2중잣대는 <운동권갑>·<운동권헌병>행태라고 비난하며 민주노총·민중의힘에 <연대파기>안을 철회하든지 전농과의 <연대파기>안과 병합하라고 제기중이다.

사건들이 있다. 사건1-A·사건1-B가 있고 사건2가 있다. 사건1은 <충남>사건이라 부르고 사건2는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이라 부른다. 사건1-A는 <이동근>사건이라고 부르고 사건1-B는 <김재환>사건이라고 부르고 사건2는 <박정우·이연재·장명진>사건이라고 부른다. 모두 이른바 <가해자>의 이름을 딴 명칭이다. 사건1은 개인적인 사건이고 사건2는 조직적인 사건이다.

사건종류	사건명칭	가해자명칭
사건 1-A	<충남>사건	이동근
사건 1-B	<충남>사건	김재환
사건 2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	박정우·이연재·장명진

<이동근>·<김재환>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고 <박정우·이연재·장명진>사건은 조직적인 사건



<이동근>사건(2012.10.23)은 성인남녀간에 벌어진 사건이고 <김재환>사건(2012.8.30)은 남녀대학생간에 벌어진 사건이다.^{초점1} 이 사건을 성폭력사건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진실공방중에 있다. 왜냐하면 사건1-A는 이동근과 술을 먹은 이른바 <피해자>가 이동근이 사는 아파트에 왔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일체 고의가 없었다고 이동근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료10-11} 또한 사건1-B는 두차례 뒤풀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서로의 호감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강제는 아니었다고 김재환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Q&A2}라는 <원칙>하에 한쪽주장만 듣고 <가해자>로 규정짓고, 충남본부·공대위가 노동자대회에서까지 실명을 넣은 유인물을 배포하며^{자료52} 규탄하는 최대의 <성폭력>사건이 되었다.

상식적으로 진작 종결되었어야 했던 <이동근>·<김재환>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근은 대안경제센터의 부대표이자 노동연대 실천단장이었고, 김재환은 충남대련의 간부였기 때문에 해당단체는 사건을 조사하고 엄격하게 징계조치하였다.^{초점3} <1차가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만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동근은 사건직후 모든 직위가 해체되고 총화기간을 가졌고 김재환은 총화하고 역시 직위가 해제되었다.^{자료1} 따라서 이때부터 이동근과 김재환은 대안경제센터와 이 단체 등이 가입한 연대체 충남연대(코리아충남연대)와 충남대련과의 조직적인 관련이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충남대련은 코리아연대와 전혀

무관한 조직이다. 또한 두사건의 <피해자> 모두 충남연대와 충남대련에 어떠한 호소나 제기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때 사건이 종결되었어야 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철저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지 <가해자>가 단체의 직위를 이용해 벌인 조직적인 사건이 아닌 만큼, 개인적인 사건이 조직적인 사건으로 둔갑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훨씬 심각하나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박정우·이연재·장명진>사건

하나 <박정우·이연재·장명진>사건(2013.1.6)은 철저히 조직적인 사건이다. 박정우는 아산농민회사무국장직위를 이용해 충남대련의 한지은집행위원장과 김재환간부를 농민회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박정우아산농민회사무국장이 김재환을 난타하였고, 이를 말리는 한지은의 가슴을 두번 손으로 밀쳤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 그리고는 박정우는 한지은·김재환에게 금품지급각서를 요구하고 이연재에게 받아적게 하였다. 폭력이 벌어지는 장시간 장명진충남도연맹부의장은 사건현장을 지켜보며 묵인방조하였다. 사건1에 비해 사건2는 (1) 직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 당시 한지은은 충남본부에 사건해결을 호소·제기하였는데 충남본부는 <단순폭력>이라며 외면하였다. 오히려 충남본부장 최만정은 충남민중의 힘출범식(2013.2.6.)에서 한지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우에게 건배사까지 하게 하였다. 결국 한지은·김재환의 제소로 법정에 선 박정우는 30만원 벌금(2013.10.2)^{자료47}·4개월실형선고(2014.2.27)를 받았으나^{자료56}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연재도 제재를 받지않았고 장명진은 오히려 충남도연맹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충남도연맹은 적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통고(2013.1.28)^{자료4}하였고 전농은 코리아연대에 5개월전에 <연대중단>을 결정하였다는 황당한 누장통고(2014.5.15)^{자료73}를 하였다.

민주노총의 성폭력규정^{자료79}을 위반한 충남본부와 문서보고 없이 구두로 통과된 대의원대회

한편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와 민주노총은 모두 사건1만 문제를 삼고 있고 사건2는 거론조차 한 적이 없다.^{초점7} 특히 사건1을 알아보는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2차가해자>로 몰아 정치생명을 끊어버렸다.^{초점9} 하루아침에 이 <2차가해자>라고 하는 성폭력범이 된 활동가중에는 대학시절 총여학생회장을 한 이래 근 20년간 여성운동을 한 사람도 있다. 나아가 이 <2차가해자>들이 관련된 대중단체들과 그 연대체인 코리아충남연대를

(2013.11.8)해산^{자료53}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충남본부는 민주노총의 성폭력매뉴얼^{자료43}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며 필수요건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 충남본부는 문서보고나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이 대의원대회에서 사건1을 다루며 <연대파기>의 결정을 내렸다(2013.10.23).^{초점14} 한마디로 충남본부는 민주노총의 성폭력매뉴얼·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대의원들까지도 기만한 것이다. 심지어 충남본부는 이 직전에 충남대련 등의 문제제기를 빌미로 삼아 황당하게도 충남민중의힘을 해산하기까지 하였다(2013.7.3). Q&A6

중집결정을 사실상 위반한 민주노총

충남본부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민주노총여성위가 접수하고 민주노총중집에서 논의해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에 요구하며 사실상 협의조건부로 <연대파기>하고 나아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11.21).^{자료54} 이에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에 간담회를 제의하였고 민주노총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코리아연대는 수락환영공문을 보냈다(2014.3.11). 그러나 민주노총은 첫문장에 명백히 수락을 환영한다고 한 답변공문^{자료58}을 황당하게 오독하면서 코리아연대가 간담회를 반대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간담회약속을 깨버렸다. 코리아연대의 간담회제의를 민주노총이 수락하며 서로 공문이 오고간 것을 <협의>라고 부르지 뭐라 부르겠는가. 결국 민주노총은 <협의조건부중집결정>을 사실상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초점17}

<운동권갑>인 민주노총·충남본부의 월권·매도·횡포·2중잣대

민주노총이 충남본부의 제기를 받아 사건1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와 <연대파기>하고 나아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한 것은 (1) 개인적인 사건을 조직적인 사건으로 분별없이 확대한 것이고 (2) <피해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결정한 것이고 (3) 충남본부가 진상조사위구성이라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대의원대회에서 대충설명을 하며 통과시킨 안대로 한 것이고 (4) 민주노총중집이 스스로 내린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코리아연대와의 간담회합의를 깨버린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총과 충남본부가 저지른 월권행위이고 매도행위이며 폭력적 횡포이다. 더욱이 민주노총과 충남본부·성평등위는 사건1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2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며 전형적인 2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충남본부는 <사회적갑>과 본질상 차이가 없는 <운동권갑>으로서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초점18}

<운동권갑>인 민주노총·충남본부의 폭언·욕설·폭행

또한 <2차가해자>들이 <또다른피해자들모임>을 구성하고 충남본부 앞에 항의천막농성을 벌였을 때, 충남본부간부들이 농성장에 와서 폭언·폭행을 하고 집기를 부셔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2013.7.18~19).^{자료39·40·41} 그리고 코리아연대의 항의방문단이 민주노총에서 사무총장을 만나는 도중 사무실에서 마냥 기다리라고 하기에 이에 목소리를 높여 방문목적을 밝혔더니, 한석호사무부총장은 폭언·욕설을 하고 조정석상근자는 앞발차기로 취재중인 진보노동뉴스기자를 폭행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2014. 4.22).^{자료61} 민주노총·충남본부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회적갑>과 본질상 차이가 없는 <운동권갑>이라는 징표중 하나이다.

합리적 의혹이 있는 이연재와 스스로 프락치가 아니라는 한석호

사건1-B와 사건2와 겹치는 이연재는 <김재환>사건을 사건화하지 않겠다던 <피해자>를 움직여 사건화하였고 사건2의 가해자를 적극 방조하였는데,^{초점4} 과거 군복무중 국가보안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주 휴가를 나오는 등 합리적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사건1을 빌미로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와 <연대파기>를 하고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고 항의방문단에 폭언·욕설을 한 한석호는 과거 민주노동당분당사태를 기획한 장본인이고 스스로 프락치가 아니라는 글^{자료80·81}을 발표한 수상쩍은 인물이다.^{초점20} 일반적으로 운동권내에 심각하고 황당한 분열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프락치의 배후조종·선동과 이에 종파·패권·기회주의세력들의 부화뇌동이 있다.

<공대위>라는 괴물을 만든 충남본부

사건1에서 <이동근>사건의 <피해자>는 5개월동안 아무런 제기가 없다가 충남본부에 사건을 제기하였다(2013.2.1). 사건이 접수되고 며칠 뒤에 <이동근>사건회의를 진행하고(2013.2.6), <가해자>로 규정하기 이전에 이동근에게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 <피해자>가 노동자나 노동조합원이 아니며 충남본부나 민주노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충남본부는 사건을 접수하였고 나아가 평소 연대를 자주하는 지역단체들을 끌어들여 공대위를 구성하였다(1차회의, 2013.4.2). 그리고 거의 동시에 통합진보당에 제소하였다(2013.4.3). <김재환>사건의 <피해자>는 사건공개를 원하지 않았으나 이연재와 공대위의 추동과 방조로 충남본부에 사건이 접수되고(2013.4.10),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두사건은 충남본부가 주도하는 공대위를 통해 합쳐졌다.^{초점6}

모든 대화를 거부한 충남본부

충남본부는 당기위판결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가해자〉·〈2차가해자〉로 낙인하였고 모든 실명을 충남민중의힘회의에 유포하고 각종회의를 통하여 매도하며 충남운동권사회에서 고립시켰다.^{자료12} 한마디로 〈가해자〉2명과 〈2차가해자〉9명은 성폭력범으로 매도되어 충남운동권사회에서 고립되며 정치생명이 끊긴 것이다. 〈2차가해자〉9명은 충남본부와 공대위소속단체들을 찾아가 항의하며 간담회를 요구^{자료8}하였지만 어떤 대화도 거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대위소속단체들은 사건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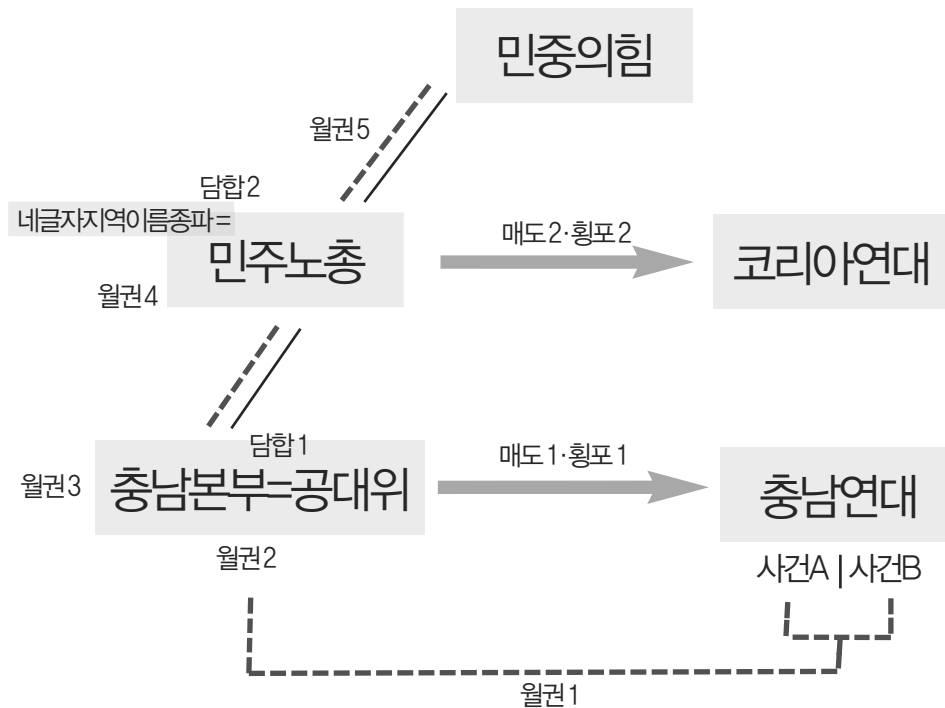
지역이름네글자로 불리는 종파세력의 등장

코리아연대는 코리아서울연대가 서울진보연대에 가입한 후 일관되게 한국진보연대가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의 반대로 한국진보연대의 가입이 유보되었다(2013.4.30).^{자료70} 최진미집행위원장은 전국여성연대에서 코리아연대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전농·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연대·통합진보당 등을 장악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지역이름네글자로 불리는 종파세력이 민주노총내종파세력과 담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자료68-69-70}

민중의힘은 코리아연대건과 전농건을 병합하는가

마치 충남에서 충남본부·충남도연맹·충남도당(통합진보당충남도당) 등이 그러했듯이 민중의힘대표자회의가 열리게 되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사실상 제명징계)안건이 상정되게 되었다. 코리아연대는 이 〈연대파기〉안건의 부당성을 밝히며 안전상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이 안전을 다루어야 한다면 반드시 민중의힘에서 전농의 〈연대파기〉안전도 병합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공문^{자료78}을 민중의힘에 발송하였다(2014.5.14). 그리고 코리아연대는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 연대원칙을 지키고 운동대오를 쫓고 있는 패권·종파세력의 전횡과 불의에 맞서기 위하여 강력한 반패권·반종파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도해1. <충남>사건과 민주노총의 월권·매도·횡포



이른바 <이동근>사건은 코리아연대직위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고, 이른바 <김재환>사건은 코리아연대와 완전히 무관한 사건이다. <이동근·김재환>사건의 이른바 <피해자>·<가해자>는 민주노총조합원도 아니고 민주노총과 전혀 무관하다.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는 <이동근·김재환>사건을 악의적으로 묶어서 공대위를 구성한 후 충남연대(코리아충남연대)를 <성폭력·2차 가해집단>으로 매도하고 욕설과 폭언, 천막난입난동, 기물파손 등의 횡포를 부렸다.

충남본부는 공조직체계를 이용하여 운영위결의(2013.7.12.)·대의원대회결의(2013.10.23.)로 충남연대(코리아충남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결정하는 월권을 행사하였다.^{초점14}

충남본부는 다른지역단체와 사전담합하여 충남민중의힘 해산을 주도하였다(2013.7.3). Q&A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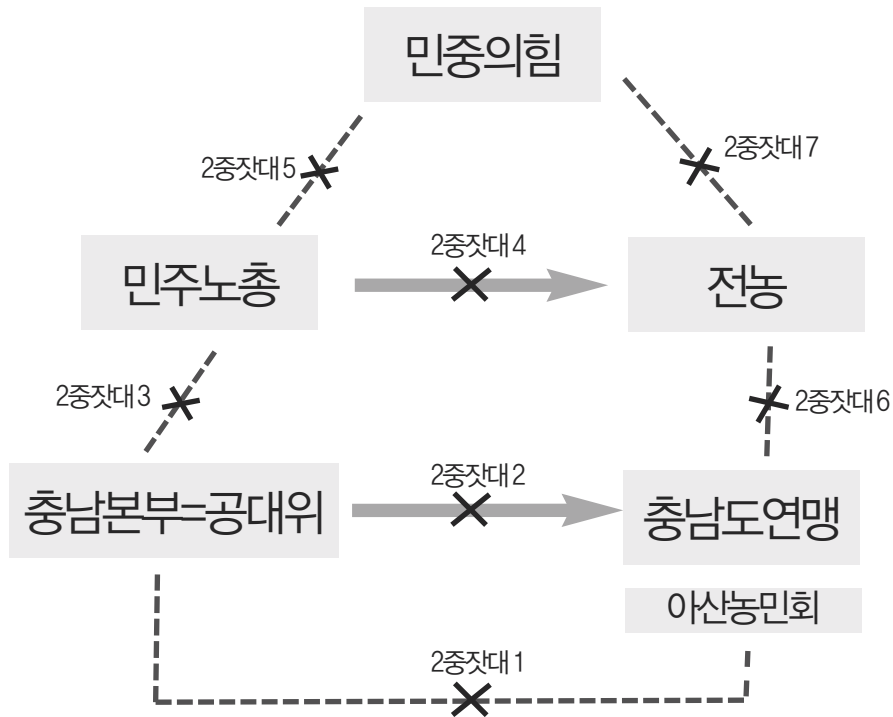
충남본부는 <연대파기>안을 민주노총여성위에 상정시켰고,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코리아연대와의 조건부<연대파기>를 결정(2013.11.21)하였다.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와의 간담회합의를 깨고 〈연대파기〉결정을 산하조직에 지시하고, 민중의힘에 〈연대파기〉제기하였다. 이에 사실확인
과 항의를 전달한 코리아연대방문단과 취재기자에 폭언·폭행하였다.^{자료61}

민주노동당내종파세력은 민중의힘주요소속단체를 장악한 종파패권세력과 담합하며 코리아연대를 민중의힘에서 고립·제거하고 한국진보연대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초점23}

민주노총과 전혀 무관한 사건에 개입(월권1),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공대위 결성(월권2), 충남연대를 <성폭력·2차가해집단>으로 공격(매도 1·희포1), 충남연대와의 <연대파기>를 충남본부운영위·대의원대회에서 의결(월권3), 충남민중의힘 해산(담합1), 민주노총충중집에서 <연대파기>결정(월권4),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 지침(매도2), 항의방문단에 폭언·폭행(희포2), 민중의힘에 <연대파기> 제의(월권5), 민주노총내총파세력과 민중의힘소속주요단체장안중파권세력간의 코리아연대고립·제거책동(담합2).

도해2.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과 운동권갑의 2중жат대



이른바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은 아산농민회사무국장이 충남대련여성간부를 사무실로 유인하고 가슴부위를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폭력·공갈사건이다. 사건현장에서 목인·방조한 1인이 현충남도연맹의장이고, 사건을 알면서도 무시한 1인이 현전농의장이다.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는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에 대해 <단순폭력>이라 규정하고 <피해자>의 해결요청(공대위구성)을 거절하였다(2중жат대1).

충남본부는 충남연대(코리아충남연대)·관련단체들을 매도하고 공격한 데 비해 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에 어떠한 지적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2중жат대2).^{초점7}

운동권갑들은 충남민중의힘출범식에서 <가해자>에게 건배사를 맡기며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

충남본부는 충남연대에 한 것처럼 중앙위·대의원대회에서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에 제기하지도 않았다(2중жат대3).

민주노총은 <충남>사건을 빌미로 산하조직에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지침을 내렸는데 비해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2중жат대4).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에 한 것처럼 전농에 <연대파기>공문을 발송하지도 않았고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지도 않았다(2중жат대5).

전농은 <충남>사건에는 민주노총을 따라 코리아연대를 징계하겠다고 하면서도 산하조직인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간부들이나 충남도연맹의 책임에 대하여는 일체 징계는커녕 언급조차 없다(2중жат대6).

전국여성연대집행위원장 최진미는 개인입장으로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을 반대하는 월권행위를 부린 반면,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과 관련해 전농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제재제의를 한 사실이 없다(2중жат대7).

<운동권갑>들은 자신들 단체와 전혀 무관한 <이동근>·<김재환>사건 개입, 그것을 빌미로 코리아연대를 <성폭력>·<2차가해집단>으로 매도하고 대의원대회·중집 등의 권위를 악용하여 <연대파기>를 민중의힘에까지 제의하는 월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심각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은 <단순폭력>으로 왜곡하고 외면하며 코리아연대에 한 것처럼 충남도연맹·전농과의 <연대파기>를 대의원대회·중집에서 결정하지 않았으며 민중의힘에 <연대파기>제 의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충남본부·전농과 전국여성연대집행위원장의 2중жат대와 담합행위는 운동권을 장악한 종파·패권세력의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연대를 고립·제거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초점23}

반박

1. 더 이상 괴벨스식 선동은 먹이지 않는다 – 충남본부성평등위의 거짓과 궤변을 폭로한다

2.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성평등위원회의 입장문>의 거짓과 왜곡

우리는 묻는다. 과연 이른바 <가해자A>와 <가해자B>가 코리아충남연대와 무관하였어도 이렇게까지 마녀사냥을 하였겠는가. 구체적으로 <가해자A>가 최만정충남본부장이나 장명진충남도연맹의장의 하수인이거나 <가해자B>가 이연재전아산농민회총무부장의 추종자였다면 이처럼 괴벨스식 선동을 하였겠는가. 이 광기어린 선동집단의 몸에 밴 2중잣대는 이들이 <충남>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에는 일체 눈을 감고 지난 1년4개월동안 <공대위>결성은커녕 단한사람도 문제삼지않았다는 사실로도 명백히 확인된다. 네가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이들의 2중잣대는 마치 미국이 북코리아를 고립시키는데 써 먹었던 방식과 똑같이 악용되고 있다.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희생자인 충남대련의 여성집행위원장이 성평등위에 전화해 이 사건도 다루어달라고 하였을 때, <단순폭력>이라고 무시해버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가 <단순폭력>이 되었는가. 또한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위와 충남본부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충남>사건의 본질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코리아충남연대와 나아가 코리아연대를 운동권에서 고립·제거하기 위한 종파·패권 세력의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해준다.

1. 더 이상 괴벨스식 선동은 먹히지 않는다

– 충남본부성평등위의 거짓과 꾀변을 폭로한다

〈운동권잡〉과 〈종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준), 2014.5.18

[편집자주] 〈민주노총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의 입장문〉 원문은 자료71번에 있음

히틀러의 선전상, 나치의 선동이 괴벨스의 어록을 실천하는 자들이 있다. 노동계급의 대중단체를 장악한 후 뽀퍼부르주아사상인 페미니즘을 설파하다 못해 이제는 파쇼적인 집단의 광기를 품어대고 있다. 〈피해자중심주의〉^{Q&A2}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말 = 진실〉이라는 거짓 소식을 만들어놓고 황당한 〈2차가해자〉^{추정}들을 양산하며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관철하는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 〈사회적잡〉과 싸우다 어느새 〈운동권잡〉이 되어버린 이 〈일그러진 초상들〉이 이제는 괴벨스를 닮아가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운동의 대의를 훼손하고 운동권을 분열시키며 박근혜파소집단을 이롭게 하고 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된다.〉(괴벨스)

성평등위(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원회)는 〈평등〉이란 이름을 달 자격이 없다. 이들이 발표한 〈5.13입장문〉을 보면, 한사람의 인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단죄하는 마녀사냥식 문장으로 시작한다. 한사람의 일생을 벼랑끝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주홍글씨〉를 함부로 찍어대는 이들이야말로 〈평등〉은커녕 〈인권〉을 운운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중앞에 〈B는 마녀다〉라고 던지는 거짓말이 되풀이되면 결국 대중은 믿게 된다고 한 괴벨스의 후예들에게 그 이른바 〈가해자B〉가 당신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법정에서 세울 것임을 미리 알린다. 가급적 운동권내의 일을 법정으로 끌고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괴벨스식 거짓선동의 실체를 낱알이 밝힐 수 있는 방법중 이것이 가장 빠르고 유일한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하여 확인한다.

성평등위와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 민주노총, 그리고 최근에 부각된 전농은 모두 소중한 우리민중의 대중단체들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을 장악한 종파세력들이 월권·매도·횡포에서 조폭을 능가하고, 〈국제헌병〉·〈국제경찰〉짓을 자임한 미국처럼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이 되어 〈잡질〉을 해대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까지 느끼게 된다. 〈사회적잡〉과 싸우다 〈운동권잡〉이 되어버려 마치 〈사회적잡〉이 〈사회적적〉의 〈공공의 적〉이 되듯이 어느새 〈운동권적〉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이 가련한 존재들을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와버렸다. 〈현장이 무너진 자리에 종파의 독버섯만 자란다〉고 무성히 자라버린 〈종파의 독버섯〉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운동권이라는 온몸에 퍼지고 있는 〈종파의 암세포〉들을 수술하지 않는다면 결국 운동대오를 산산히 분열시켜 진보운동을 끝없이 후퇴시킬 것임을 역시 이 자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억지와 무지는 끝이 없다. 이들이 코리아충남연대를 사실상 해산시키고도 모자라 이제는 코리아연대를 끌어대어 〈주홍글씨〉를 찍어대는 것을 보면 마치 극우반동단체들의 〈종북〉소동을 보는 것 같아, 그 배후에 프락치가 있지 않나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코리아연대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급서시에 자신의 공동대표를 방북시켜 조문하며 6.15공동선언·10.4선언의 대의를 확인하고는 끝내 남코리아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일한 단체이다. 코리아연대와 그 가입단체들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여년을 한결같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진실을 밝히는 선전사업을 펼치고 진보운동의 불모지와 같은 국제연대를 개척하며,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반파쇼투쟁과 반전반미투쟁을 헌신적으로 벌여왔다. 하여 코리아연대를 없애려는 박근혜파소집단처럼 〈파쇼적 광기〉·〈마녀사냥의 광기〉·〈맥카시적 광기〉를 부리며 괴벨스식 선동을 일삼는 이들의 정체를 프락치가 아니라면 그에 놀아

나는 종파가 아닌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코리아연대의 회원이 아닌 사람을 회원이라고 왜곡하고 기어코 코리아연대에 붉은글씨를 덧씌우려고 이토록 애를 쓰겠는가. 이 광적인 집단의 분별없는 행동을 일반화한다면,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주범과 방조범들로 인하여 충남도연맹, 전농은 말할 것도 없고 전농이 가입된 민중의힘이나 비상시국회의, 원탁회의도 모두 성폭력집단으로 단죄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왜 그들은 민중의힘회원이나 비상시국회의회원, 원탁회의회원이 아니란 말인가. 단일조직과 연대조직의 차이도 모르고 본질적 연관과 비본질적 연관을 구별할 줄 모르는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에 닥친 해일이 이집트 피라미드위에서의 나비 짓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우기고도 남을 부류들이다.

코리아연대는 운동권내에서 단한번도 패권을 다투거나 자리다툼을 벌인 일이 없다. 당과 단체, 전선의 주도권을 장악할 기회가 있었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직 진보운동이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영역을 개척하는 일만 오직하게 해왔다. 그런 코리아연대와 그 가입단체의 활동을 <사회적갑>의 파쇼적 공권력이 탄압하고 <운동권갑>과 <종파>가 끈질기게 휘방하였다. 코리아연대는 이 두방향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보면서 파쇼적인 독재정부와는 결연히 투쟁하였지만 <운동권갑>과 <종파>의 방해책동에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운동권갑>과 <종파>는 이른바 <충남>사건을 확대조작해서 코리아충남연대를 해체시키고는 나아가 코리아연대를 파괴하려고 날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권갑>과 <종파>들의 책동에 맞서기 위하여 코리아연대가 반패권·반종파의 기치를 들고 일대사상전을 벌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묻는다. 과연 이른바 <가해자A>와 <가해자B>가 코리아충남연대와 무관하였어도 이렇게까지 마녀사냥을 하였겠는가. 구체적으로 <가해자A>가 최만정충남본부장이나 장명진충남도연맹의장의 하수인이거나 <가해자B>가 이연재전아산농민회총무부장의 추종자였다면 이처럼 괴벨스식 선동을 하였겠는가. 이 광기어린 선동집단의 몸에 밴 2중жат대는 이들이 <충남>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초점7}에는 일체 눈을 감고 지난 1년4개월동안 <공대위>결성은커녕 단한사람도 문제삼지않았다는 사실로도 명백히 확인된다. 네가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이들의 2중жат대는 마치 미국이 북코리야를 고립시키는데 써먹었던 방식과 똑같이 악용되고 있다.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희생자인 충남대련의 여성집행위원장이 성평등위에 전화해 이 사건도 다루어달라고 하였을 때, <단순폭력>이라고 무시해버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가 <단순폭력>이 되었는가. 또한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

을 요구하고, (6) 성폭행·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위와 충남본부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충남>사건의 본질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코리아충남연대와 나아가 코리아연대를 운동권에서 고립·제거하기 위한 종파·패권세력의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해준다.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섞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괴벨스)

우리는 <입장문>의 곳곳에 박혀 독기를 뿜어대는 거짓말들에게서 진보운동을 분열시키고 견결하게 투쟁하는 동지들을 모해하는 남코리아내 괴벨스식 선동들을 본다. 이들에게는 (1) 이들이 <2차가해자>들에게 <활동을 중단하라고 한 강박>은 <자제해달란 요청>으로, ^{반박2-3초점12} (2) <반박하며 거부한 답변>은 <어떤 답변도 없던> 것으로, ^{반박2-4자료16} (3) 통합진보당의 <당기위에 임한 조사>는 <단한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반박2-5초점11-Q&A3} (4) <가해자>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거나 사과하고싶다>고 한 것은 <아무런 사과도 없는> 것으로, ^{반박2-8초점11-Q&A3} (5) <코리아연대가 먼저 하였고 민주노총이 동의하였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간담회>는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가 간담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파기한 것으로, ^{반박2-10초점17} (6) <코리아연대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사무총장과 면담도중 일방적으로 대기시키며 모욕한 데 대하여 항의하며 목소리 높여 방문 목적을 밝힌 것>은 <충연맹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반박2-11초점9} 속이고 뒤집는데 대하여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 1년여동안 줄기차게 이런 식의 뻘뻘스러운 거짓과 왜곡을 일삼을 수 있다는 말인가. 괴벨스도 이들 앞에서는 낫을 붙이며 고개를 숙일 정도이다. 우리는 이 <입장문>이 100%로 거짓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는 것이 아니라 1%의 진실에 99%의 거짓을 섞는 그 이유가 과연 무지해서인지, 철면피라서 그런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한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하였다. 충남본부와 성평등위, 민주노총이 활동가도 아니고 조합원은 더더욱 아닌 두 여성을 <피해자A·B>라며 <가해자A·B>를 평생 명예를 지고 살 <성폭력범>으로 낙인하고 수많은 <2차가해자>들을 양산하였다면, 왜 충남대련의 여성활동가를 성폭력·폭력·협박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주범·방조범들에 대하여는 단한마디 비판도 없었는지에 대하여 똑똑히 대답하여야 한다. <가해자A·B>의 인권, <2차가해자>들의 인권, 충남대련 여성활동가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더구나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은 누가 보아도 훨씬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고 반운동적이지 않은가. <운동권헌병·경찰>노릇을 하려면 적어도 2중жат대는 없어야 한다. 당신들의 세치 혀는 절대로 <인권>과 <공정성·형평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결국 이 <충남>사건의 본질은 <종파·패권세력>·<운동권잡>은 더러운 종파적 야욕^{초점22·23}에서 비롯된 <21세기 마녀사냥>·<신맥카시즘>으로서 <사회적잡>·파쇼세력과 싸우다 그 <파쇼적 광기>가 몸에 밴 <운동권잡>의 <막장드라마>일 뿐이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괴벨스)

어찌 이리 딱 들어맞는가. 다만 우리는 <입장문>이라는 <한문장의 선동>을 반박하는데 필요한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밤을 새며 노력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운동권잡의 파쇼적 광기>에 맞서 희생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적잡의 횡포와 광기>에 맞서 운동을 시작하였듯이 <운동권잡의 횡포와 광기>에 맞서 싸우는 것을 영예롭게 여긴다.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종파·패권세력의 독버섯·암>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아니 일정한 타격을 가하며 운동권내 혁신과 정풍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수십장>이 아니라 <수백장>·<수천장>을 만들어서라도 <운동권잡>의 <광기>에 의하여 <주홍글씨>가 찍힌 그 <가해자>·<2차가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운동의 대의와 코리아연대의 연대원칙을 지킬 것이다.

괴벨스는 결국 가족들과 함께 비참히 자살하고 말았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2.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성평등위원회의 입장문>의 거짓과 왜곡

<운동권잡>과 <종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준), 2014.5.18

[편집자주] <민주노총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의 입장문>원문은 자료 71번에 있고, 초점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23가지 초점>임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가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평등위(민주노총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의 입장문은 교묘하게 거짓과 사실을 배합하여 사건의 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성평등위의 거짓과 왜곡을 일일이 지적한다. 아래에서 각항의 앞단락은 성평등위입장문이고 뒷단락은 우리의 반박이다.

1. <한0혜는 당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자 대안경제센터 이사였으며 한0은, 한0인, 남0우, 방0호 역시 코리아연대회원이었다>

→ 한0혜는 대안경제센터고문이고 나머지 모두는 충남대련(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소속의 대학활동가들이지 코리아연대의 회원이 아니다. 코리아연대로 돌아가기 위한 의도적이고 교활한 거짓말이다.

2. <두사건의 모든 가해자와 2차가해자들이 당시 통합진보당당원이었던 관계로 통합진보당에 성폭력제소가 접수됨에 따라 충남지역에서는 두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지게 되었다>

→ 마치 합리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정확한 사실은 당기위제소전에 이미 공대위가 구성되었다.^{초점6}

3. <이후 공대위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통합진보당에서 사건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역내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 실제로는 요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강박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통합진보당당기위의 제소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기위와 협력하며 제소결과가 무조건 <가해자>·<2차가해자>로 나오도록 관철시켰다.^{초점8·10}

4. <활동자제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

→ 이른바 <2차가해자>들이 활동정지강압에 대해 충남본부와 공대위소속단체들에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였을 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너희는 2차가해자이고 범죄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였다. 즉 어떤 답변도 없고 대화도 거부한 것은 공대위측이다. 양측이 주고받은 수많은 항의공문·서한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준다.

5. <이동근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단 한차례도 통합진보당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김재환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단 한차례의 대면조사에 응했을 뿐이었다>

→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른바 <이동근>사건의 연루자들은 당기위원회의 합법적 절차인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며 이른바 <김재환>사건의 연루자들도 당기위가 제시한 대면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초점11-Q&A4}

6. <그 외 <또다른피해자모임>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 각종 회의에서 사건을 확대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은 오히려 충남본부와 공대위측이다. <또다른피해자모임>은 충남본부와 공대위측이 먼저 시작한 일방적인 매도에 대응하여 <2차가해자>가 아님을 호소한 것이다.^{자료36}

7.〈민주노총충남본부장, 조직부장, 교육부장 및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자행하였다〉

→ 이는 정치생명을 끊어놓을 정도로 치명적인 〈2차가해자〉, 〈성폭력법〉으로 만들고는 실명을 공개하고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무차별적으로 확대·유포하는 것을 막고 객관적인 진실을 법정에서라도 명백히 밝히자고 한 최소한의 자위적인 조치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평화적인 천막농성장에 난입하여 천막을 찢고 온갖 욕설과 폭력적 위협을 가하고^{자료39}, 충남본부 자유게시판의 글을 임의삭제^{자료28,29}하며,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외부인사마저 욕설과 폭력적 위협으로 대응했다^{자료2}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8.〈민주노총충남본부는 2013년 7월12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폭력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이 하루 속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열사투쟁을 하는 동안에도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 천막농성을 지속했다〉

→ 운영위원회회의결과는 들어본 적도 없고 〈가해자〉·〈2차가해자〉들은 분명히 도의적 사과를 하였다.^{초점11}

9.〈민주노총충남본부는 수차례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이고 도의적인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

→〈이동근〉·〈김재환〉사건의 관련자들은 이미 사건초기에 도의적 사과를 하였으며 심지어 〈김재환〉사건의 〈2차가해자〉들은 당기위대면 조사과정에서 얼굴을 알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도의적 사과를 하였다.^{초점11, Q&A3}

10.〈이에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가 간담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기발송한 공문에 따라 중집 결정대로 집행을 진행하자〉

→ 명백한 거짓·왜곡이다. 오히려 코리아연대는 답변공문^{자료58}의 첫 문장에 명백히 드러나듯이 민주노총의 간담회수락을 환영하였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수락공문의 내용을 오독하거나 임의로 해석해 코리아연대가 간담회를 거부하였다고 흑백을 전도하였다. 민주노총은 간담회를 깨버리면서 그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아서 코리아연대는 계속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기까지 하였다. 결국 민주노총은 간담회 약속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협의조건부인 중집결정까지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초점7}

11.〈코리아연대는 역시나 충남지역의 성폭력사건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총연맹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 정당한 면담요청이 잠시 받아들였다가 이내 무시되자 이에 항의하여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 어떻게 난동인가. 요구사항을 외치면 먹살을 잡고 온갖 욕설과 폭언·폭행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이

를 취재하는 기자를 앞발차기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은 무엇으로 변명되겠는가.^{초점19}

12. 성평등위는 〈성폭력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사고는 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악질적인 가해자와 그런 가해자를 지지하는 집단과의 연대는 과감히 파기해야 한다〉

→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적이 없다. 코리아연대는 이른바 〈충남〉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지지한 적이 전혀 없다.^{초점2-3, Q&A3}

초점

진실과 정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23가지 초점

- <충남>사건과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진실

1. 철저히 무시된 이동근·김재환의 주장
2. <<1차가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
3.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취해진 징계조치
4. 이연재는 왜 <김재환>사건을 만들고 부풀렸는가
5. <운동권잡>에 줄섰다면 터졌을 사건인가
6. **충남본부가 개입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7. **충남본부가 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을 다루지 않는가**
8. **충남도당당기위와 충남본부·공대위는 한몸?**
9. <피해자>의 얼굴도 모르는 <2차가해자>들
10. 당기위원장과 충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의 겸임과 월권
11. 과연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가
12. 충남본부의 몸에 밴 폭언과 폭력행사
13. 충남민중의힘 강제해산과 사전담합
14. **충남본부, 임시대의원대회 참석한 대의원들 기만**
15. <운동권잡>들의 몸에 밴 폭력근성
16. 스토크를 방불케하는 충남본부의 행동들
17. **민주노총, 사실상 협의조건부인 중집결정과 코리아연대와의 간담회합의마저 파기**
18.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인가
19. 항의방문에 욕설·폭언·폭행으로 화답한 민주노총
20. 스스로 프락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석호
21. 전농, <연대파기>결정을 5개월만에 통고
22.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을 반대한 전국여성연대집행위원장
23. 종파·패권세력의 <반코리아연대담합>의혹

1. 철저히 무시된 이동근·김재환의 주장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는 모든 사건을 <성폭력>으로 통칭하는 편협한 여성주의적 기준과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성폭력>하면 <강간>이라고 인식되는 정서를 악용하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가치판단의 자유를 철저히 가로막으며 나치선동가 괴벨스식 선동, 마녀사냥식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근>사건은 이동근과 단둘이 술을 먹은 이른바 <피해자>가 이동근의 아파트에 왔다가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른바 <피해자>가 먼저 카톡대화를 시작하며 그날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둘은 오픈된 공간에서 술을 먹었고 막차시간을 본인이 지키지 않고 있다가 잘못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암묵적 동의로 느꼈다고 이동근이 정황상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자료10-11} <김재환>사건은 2011·2012년 두차례 모두 뒤풀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서로의 호감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강제는 아니었다고 김재환이 주장하고 있다.

2. <1차가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

이 사건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코리아연대와 그 관련단체들에 <그럼 <1차가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댄다. 1항에서 언급되었듯이, 사실인식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고 진위공방이 만만치 않게 진행중이다. 또한 이 <1차가해>를 인정하는 순간 평생 <성폭력범>의 족쇄를 차고 다니고 정치생명이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 중대사건인 만큼 그 판단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가해자(이동근)>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런 조건에서 코리아연대들 관련단체들 어떻게 <1차가해>를 함부로 인정하고 판단하며 단정지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1차가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차가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Q&A1}

3.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취해진 징계조치

코리아연대와 그 관련단체들은 결성된 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여 년동안 이런 류의 이른바 <성폭력>사건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런 단체들인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이 사건을 대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매우 엄격하였다. <1차가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만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다.^{자료9} 구체적으로 <이동근>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엄중히 총화하였고 <김재환>도 역시 충남대련에서 총화하고 해임되었다. 나아가 이 두사람은 모두 관련단체에서 탈퇴하였다.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단체안에서 이렇게 매우 신속하고 아주 엄격하게 처리된 예를 알지 못한다. 코리아연대와 그 관련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제명징계를 내리는 원칙을 세웠고 그런 전제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신속하고 강력히

취해진 조치에 대해 충남본부(공대위)측은 꼬리자르기란 비난을 하는데, 과거 충남본부간부 김00사건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최만정·오은희 등은 남녀간문제라면서 자유주의적 연애이지 성폭력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서야 간부직에서 해임되었다. 한마디로 직위해제를 두고 꼬리자르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4. 이연재는 왜 <김재환>사건을 만들고 부풀렸는가

<김재환>사건의 이른바 <피해자>는 원래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고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핵심방조자인 전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가 <피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사건에 개입한 이후부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동근>사건과 결합되어 부풀려졌다. 이연재는 <김재환>사건의 당일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맞추며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니네 뭐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다. 만약 이연재가 두사람의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았으면 그 즉시 문제제기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제지하였어야 하였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연재에게도 둘은 자발적 연애감정으로 보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바로 이사건이 8개월이 지나 충남을 뒤흔든 <성폭력>사건으로 되었다.

5. <운동권잡>에 줄섰다면 터졌을 사건인가

충남의 <운동권잡>은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 상의하지>라는 말을 하였다. 사건의 본질을 성폭력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상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이 코리아충남연대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직위를 이용해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여성간부의 가슴을 두번이나 손으로 밀치며 허벅지를 발로 차며 500만원 금품까지 강요한 성폭력·폭력·공갈사건인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 <박정우·이연재·장명진>사건은 왜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가. 가해자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실행까지 신고받은 박정우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연재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장명진은 오히려 충남도연맹의장으로 승진하였다. 만약 <이동근>이 최만정충남본부장이나 장명진충남도연맹의장 측근이거나 <김재환>이 이연재총무부장의 추종자였다면, 다시말해 <운동권잡>에 줄을 댄 사람들이었다면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처럼 그 어떤 문제제기, 처벌도 없었을 것이라 가정은 결코 무리가 아닌 셈이다. 또 <이동근>·<김재환>사건의 <2차가해자>중 2명은 그동안 충남본부와 충남도연맹의 간부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하였는데, 이 2명도 <운동권잡>들의 제안대로 간부수락을 하고 그들에게 줄을 썼더라면 <2차가해자>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6. 충남본부가 개입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충남본부가 <성폭력>사건에 개입하였는가.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한 싸움도 아닌데, 충남본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단체들까지 모아 공대위를 구성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충남본부는 <노동조합이 언제부터 성폭력상당소가 되었는가> 또는 <모든 성폭력사건에 민주노총이 개입할 것인가>라고 묻는 조합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답해야 한다. 이른바 <피해자>들과 <가해자>·<2차가해자>들 모두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한편 충남본부는 민주노총의 성폭력매뉴얼·규약에 나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Q&A5} 관련매뉴얼·규약까지도 무시하고 위반하는 충남본부가 이른바 <피해자>·<가해자> 쌍방의 주장이 아니라 일방의 주장만 편파적으로 듣고 판단한 것은 코리아충남연대를 공격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는 합리적 의혹을 낳는다. 한편 민주노총충남본부장 최만정은 사건초기에는 간부들이 하는 일이라 자신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니, 사건이 확대된 지금에 와서는 충남도 연맹의장 장명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남평계만 들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7. 충남본부는 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을 다루지 않는가

충남본부가 규약까지 위반하고 공대위를 구성할 정도로 피해자편을 들기 시작하였다면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피해자의 제기도 받아들여야 하였다. 그러나 충남본부는 놀라운 2중잣대로 이 제기는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 <성폭력>이 아니라 <단순폭력>이라는 이유인데, 언제부터 <여성의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성적 수치심을 준 사건>이 <단순폭력>이 되었는가. 백보를 양보해 <단순폭력>이라고 하여도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것도 대중단체운동가들이 집단적으로 벌인 사건인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가. 결국 이런 2중잣대는 충남본부가 <피해자>인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 가령 평소 눈엣가시인 단체들과 활동가들을 이 기회에 치겠다는 종파적이고 패권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

8. 충남도당당기위와 충남본부·공대위는 한몸?

독립기관인 충남도당당기위는 공대위·충남본부와 한몸이 되어 사건을 처리하였다. 조사위원구성·조사과정·판결의 모든 과정이 불공정하였다. 공대위소속단체성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가령 오는 회는 충남본부교육부장과 공대위집행위원장, <이동근>사건<피해자>대리인이라는 1인3역을 맡고 있으며, 당기위참관에 당기위진행조언까지 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당기위징계의 콘트롤타워가 충남본부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겠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거짓 유도심문을 하였다. 심지어 <이동근>사건으로 제소되었으나 기각결

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조사위원 중 한명이 <죄가 없어서 기각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기각된 것>이라는 망발을 하였다. 결과에서도 이른바 <2차가해자>들의 소명이 1%도 반영되지 않았다. 거의 다 이른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당기위의 주관적인 추정이나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였다. 당기위원장과 간사가 조사과정중에 사건을 민중의힘과 중앙당에 유폐하는 행태를 벌였지만 어떤 제지나 징계도 받지 않았다.^{Q&A4}

9. <피해자>의 얼굴도 모르는 <2차가해자>들^{자료35}

<이동근>·<김재환>사건의 <2차가해자>들은 총 9명이고 모두 오랫동안 지역에서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전개한 운동가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건전후로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고 심지어 <피해자>의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날 <2차가해자>가 되어 평생동안 <성폭력범>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단지 사건을 인지하였다는 것으로,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당기위제소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해자>를 교육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폐하였다는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근거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파악하였다는 이유로 <2차가해자>가 되었다.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나 방법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2차가해>론은 2중잣대가 되어 수많은 억울한 <성폭력범죄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2차가해자로 제소된 인원	피해자를 모른다	사건전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이동근>사건	7명	1명	5명
<김재환>사건	5명	1명	3명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얼굴을 본적도 없고 사건전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정도이니,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만난 경우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우연히 본 것이 전부이다. 결국 이 <충남>사건은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왜곡전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이동근>사건의 <2차가해>의 경우, <피해자>남자친구가 도움을 요청하여 그 도움을 주는 자리에서 <2차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김재환>사건은 이연재가 대부분의 <2차가해자>들을 만들어내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2차가해자>들 중 2명에 대해서는 이름과 얼굴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2차가해>는 만들어낸 것이다.

10. 당기위원장과 충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의 겸임과 월권

부르주아법질서조차 조사중이고 판결전에 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다. 충남본부(공대위)는 당기위에서 조사중인데도 5월14일 충남민중

의힘집행위원회에서 9인을 실명을 적시하며 활동중지를 요구하는 문서^{자료12}를 배포하였다. 그 문서에는 심지어 바로 그날 당기위에 제소한 사람의 이름도 있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주재한 충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 정한구는 당기위원장이기도 하다. 당기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충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자격으로 충남민중의힘에 안전^{자료13}으로 상정한, 최소한의 절차적 원칙마저도 무시한 전대미문의 월권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참고로, 정한구를 충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은 최만정이고, 정한구는 당기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최만정과 상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최만정은 이미 2월초에 <이동근>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황상, 최만정과 정한구의 관계로 볼 때, 당기위원장이자 충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인 정한구의 월권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Q&A4}

11. 과연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가

대표적인 거짓선동 중의 하나가 바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모는 것이다. <이동근>·<김재환>은 초기부터 도의적인 사과를 하였다. 여기서 <도의적인 사과>란 <피해자>들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도덕수준을 요구받는 대중단체간 부로서 물의를 빚은데 대한 사과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김재환>은 이메일로 총화서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충남대련은 <피해자>를 만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심지어 <김재환>사건의 <2차가해자>들 전부도 같은 맥락과 이유로 당기위조사에서 <김재환>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히 <이동근>사건의 경우 <2차가해자>를 대표하는 두사람이 <피해자>의 대리인격으로 되는 사람에게 구두로 역시 같은 맥락과 이유로 사과를 하였고, 징계사실을 밝혔으며, <피해자>가 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연락하라고 하였다. 충남본부는 사과를 한 사실조차 왜곡하며 거짓선동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운동권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Q&A1}

도의적 사과에 대하여 부연하면, 이연재가 사건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건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2차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당기위에서 <피해자>에게 도의적 사과를 하였다. 도표에서 사과를 할 것이 없다고 한 경우는 제소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황당한 것은 <이동근>사건의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시켜 학교에 소문을 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동근이 유부남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에 이동근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2차가해자>가 되었다. 이 경우 사과하여야 할 사람은 <2차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지 않은가.

<이동근>사건 이른바 <가해자>	<김재환>사건 이른바 <가해자>
문자와 이메일로 사과, 만나서 문제해결하자고 몇차례 호소	반성문 이메일 발송하고 수신확인, 문자로 만나서 문제해결하자고 호소

<2차가해자>	<이동근>사건	<김재환>사건
1	피해자를 만날 수 없는 조건에서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선배로서 이런일이 벌어져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피해자에게 전해달라 했음	사건과 피해자도 모르지만 당기위에서 구두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함
2	피해자를 만날 수 없는 조건에서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조직대표로서 이런일이 벌어져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피해자에게 전해달라 했음	당기위에서 피해자에게 구두로 도의적 사과를 함
3	피해자에게 지역선배로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함	
4	이 사건에 대해 몰랐고 피해자도 모름	
5	도의적 사과를 할 이유가 없음	.
6		.
7		.

12. 충남본부의 몸에 밴 폭언과 폭력행사

충남본부는 사건초기부터 간담회를 제안하며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단죄한다는 미명하에 그보다 더한 욕설과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다. 충남본부의 간부들은 <2차가해자>로 지목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다른피해자모임>의 천막농성장에 난입하여 천막을 찢고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켓을 파손하였다.^{자료39} 심지어 자기들이 개최한 공개토론회에 참가한 외부인사의 의견을 폭력적으로 막고,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다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는 폭력적 위협을 가하였다.^{클2} 물론 충남본부의 욕설·폭언·폭행을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3. 충남민중의힘 강제해산과 사전담합

충남의 <운동권잡>들은 충남민중의힘이라는 공적인 중요연대체를 황당하게도 만장일치로 강제해산시켜버렸다.^{Q&A6} 당시 안건은 3가지였는데 충남연대(코리아충남연대)가 제기한 상임대표·집행위원장의 사임의 건, 충남본부가 제기한 <2차가해자>들의 활동중지의 건, 충남도연맹이 제기한 <충남대련>과의 연대파기의 건이었다. 구동준이의 원칙에 따라 충남민중의힘회의는 만장일치체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충남민중의힘상임대표인 최만정충남본부장은 이런 원칙을 무

시하고 다수결로 안전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연대를 위한 전선체인 충남민중의힘이 누가 누구를 제재하고 분열시키는 안을 통과시키는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는 철저히 목살당하였다. 문제는 <2차가해자>들과 일부단체가 항의하며 퇴장하자 나머지 단체들이 황당하게도 충남민중의힘을 자진해산해버린 것이다. 후에 이 해산조치는 사전담합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더욱 충격을 주었다.

14. 충남본부, 임시대의원대회 참석한 대의원들 기만

충남본부는 <이동근>·<김재환>사건을 임시대의원대회의 안전으로 상징하고 <2차가해자>들이 속한 단체들과의 <연대파기>를 참가대의원 7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활동가와 단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안전을 함부로 상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안전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조사과정, 결과, 향후방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대의원들은 결국 충남본부장 최만정의 제의대로 전대미문의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대회결정과정에서 한 대의원이 <연대파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최만정본부장은 <사과를 받기 위해 하는 결정>이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최만정은 민주노총성폭력규약에 나온 진상조사위구성을 위반하였다거나 일방의 주장만 들었다거나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충남본부는 대의원대회결정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연대파기>결정사항이 공문으로 산하조직에 하달되면서, 심지어 충남본부 000본부장은 <가해자>와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노조활동가에게 그 지역의 연대조직회의에 가지말라고 이 문제많은 결정사항보다도 더 확대된 황당한 선동까지 하였다. 한마디로 지역운동에서 단결과 연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충남본부가 그 반대로 단결과 연대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15. <운동권잡>들의 몸에 밴 폭력근성

충남의 <운동권잡>들은 이번 <충남>사건의 처리과정이나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에서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충남본부장 최만정은 2년전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고 한 조합원의 가슴팍을 발로 차서 의자와 함께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온몸을 난타하며 폭행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운동권잡>의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았고 당연히 처벌도 받지 않았다. 충남도연맹 의장인 장명진도 폭력적인 인물이다. 통합진보당 아산시위원장선출과 관련한 내부회의에서 <이동근>의 출마의사에 대해 반대하면서 밥상을 뒤집어엎으며 폭력적 위협을 가하였다. <사회적잡>이 <사회적>을 대하는 폭력적 자세와 <운동권잡>이 <운동권>을 대하는 폭력적 자세는 본질상 차이가 없다.

16. 스토크를 방불케하는 충남본부의 행동들

<2차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충남본부는 자신들이 지목한 <2차가해자>들의 집·학교·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횡포를 부렸다.^{자료49} 노동자대회장에서는 실명을 거론한 유인물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다.^{자료50} 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애초부터 없었다. 충남본부의 상근자가 근무시간인 낮에 아산에서 공주의 대학교까지 원정을 와서 1인시위를 하고, 노동현안 선전에 집중해야 할 노동자대회현장에서 충남본부상근자들이 총동원되어 <충남>사건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제정신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분별력없는 모습이다(2013.11.10).

17. 민주노총, 사실상 협의조건부인 중집결정과 코리아연대와의 간담회합의마저 파기

충남본부가 민주노총성폭력매뉴얼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민주노총도 스스로의 중집결정사항을 깨버리면서 <연대파기>를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은 18차중집회의에서 사실상 코리아연대와의 협의조건부<연대파기>를 결정하였고 코리아연대에 공문^{자료54}을 발송하였다. 이에 코리아연대는 충남본부가 한쪽 주장만 듣고 결정한 것인만큼 민주노총은 다른쪽주장도 들어야 한다고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충남본부를 포함하는 간담회를 수정제안^{자료57}하였다. 코리아연대는 일단 민주노총이 간담회제안을 수락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첫문장에 강조하면서, 충남본부를 배제하거나 그에 상응한 다른사람들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자료58} 즉, 간담회성원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기존안을 고수한다면 충남본부의 발언을 자제하는 선에서 절충할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런 의견제시를 간담회거부의사라고 제멋대로 판단하고는 <연대파기>중집결정을 산하 지역·산별조직에 발송하였다. 그리고 민중의힘에 <연대파기>안을 제의하였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스스로 한 중집결정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이 간담회파기 사실마저 통보받지 못하여, 한달동안이나 이미 민주노총에 의해서 파기된 간담회를 준비하며 왜 민주노총에서 간담회성원구성이나 날짜에 대한 답변이 없는지를 궁금해 하였다.

18.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인가

충남본부도 문제지만 민주노총마저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을 자임하며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동근>·<김재환>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라는 조직적이고 공적인 결정을 내린 일은 전대미문의 황당한 사건이다. 누가 민주노총·충남본부에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의 지위와 권한을 주었는가도 문제이고, 개인적인 일과

조직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력 제로(0)>의 모습도 문제이고, 스스로 만든 성폭력매뉴얼·규약^{자료43}·^{자료79}을 위반하거나 스스로 내린 중집결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도 문제이고, 어느 일방의 주장만 듣고 다른 일방의 주장은 아예 듣지도 않은 것도 문제이고, 충남본부 대의원들이나 민주노총중집위원들이 사건도 잘 모르면서 진보운동의 생명같은 원칙인 <연대>를 함부로 파기하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민주노총·충남본부의 패권을 장악한 종파세력이 <사회적갑>처럼 <운동권갑>이 되어 월권·매도·횡포·2중잣대의 <갑>질을 한 것이다.

19. 항의방문에 욕설·폭언·폭행으로 화답한 민주노총

<또다른피해자모임>은 충남본부의 일방적인 <2차가해자>지목과 폭언·폭력에 맞서 대화와 간담회를 요구하였지만 <성폭력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코리아연대도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연대파기>공문^{자료54}에 간담회를 제안하고 민주노총이 수락하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서 민중의힘관계자를 통하여 민주노총에서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 확인되면 항의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민주노총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사실을 확인하니, 사무총장은 중집결정대로 집행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충남>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하여 <연대파기>를 민중의힘에 제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무총장이 불일이 있다고 나가버리고 직급이 낮은 사무부총장과 면담을 하라며 방문단은 사무실에 사무부총장을 마냥 기다리며 방치되는 모욕을 당하였다. 이에 방문단은 사무실사람들이 방문목적에 알 수 있게 목소리를 높이고 구호를 외쳤는데, 이에 민주노총 한석호사무부총장·조정석상근자 등이 욕설·폭언·폭행을 하였다. 특히 조정석상근자는 앞발차기로 당시 상황을 취재하는 진보노동뉴스 김동관기자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 물론 민주노총은 진보노동뉴스와 코리아연대의 폭언·폭행자들에 대한 징계요구공문^{자료59}⁶⁰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고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0. 스스로 프락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석호

항의방문과정에서 한석호사무부총장은 <에이 씨발!>이라고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욕설을 하였는데, 민주노총사무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사무부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하였다는데 충격적이다. 한석호는 민주노동당분당사태의 기획을 낸 종파분열주의자의 전형인 인물로서, 이런 자가 어떻게 민주노총연대사업을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직위에까지 오를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석호는 과거 자신은 프락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자료80}⁸¹을 인터넷언론에 발표한 일이 있다. 과연 이런 종파분열주의자이며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 민

주노총의 사무부총직에 있으며 민중의힘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활동한다든지 연대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안의 상정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

21. 전농, <연대파기>결정을 5개월만에 통고

전농지도부는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을 제대로 총화하고 해당자들을 징계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충남대련·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결정하고 통고^{자료73}하였다. 그것도 지난해 12월에 내린 결정을 코리아연대에는 올해 5월에 보내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 <연대파기>를 결정하였다고 통고한 공문에는 아무런 근거와 이유도 없다.

22.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을 반대한 전국여성연대집행위원장

이미 코리아연대의 서울지역조직인 코리아서울연대는 서울진보연대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반대를 하여 가입건이 유보되고 말았다.^{자료70} 물론 최진미집행위원장은 전국여성연대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으며 코리아연대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 <0000>이라는 지역이름의 종파패권세력이 코리아연대처럼 일체 패권다툼이나 자리다툼을 벌이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이나 운동가들에 대하여 운동권이나 단체내에서 고립하거나 제거하려고 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23. 종파패권세력의 <반코리아연대담합>의혹^{자료68-69-70}

민주노총내종파세력은 코리아연대의 항의방문후 자신의 중집결정 위반과 폭언·폭행의 잘못을 덮고 또한 코리아연대에 보복하기 위하여, 민중의힘의 주요한 소속단체들을 장악한 <0000>이라는 네글자지역이름의 종파패권세력과 담합하였다는 강한 의혹이 있다. 전농이 바로 민주노총의 <민중의힘 <연대파기>결정>에 부화뇌동해 나섰고,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을 반대해 나서 그 가입여부가 유보되었다. 이미 충남에서 <반코리아충남연대담합>이 이루어져 충남민중의힘해산결정까지 미리 내리고 그 회의에 들어온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운동권을 장악한 종파·패권세력이 평소 눈엣가시로 본 단체를 운동권에서 고립말살하기 위하여 월권과 횡포를 부리고 2중잣대로 매도하며 담합하는 <종파·패권>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지

〈충남〉사건1. 충남본부의 〈마녀사냥〉

2012.8.30 이른바 〈김재환〉사건 발생
2012.10.23 이른바 〈이동근〉사건 발생
2013.2.1 충남본부(민주노동당충남본부), 〈이동근〉사건 최초접수
2013.4.1 당기위(통합진보당충남도당당기위) 제소(1차 이동근, 2차 2명 한준혜·한지은)
2013.4.2 〈이동근〉사건공대위, 1차회의
2013.4.4 당기위 제소(2차 5명 지영철·차상엽·남창우·방진호·한혜인)
2013.4.4 〈이동근〉사건공대위, 〈2차가해자낙인협박〉공문 이메일 발송
2013.4.5 또다른피해자들, 〈2차가해자낙인협박〉공문에 대한 입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제안
2013.4.10 충남본부, 〈김재환〉사건 최초접수
2013.4.15 당기위 제소(김재환·김정화·한지은·남창우·차상엽)
2013.5.3 〈이동근〉사건공대위, 통합진보당에 〈2차가해자들〉 당활동중단요청 공문 발송
2013.5.6 〈이동근〉사건 당기위징계(제명)결정
2013.5.10 〈김재환〉사건공대위, 1차회의
2013.5.14 공대위, 충남민중의힘회의에서 〈2차가해자낙인실명거론·활동중지요청문서〉배포
2013.5.14 당기위 제소(최민)
2013.5.15 통합진보당여성위, 충남도당에 성평등감사자격중지의 부당한 지시공문
2013.5.20 또다른피해자모임, 〈2차가해자낙인실명거론·활동중지요청문서〉배포에 대한 입장과 항의서한
2013.5.23 또다른피해자모임, 명예회복을 위한 요구서한(공대위대표자들에 내용증명발송)
2013.5.27 민주노동, 통합진보당에 〈2차가해자〉활동중지요구 공문
2013.5.27 부당한 당기위징계결정(지영철·한준혜·방진호·한혜인·한지은·김재환)
2013.6.10 또다른피해자모임, 충남민중의힘상임대표·집행위원장 사임요구서한 발송
2013.6.11 충남연대(코리아충남연대)·충남대련(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충남민중의힘대표자회의 소집요구서한 발송
2013.6.12 충남연대·충남대련, 공대위소속단체들 공대위에서 탈퇴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서한 발송
2013.6.12 충남연대·충남대련, 통합진보당충남도당 당기위원장 사임요구서한 발송
2013.6.14 부당한 당기위징계결정(남창우·한지은·김정화·차상엽·최민)
2013.6.17 공대위, 공개입장문 홈페이지 공개게시
2013.6.17 또다른피해자모임, 충남본부 항의방문
2013.6.17~21 또다른피해자모임, 항의피켓팅
2013.6.19 또다른피해자모임, 공대위의 공개입장문 반박
2013.6.19 또다른피해자모임, 인권피해사례워크숍 개최
2013.6.21 공대위, 힐링데이행사 개최
2013.6.24 또다른피해자모임, 충남본부 앞 천막농성 시작
2013.6.25 또다른피해자모임, 통합진보당 항의방문
2013.6.25 충남본부, 또다른피해자모임을 무단삭제
2013.7.1 공대위, 이른바 〈피해자〉 2명의 입장문 공개
2013.7.1~3 공대위, 월권매도공문(1)~(3) 또다른피해자모임에 전달
2013.7.2~5 공대위, 공개기자회견서명운동(페이스북·트위터·문자·카톡 등 SNS로 왜곡유포)
2013.7.3 충남본부, 공대위 충남민중의힘 강제해산시킴(폭력위협, 성폭력적 발언)
2013.7.9 통합진보당충남도당, 운영위입장 발표
2013.7.9 또다른피해자모임, 인권피해사례집 〈2차가해는 없다〉 게시 및 배포
2013.7.11 공대위, 폐쇄적인 공개강좌개최
2013.7.11 공대위, 〈이동근·김재환〉사건 당기위제소장 공개
2013.7.12 충남본부운영위결의(〈2차가해〉라고 비방)
2013.7.12 21세기충남여성회, 성폭력 2차가해 오남용방지를 위한 워크숍
2013.7.18 공대위·민주노동당간부들, 기자회견후 천막난입·난동·폭력위협·기물파손
2013.7.19 공대위·민주노동당간부들, 천막난입·폭력·기물파손
2013.7.26 또다른피해자모임, 천막농성 한달을 맞은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3.8.7 또다른피해자모임, 천막농성을 접으며 성명발표
2013.8.12 차량파손사태(공대위로 추정)

2013.8.20 공대위, 공개토론회에서 반대의견자에 욕설과 폭력·위협가함(어떤 제지도 없었음)
 2013.8.25 공대위, 미디어총청에 왜곡주장 기고(조지영)
 2013.8.31 공대위, 미디어총청에 왜곡주장 기고(오은희)
 2013.9.9 공대위, 미디어총청에 왜곡주장 기고(정해임)
 2013.9.25 공대위, 충남연대소속단체들에 사과와 활동중지요구 공문 발송
 2013.10.14 공대위, 충남연대소속단체들에 사과와 활동중지요구 공문 발송
 2013.10.17 공대위, <2차가해자매도> 동시다발 1인시위(천안·아산·공주 등 주요거점)
 2013.10.21~22 공대위, 인증샷공동행동
 2013.10.22 <이동근>사건 통합진보당<제명결정무효> 법원판결
 2013.10.23 충남본부, 임시대의원대회(74명 대의원들의 황당한 연대중단결정)
 2013.11.8 충남연대, 자진해산
 2013.11.9 충남연대, 해산관련 코리아연대중앙에 통보
 2013.11.10 공대위, 노동자대회장에서 <2차가해자매도> 피켓시위 유인물배포
 2013.11.19 민주노총여성위원회 회의
 2013.11.21 민주노총, 18차 중집결정(코리아연대와 조건부 연대파기하기로 결정)

〈충남〉사건2. 민주노총의 〈연대파기〉

2013.10.21 민주노총, 18차 중집결정(코리아연대와 조건부 연대파기하기로 결정)
 2014.2.20 민주노총, 코리아연대에 〈연대파기〉위협 공문 발송
 2014.2.25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에 〈간담회〉제안 공문 발송
 2014.3.7 민주노총, 코리아연대에 상집결과통보(간담회원칙확인)
 2014.3.11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에 간담회수락환영 공문 발송
 2014.4.19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에 〈연대파기〉지시, 제의확인 공문 발송
 2014.4.22 민주노총간부·상근자들, 코리아연대방문단 민주노총사무실 항의방문시 방문단에 대한 욕설·폭언, 진보노동뉴스기자 폭행
 2014.4.22 진보노동뉴스, 민주노총에 기자폭행사실확인요구 공문 발송
 2014.4.23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에 폭언·폭행사실확인요구 해당상근자엄중문책요구
 2014.4.25 코리아연대, 민중의힘에 〈민주노총공문〉전달과 〈간담회〉요구
 2014.4.28 진영하민주노총조합원, 폭언·폭행한 한석호·조경석 징계위원회
 2014.5.1 코리아연대, 메이데이집회 〈연대파기〉·〈폭언폭행〉 항의선전물 배포, 플래카드 부착
 2014.5.9 코리아연대, 민주노총항의집회 개최
 2014.5.9 코리아연대, 민중의힘에 답변공문촉구와 추가질의·요구 공문 발송
 2014.5.9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에 〈연대파기 공식안건화〉와 종파적 행태에 대한 엄중경고
 2014.5.9 코리아연대, 성명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법〉노릇 그만하고 연대파기 철회하라!〉 발표
 2014.5.13 코리아연대, 전국여성연대에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공문 발송
 2014.5.13 코리아연대, 전농에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공문 발송
 2014.5.13 코리아연대, 통합진보당에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공문 발송
 2014.5.14 코리아연대, 민주노총항의 〈연대파기철회, 폭언·폭행사과 및 징계촉구〉 촛불집회
 2014.5.16 코리아연대, 민주노총항의 〈연대파기철회, 폭언·폭행사과 및 징계촉구〉 규탄집회
 2014.5.17 코리아연대, 전농의 한심한 〈연대파기〉통보에 대한 확인과 항의 공문 발송
 2014.5.17 코리아연대, 차기대표자회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안건 상정제기
 2014.5.17 코리아연대, 민주노총·통합진보당·전국여성연대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의 촉구
 2014.5.17 코리아연대, 성명 〈농민회성폭력〉사건과 황당한 〈연대파기〉 책임지고 전농지도부 총사퇴하라! 발표

〈충남〉사건3.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과 전농의 〈연대파기〉

2013.1.6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발생
 2013.1.13 충남대련 간부징계(해임) 공지
 2013.1.14 충남대련, 충남도연맹에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 해결요청(1차) 공문 발송
 2013.1.20 충남대련, 간부징계조치 사실확인요구와 충남대련의 입장 공문 발송
 2013.1.28 전농, 충남대련에 답변(연대사업중단통보, 충남대련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없음)
 2013.2.3 충남대련, 충남도연맹에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 해결요청(2차) 공문 발송
 2013.2.5 충남대련, 전농중앙에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 지도요청 공문 발송
 2013.3.26 여성피해자 한지은·충남대련집행위원장, 〈가해자〉 박정우에 내용증명발송(농민회성폭력)사건해결 요청
 2013.10.2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박정우, 〈강요〉건으로 30만원 벌금
 2014.2.27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박정우, 〈강요〉건으로 1심 징역4개월 선고, 항소
 2014.5.15 충남대련, 전농·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에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공문 발송(한대련, 통합진보당최고위원회, 민주노총, 충남본부, 충남본부성평등위원회, 민중의힘, 전국여성연대)

Q & A

1. 〈1차가해〉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2. 〈피해자중심주의〉·〈2가가해론〉 무엇이 문제인가?
3. 그냥 〈사과〉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4. 〈통합진보당당기위원회〉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5. 민주노총 성폭력규약·매뉴얼로 본 〈충남〉사건의 문제는 무엇인가?
6. 충남민중의힘, 왜 해산되었는가?
7. 〈충남〉사건에서 왜 〈종파〉와 〈프락치〉문제가 제기되는가?
8. 〈반코리아연대담합〉은 무엇인가?

1. <1차가해>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1차가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차가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인식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고 진위공방이 만만치않게 진행중이다. 또한 이 <1차가해>를 인정하는 순간 평생 <성폭력법>의 족쇄를 차고 다니고 정치생명이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 중대사건인 만큼 그 판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가해자(이동근)>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런 조건에서 코리아연대든 관련단체든 어떻게 <1차가해>를 함부로 인정하고 판단하며 단정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1차가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을 <1차가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매도한다. 심지어 이를 <2차가해>로 몰아세우기까지 한다. 과연 진위논란이 있으니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2차가해>가 되고 <연대파기>까지 당하여야 할 범죄적 잘못이란 말인가. 한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하였다. 한사람의 인생이 파탄나고 정치생명이 끝장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이 <<1차가해>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2차가해>를 저지른다>거나 하는 식으로 매도되고 나아가 운동단체·운동가의 생명과도 같은 <연대>를 깨버리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무엇보다도 <1차가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고, 재판관례상 인정하면 감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주장은 무조건 맞고 <가해자>의 주장은 무조건 틀리다고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자신의 주장을 펼 권리가 있다. 또한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측주장을 다 듣고나서 판단하겠다고 하거나 나아가 <가해자>의 주장에 공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거나 <가해자>의 주장에 공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단죄된다면 여기에 어떤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있겠는가.

2. <피해자중심주의>·<2차가해론>, 무엇이 문제인가?

상대적 약자인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추가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론>은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 악용되면 <또다른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단체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2차가해론>은 그 개념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그동안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론>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론>의 대표적 실례가 된 이른바 <서울대담배녀>사건은 그 이론의 파괴적인 폭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연인간의 이별과정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시작되었고 이를 <성폭력>이 아니라고 가치판단한 단과대학생회장을 <2차가해자>로 낙인하면서 불거진 사건이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문내용이 <피해자중심주의>와 배치된다면서 <2차가해자>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의 사례가 허다하다. 이렇다보니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면 대다수는 <2차가해자>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하여 모른척하거나 방관하면서 실제 성폭력사건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당의 사례 중에는 술자리에서 다함께 손잡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손을 잡힌 여성의 기분이 상하였다고하여 <성폭력>으로 규정된 일도 있다. 또한 농활과정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후 농민에게 과도한 사과를 요구하며 철수한 농활대를 비판한 것을 가지고 <2차가해>로 규정한 사례도 있다.

이른바 <충남>사건의 <2차가해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들중에는 <피해자>와 안면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피해자>에게 도움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사건해결에 적극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사건을 인지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교육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이유로 <2차가해자>로 규정되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중세기의 마녀사냥이나 근대 맥카시선풍, 남코리아의 <중북몰이>소동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초점9}

이러한 <피해자중심주의>·<2차가해론>이 과연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지, <피해자>의 주장과 생각, 감정만이 절대선인지,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의 자유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 개념에서부터 적용까지 모든 것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복수심은 충족시켜줄 수는 있겠으나 그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규정과 낙인으로 고통받는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은 <피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주관적 <피해자중심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서울대사회대규약에서 <2차가해자>부분이 폐지되었다. 사회통념상 <2차가해>기준이 마련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그냥 <사과>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사과로만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였다면, 이른바 <충남>사건이 지금처럼 연대파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와 공대위는 이른바 <2차가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거짓선동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동근>과 <김재환>은 이른바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였고 해당단체는 해임 등의 가장 강력한 자체징계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충남본부에게는 이런 조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이른바 <김재환>사건의 이른바 <2차가해자>들은 당기위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의적 사과를 하였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본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과>는 본인들의 <마녀사냥>과 월권·매도·횡포라는 본질을 숨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강요된 사과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과연 그렇게 강요된 사과가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거나 씻어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유독 <성폭력>사건에서의 사과는 <빨간펜>선생의 침묵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외의 비판이 있다. 가령 사과를 해도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사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마치 <빨간펜>선생이 침묵지도하듯이 사과문의 문구가 수정이 되고 결국 양심에 의거한 사과가 아닌 폭력적으로 강요된 전향서가 되어버린다. 더구나 부당한 <2차가해>의 누명을 쓰고 정치적 사형선고를 이미 받았다면 그런 사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뒤따르는 조치는 더욱 일방적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여년이상 진보운동에 헌신하여온 운동가들에게 지금처럼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이 항쟁을 향하여 힘차게 전개되는 정세에서, 반년에서 3년간의 활동중지요구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충남본부와 공대위의 공문^{자료46·48}에는 <피해자>가 인정하는 강요된 사과만이 아니라 상당기간의 활동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절대로 단순한 사과가 아닌 것이다.

4. <통합진보당당기위원회>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당기위(통합진보당충남도당당기위원회)는 이른바 <충남>사건의 이른바 <가해자>·<2차가해자>들에게 제명과 6개월~3년동안의 자격정지,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수,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과문게시 등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충남본부(민주노동당충남본부)는 자신들의 <마녀사냥>을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당기위의 징계결정은 당기위원구성과 조사과정, 징계결정내용 등 모든 면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었다. 충남본부의 거짓선동과 다르게 이른바 <이동근>사건의 <2차가해자>들은 당기위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서면조사에 임하였고^{자료49}, 이른바 <김재환>사건의 <2차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참석하는 대면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 그러나 <2차가해자>들의 소명과 진술은 단

1%도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실관계마저 왜곡되었다. 특히 당원 제명결정을 받은 <이동근>사건은 법원에서 제명무효판결^{자료50}을 받았는데, 이는 당기위의 징계가 상식이하의 결론이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당기위의 결정내용이 이렇게 부당하게 나온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당기위원에 사실상 피해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대위소속단체성원이 참여하면서 당기위가 판결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판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기위는 전반적인 조사과정에서 충남본부·공대위와 사건의 내용과 조사과정을 실시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결국 <2차가해자>들은 두명의 판사를 상대하여야 하였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당기위나 충남본부가 중심이 된 공대위는 최소한의 절차적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초점3}

충남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도 <김재환>사건의 <2차가해자>들은 당기위의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거짓유도심문을 받거나 공대위성원을 배석시키는 등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다. 공대위소속단체인 천안여성회 김용자가 당기위위원이었고 공대위초기집행위원장인 오은희가 <이동근>사건의 <피해자>대리인이었는데 당기위회의를 참관하였으며 당기위간사 이용후와 긴밀히 연락하며 당기위진행과정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대위와 당기위는 한통속이었고 판사적 역할을 하여야 할 당기위는 검사처럼 취조하였다. 한마디로 당기위는 조사시작전에 이미 <성폭력>사건으로 규정하였고 당기위조사과정에서도 소명하러 온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반성도 안한다는 등 판결이전에 <가해자>취급을 하였다.^{초점3}

중앙당기위공문에는 <사건에 대한 심사권>만 있다고 하였지 징계권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기위는 심사를 징계까지 끌고가는 월권과 횡포를 부렸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동근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애초부터 <2가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이동근>사건은 통합진보당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통합진보당은 이에 반대하며 우기더니 결국 망신만 당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당기위원장이자 충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인 정한구는 충남민중의힘회의에서 공대위측의 요청을 받아 <2차가해자>의 실명이 적시된 사건내용을 유포하면서 당기위의 비밀엄수 등의 당규를 위반하였다. 스스로 당규를 위반하는 당기위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충남>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과 관련해서는 당기위제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비밀유지위반과 사건

의 확대유포 등으로 정한구당기위원장과 이용후간사를 제소하였지만 역시 기각되었다. 비밀유지위반과 제소인협박 및 정치적 압박을 한 통합진보당최고위원 유선희의 제소도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당기위의 2중잣대와 편파결정은 <정치재판>의 확실한 근거이다. 당기위는 본질상 재판인 만큼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처럼 2중잣대를 들이대며 불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며, 당원의 목숨과도 같은 정치생명을 함부로 끊어버리거나 치명상을 가하였다. 결국 대부분의 <2차가해자>들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말았다.

통합진보당은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으로 이석기의원에게 12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파쇼적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하고 있는데, 스스로 저지른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당기위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분명히 답하여야 한다.

5. 민주노총 성폭력규약·매뉴얼로 본 <충남>사건의 문제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충남본부는 민주노총의 <성폭력매뉴얼>^{자료43}과 그 규약^{자료44}을 철저히 위반하였다.

이른바 <충남>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주노총조합원이 아닌데도 충남본부가 개입하였다면, 민주노총매뉴얼·규약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조직의 규율이다. <충남>사건을 통하여 운동권에 분열이 생기고 후과가 심각해진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매뉴얼·규약대로 이 문제를 대하고 처리하지 않은 충남본부에 있다.

첫째, 민주노총<성폭력매뉴얼>의 성폭력규약 제6조는 사건해결에서 가장 먼저 진상조사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남본부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이 진상조사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는 충남본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민주노총매뉴얼·규약을 위반하는 것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충남본부는 성폭력규약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 규약도 지키지 않았다. 각종 회의와 공개석상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왜곡하여 무차별적으로 확대·유포시켰다. 자신들이 지목한 <2차가해자>들에게는 피해자보호의 규율을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들은 지키지 않는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비밀유지와 관련해서 항의하자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피해자>는 전지전능한 신이란 말인가.

셋째, 민주노총<성폭력매뉴얼>은 <처벌주의식, 낙인찍기식>의 개인 공격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념규정에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행위자>란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 <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거나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로 명확히 개념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본부는 진상조사위도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이미 <가해자>와 <2차가해자>를 규정하였고 <처벌주의식>·<낙인찍기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넷째, 민주노총<성폭력매뉴얼>은 <개개인의 처벌에만 급급한 소극적 방식이 2차가해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야기한다.>라고 <성폭력2차가해 오남용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또 <2차가해의 해석범위가 점차 넓어져 사건의 해결을 가로막는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났다. 일례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공동체내부의 사람들이 2차가해를 두려워해 쉬쉬하고 사건을 외면하기에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충남>사건에서는 정확히 <2차가해자>들이 양산되며 그 오남용의 폐해가 극심하였다.

결론적으로, 충남본부는 스스로 매뉴얼·규약에 나온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충남>사건의 <1·2차가해자>, 총11명중 단한 명의 주장도 들은 적이 없다. 이것이 충남본부에게 <피해자>진술서만 있지 조사서가 없는 이유이다. 과연 충남본부는 앞으로 정권과 자본을 향하여 <진상규명>이나 왜 일방의 주장만 듣느냐고 구호를 외치거나 따질 수 있겠는가.

6. 충남민중의힘, 왜 해산되었는가?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남민중의힘이 <강제해산>당하였다고 하면 통합진보당처럼 박근혜정권의 파쇼탄압에 <강제해산>되었는가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충남민중의힘은 황당하게도 파쇼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동권잡>들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며 그 짧은 역사를 마감하였다(2013.7.3). 후에 충남본부와 다른 지역단체들이 사전에 충남민중의힘해산을 담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음은 충남민중의힘이 해체되던 날의 마지막회의록취록의 일부이다. 이 기록을 보면 충남민중의힘이 해체된 배경과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한준혜(공주민협집행위원장) : 소수의견을 존중해달라.

최만정(민주노총충남본부장) :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어떻게 결정할까요?

신용관(대전충남법민련의장) : 민중의힘 깨버려요. 대표님. 이런 연대체 만들어서 뭐하냐고.

최만정: 네, 좋아요, 새로운 제안입니다.

신용관: 깨버리면 되요.

권혁주(충남도연맹정책위원장): 동조하는 발언인데요, 이런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용관: 그러니까 깨자니까.

권혁주: 이 논의를 할 수 없다면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논의도 할 수 없나요?

신용관: 이것도 못하게 할 거요? 만장일치라고?

강사용(충남도연맹의장): 그러면 자진탈퇴는 가능한가요? (사람들 웃음)

최만정: 네, 그러면 충남민중의힘 연대체 해산안을 정식 접수하겠습니다..

신용관: 범민련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만정: 또 동의하는 단체 있어요?

충남도연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충남노동전선, 충남사노위 등의 소속단체들이 동의의사를 밝혔다.

최만정: 자, 그러면 찬반투표하죠, 이렇게 해서 3시간반동안 하고 피 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갑자기 회의내용과 관련 없는 발언) 더구나 대표를 사임해라 하는데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사임해라... 이러면 민주노총충남본부도 연대를 더 이상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확인하겠습니다.

한준혜: 마지막 발언하고 나가겠습니다.

최만정: 뭐 알아서 하세요.

한준혜: 여기서 같은 생각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조직의 해산안을 올렸 습니다. 해산안은 우리를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가라고 하 십시오, 우리가 나가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단체들이 연대하십시오.

권혁주: 그럼 한나라당이랑 해요, 생각 같은.

7. <충남>사건에서 왜 <종파>와 <프락치>문제가 제기되는가?

이른바 <이동근>사건과 이른바 <김재환>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다뤄졌다. 단순히 충남본부와 공대위의 편 의적인 발상만이 그 이유는 아닐 것이다. <김재환>사건은 이른바 <피 해자>가 초기에는 사건의 확대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방조자 이연재가 <피해자>의 대리인을 자 처하고 나선 이후부터 사건이 부풀려지고 확대되었다. 또한 민주노 총이 자체적으로 <연대파기>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민중의힘에게까지 <연대파기>를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노총에서 사실상 연대사

업을 총괄했으며 사무부총장의 고위직에 있는 한석호가 있다.^{자료62}

역사적으로 종파와 프락치가 있는 곳에 단결이 아닌 분열이 있어왔 다. 사실상 <충남>사건의 배후조종자인 이연재의 수상쩍은 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알만한 운동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의심받아왔다. 학 생운동시기부터 좌경적 발언으로 문제가 되던 그가 갑자기 군입대를 한 후에 집중적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그는 <군복무중 조 사받고 국보법위반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는 데, 이상하리만치 잦은 휴가를 나왔다. 누가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위 반처벌>과 <잦은 휴가>는 상식에 어긋난다. 군복무중 집행유예처벌 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본 인에게 있다. 이연재는 제대후에 충남아산에서 수시로 주변의 학생 운동가들을 비방하고 음해하며 불평불만을 부추기는 식으로 내부를 분열시키려 하였다. 한마디로 합리적 의심을 받아온 이연재는 <충남> 사건을 문제화시키고 부풀려 억울한 <2차가해자들>을 양산하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초점4}

세상이 다 알다시피 한석호는 민주노동당을 분당시킨 그 문제의 <분 당기획문서>를 작성한 자이다. 현재는 민주노총연대사업국장을 거 처 민주노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민주노동당을 파국적 분 당과정에 몰아넣어 진보운동을 분열파괴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으 로 음해하고 매도한 본인의 죄행에 대하여 단 한번도 제대로 반성하 거나 총화한 적이 없다. 오히려 코리아연대의 정당한 항의방문에 사 무부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시정잡배 수준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민중 의힘에서의 <연대파기>까지 실질적으로 추동하고 있다. 또한 모인터 넷언론의 연재기사^{자료60-61}를 통하여 스스로 프락치가 아니라고 주장 하였는데, 양심선언이 아니라면 프락치가 프락치라고 고백하는 경우 는 없다.

한 노동운동가가 이런 말을 하였다. <현장이 무너진 자리에 종파의 독 버섯만 자란다!> 이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현장이 무너진 자리에 프 락치와 종파의 독버섯만 자란다!>

8. <반코리아연대담합>은 무엇인가?

이른바 <충남>사건의 본질은 <운동권잡>과 종파의 월권·매도·횡포와 2중잣대이며 목적은 코리아연대를 운동권내에 고립·제거하는 데에 있다.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관철시키 려는 <반코리아연대담합>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고 있다.

첫째,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과 의혹제기를 받고 있는 단체들에 질 의공문^{자료66-69}을 보냈으나 전혀 답변이 없었다. 일체 반박조차 없 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민주노총내종파세력이 비공식적으로 코리아연대의 고립에 이 해관계를 같이하는 정파세력들에게 <연대파기>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4월30일에 민중의힘의 <노동자·농민·빈민단체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안이 논의되었다. 충남민중의힘이 해체되기 전에 코리아충남연대와 일부단체를 제외한 지역운동권갑들의 사전담합이 있었는데 지역과 똑같은 흐름으로 중앙에서도 반코리아연대의 담합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힘내 주요소속단체들의 패권을 한 종파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은 4월30일 한국진보연대 4기 12차집행위원회회의에 참여하여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결과 가입이 유보되었다. 이 사건은 민중의힘대표자회의에서 어떠한 발언이 있고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반코리아연대담합>이란, 이 <충남>사건을 통해 운동권의 가장 고질적인 종파·패권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글

1. 피해자중심주의 박헌변호사
2. <인권감수성>과 <계급/정치 감수성>의 심각한 이상증세 볼셰비키레닌주의자
3. 민주노총충남본부 제대로 서야 한다. 제대로 할 수 있다. 지역노동자
4.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공대위공개입장문반박 또다른피해자모임
5. 충남민중의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성명 코리아충남연대
6. 코리아충남연대해산에 부쳐 또다른피해자모임
7.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노릇 그만하고 연대파기 철회하라! 코리아연대
8. <농민회성폭력>사건과 황당한 <연대파기> 책임지고 전농지도부 총사퇴하라! 코리아연대
9.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공문 충남대련

1. 피해자중심주의

박훈변호사, 월간 <작은책>, 2010.5

이번호에서는 조금 곱끄러운 문제를 쓸까 합니다. 흔히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합니다. 이런 활동가집단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개운치 않은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성폭력>문제입니다.

어느날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 사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어?> 하길래 <응, 그 사람 성폭력을 행사해서 활동을 그만두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곧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 사람이 강간을 했어?> 전 그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아내는 성폭력을 곧 강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언어폭력을 한 것도 성폭력이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야.> 그러자 대뜸 <그게 무슨 성폭력이야, 성희롱이지.> 아내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법률의 구분방식입니다.

그런데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거나 폭력적 행사방식의 공통성을 도외시하는 구분이라 하여 모두 성폭력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개념의 무한정한 확대와 그 경중의 과다유무를 불문한 처벌수위,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공개사과의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성폭력개념의 무한정한 확대는 2차가해에서 적나라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3자가 가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피해자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언행은 2차성폭력의 범주에 들 가능성이 매우 짙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의사소통과 의견표명의 자유를 심하게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가해자의 가해동기나 정황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자유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1차가해에서도 이런 위험성은 늘 있는데, 특히 유형력을 행사하는 성폭력이 아닌 <언어적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중심주의에서는 주관적인 성폭력으로 흘러 그 경계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의 방식도 일단 경중유무를 불문하고 성폭력으로 문제가 되면 활동정지, 공개사과, 상담프로그램이수 등 천편일률적인 것이어서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강제력을 가진 사법기관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징계수단을 가질 수 없는 한계에서 연유한다고 봅니다.

허나 처벌의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공개사과의 문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못을 하였고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이 아닌 것을 양심인 것처럼> 표현하도록 강제당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처벌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단상을 쓰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봅니다. 어렵습니다.

2. <인권감수성>과 <계급/정치 감수성>의 심각한 이상증세 - <충남성폭력사건> 공개토론회 참관기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3.8.28

공개토론회의 순서와 내용

Y동지의 질의

욕설과 폭력

발언과 답변

페미니즘과 성폭력론은 노동계급의 사상인가?

<담배성폭력사건>은 <충남사건>과 무관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론>은 보위되어야 한다?

뒤틀린 <인권감수성>과 <정치감수성>

계급적 단결과 노동자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고1 : 관련 중요 문서 목록

참고2 : <담배성폭력사건>에서 배운다

8월20일 민주노동충남본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 참석했다. 여러 글에서 거듭 토론했지만 <성폭력,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와 관련된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다. 주관에 따라 <피해-가해>가 규정되기 일쑤고 그러니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사안이다. 마치 캄캄한 정글속을 횡설수설 하나 달랑 밝혀 들고 탐색해 들어가는 기분이라랄까? 이 문제를 대할 때면 늘 음산한 살기를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결심한 바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통과를 주도한 <여성주의>의 반동성을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부르주아 여성주의>에 맞선 투쟁을 선포한 바 있고, 그로부터 몇건의 논쟁적 글을 발표하며 각을 날카롭게 해 왔다. <사노위>내 강령논쟁때에도 그러했다. 소위좌익진영 거의 대부분 <여성주의(페미니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때였다. 맑스주의와 거의 대등한 반열로 떠받들어지던 때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표한 말들에 책임을 져야 했고, 책임을 지기로 했다. 우리가 발표한 <볼셰비키-레닌주의자 강령안>의 첫머

리엔 트로츠키의 이행강령에서 따 온 경구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최소저항선을 찾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며, 아무리 쓰디쓴 진실도 대중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며,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는 노동계급의 위대한 선배가 남긴 가르침대로 실천하기로 했다. <최소저항선을 찾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2시간정도 달려야 하는 길이었다. 6시이전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여유있게 참석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진은 순탄치 않았다. 내려가는 도중 한쪽 앞바퀴에 펑크가 났고, 견인되어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다. 결국 8시가 되어서야 공개토론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예정시간은 저녁7시였으니, 이미 두번째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있었다.

공개토론회의 순서와 내용

주최측이 발표한 차례와 우리가 참석한 이후 진행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로 살아온 시간

2. 왜 가해자가 드러나야 하는가: 민주노동충남본부교육부장 오은희

3. 성폭력사건 조사과정의 쟁점과 태도: 통합진보당충남도당사무처장 선춘자

4. 성폭력사건 이후,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대표 이은심

5. 질의응답

6. 주제토론

7. 피해자소감(아마도 1번이 맨 뒤로 재배치된 듯)

이중 <2. 왜 가해자가 드러나야 하는가?>와 <4. 성폭력사건 이후, 우

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는 자료집에 실린 발제문을 토대로 제 목만 간략히 요약한다.

〈왜 가해자가 드러나야 하는가〉

1. 성폭력사건을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이다. 2. 〈연대활동중단〉은 비상식적인 부당한 요구사항이 아니다. 3. 연대활동중단은 〈피해자보호〉와 〈2차가해중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4. 〈가해자실명공개〉는 성폭력사건의 해결에 있어 필요한 조치였다. 5. 〈연대활동중단〉을 요구할 권한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6. 가해자인권을 논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7. 2차가해납용은 2차가해자들이 저질렀다. 8. 2차가해는 없다면서 공개적인 〈2차가해〉를 일삼고 있다. 9. 마치며

〈성폭력 사건 이후,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책임자의 직권으로 결정하기 전에 왜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나?—성폭력사건의 조직적 해결이 아니라 개인적 해결을 위하여 1. 〈피해자 다음〉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2. 가해자의 인권 및 명예,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또다른피해〉가 〈피해〉를 넘어설 수 있는가? 4. 성폭력사건의 구체적인 해결책마련을 위한 몇가지 제안들

Y동지의 질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사회자가 질의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섰듯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같이 간 Y동지가 질문을 했다.

〈세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먼저, 왜 〈또다른피해자모임〉은 초대를 하지 않았는가? 이 토론회는 단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만 열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설령 그렇게 주제를 잡았다하더라도, 진정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또다른피해자모임〉의 구성원들을 초대해서 그들 또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니, 그들과의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과 주 최측과는 다름을 벌였음을 상기한다면 〈또다른피해자모임〉을 초청해서 2차가해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부르주아사법기구에 소송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또다른피해자모임〉 등은 부르주아경찰, 검사와 판사에게 이 사건을 내맡겼다. 이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그리하여 공산주의적 입장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그들 부르주아들은 〈중복〉세력으로 지칭하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부르주아사법기구에 소송을 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왜 가해자이름을 명기하였는가? 이제까지 가해자이름을 명기

하지 않아왔다. 그것은 통상적으로도 그랬고, 가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해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이다. 가해자는 가해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받으면 된다. 징역을 10년 살 일을 사형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그런 부르주아 법리논리보다 몇배는 더 민주적이어야 할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이유로 묻노니 왜 이름을 이제까지 명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명기하게 되었는가? 가해자는 그에 합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욕설과 폭력

그런데 질문 중간에 소동이 있었다.

Y동지가 두번째질문까지 마치고 세번째 질문을 하려고 〈셋째〉하는 순간, 오른쪽 대각선쪽에 앉아있던 20~30대로 보이는 남성참가자(A)가 갑자기 〈이런 XX!〉하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앉았던 접이식철제 의자를 들어 올리려 한다. 치겠다는 것이다. 옆에 있던 다른 남성참가자가 말한다.

돌발적 상황에 당황해 하던 Y동지가 외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꿈쩍 않는다. 다시 외친다. 〈사과하세요!〉 그러자 A가 또 〈에이 XX!〉하며 다시 의자를 들어 올리려 한다. 뒤쪽에 앉았던 다른 젊은 남성참가자(B)가 반말로 가세한다. 〈거 하고 싶은 말이나 해!〉

Y: 〈사과해요!〉

B: 〈잔말 말고 하던 말이나 하라구!〉

A가 밖으로 나가면서 Y동지에게 위협조로 말한다. 〈사과 받고 싶어? 사과 받고 싶으면 따라 나와!〉

사회자, 발제자들 포함 참석한 그 누구도 방금의 욕설과 폭력적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잘했다는 표정들.

사회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저 질문하세요.

Y동지가 분을 애써 가라앉히고 마저 질문하려 하자 누군가 또 탄죽을 건다.

C: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한사람이 두세가지씩 질문합니까?

D: 앞으로 누구든지 발언할 때 소속을 밝히도록 하죠.

5분 남짓한 짧은 장면이지만 사실 이 장면이 공개토론회의 대부분을 담은 축소판이었다. 이 장면으로 지금 사태의 많은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과 관련해서 이견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관용은 없다. 그것은 애써 먼 길을 달려 온 제3자에 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초면불구이다.

도덕감각이 심각한 불균형상태이다. 욕설이 난무하고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편여성〉에게 가해지지 않거나, 성적인 것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통해 〈공대위〉가 지닌 도덕감각의 불균형을 스스로 분명히 드러냈다.

참가자들 대부분에게 여유가 보이지 않았다. 검열과 자기검열의 집단적 히스테리를 앓는 모습이었다. 눈앞에서 치사하고 비겁한 폭력이 행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또는 자신들을 견열하는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 앞에서는 다른 폭력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맹목의 눈들을 하고 있었다. 낯선 마을을 찾아간 느낌이었다. 참가자들은 그런 신경질적이고 새된 반응과 목소리로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공개토론회가 아니었다. 거의 종교행사에 가까웠다. 자신들이 옳고 당당하다면 멀리서 애써 찾아온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신들의 사정을 이해시키고 신념을 전파할 좋은 기회 아닌가? 노동계급의 그것이 아니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다. 관료집단치하의 노동계급의 그것과 닮아있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공포에 쩔든.

Y동지는 토론회내내 분을 달래고 삭이느라 애쓰는 모습이었다.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떤가? 〈충남공대위〉는 그날 있었던 욕설 등의 폭력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가?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성적〉폭력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거나, 정당방위인 것인가?

발언과 답변

질의응답시간이 끝나고 주제토론시간이 되었다.

역시 대체로 자기의견을 내는 사람은 적었다. 발언을 했다. 다음은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이다.

〈〈성폭력〉사건은 너무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연루되는 것은 조심스럽고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가 2008년 작성한 〈페미니즘과 성폭력론〉이 언급·인용되었고, 거의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그후 우리는 〈불세비키-레닌주의자〉 명의로 지난 7월 25일, 〈충남성폭력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성폭력2차가해〉와 관련된 여러사건들이 있었다. 2008년에 사노준과 해방연대 사이에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성폭력논쟁이 있었다. 2011년에는 이른바 〈담배성폭력〉사건이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이다. 비슷한 시기에 다함께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고 역시 진행중이다. 2012년에 정진후전교조전위원장 사건도 매스컴을 타며 떠들썩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

는 〈충남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지금 보듯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들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그 성폭력가해규정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소홀하고, 상대의 반론을 들어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가해혐의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단정하며, 가해자임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이 확인되기도 전에 인터넷실명공개 등의 〈인격적, 정치적〉 형벌을 집행한다.

주관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래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다. 심지어 정파투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기도 하다. 그 〈가해자〉들은 가해혐의를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들이 상식이 없거나 측은지심을 못 느끼는 괴물들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면 혹시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사고틀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 사고틀에 대해서 성찰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중간중간에 발언을 끊는 방해가 있었다. 〈왜 우리가 이런 강의 같은 긴 발언을 듣고 있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려워요〉, 〈왜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데요?〉 등.

발제자가 한 답변은 단호했다. 〈우리의 사고틀에는 문제가 없다. 10여년동안 싸워온 반성폭력운동의 성과이다. 이번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틀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페미니즘과 성폭력론은 노동계급의 사상인가?

페미니즘은 〈인간사회는 사회계급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라는 세계관이다. 이 사상은 맑스주의사상과 다르며, 계급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계급과 계급의 이해가 격돌하는 그 지점에서 후퇴하고 현체제에 순응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급의 이해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할 뿐 노동계급의 사상도 아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은 발제자가 말한 것처럼, 남한에서 〈지난 10여년간〉,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 등을 제기하며 크게 성장해 왔다.

〈남한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남성노동자 1인임금의 실질구매력하락, 여성노동력의 대거 사회진출, 맞벌이시대의 개막, 소부르주아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남성기득권자와의 충돌과 좌절〉 등이 그 사회적 배경일 것이다.

페미니즘 등장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콜론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참고할만하다.

〈여성의제는 대략 19세기중반-프롤레타리아여성들이 노동의 영역에 진입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에 부르주아계급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자본주의의 포악스러운 성공의 영향때문에

중간계급은 난국의 파도에 휩쓸렸다. 경제적 변화는 뿌리부르주아들과 중간부르주아들의 재정상황을 불안정하게 했고 부르주아여성들은 위협적인 상황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가난을 받아들이거나 일할 권리를 얻거나> 이러한 사회계층의 부인과 딸들은 대학, 예술살롱, 편집학교, 사무실 등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열려진 직업의 세계로 쏠아져 나갔다. 과학과 더 높은 문화적 이득에 대한 접근권을 얻고자 했던 부르주아여성들의 열망은 그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여성들은 처음부터 남성들의 견고한 저항에 부딪혔다. 완고한 전쟁은 <편안한 소일거리>를 고수하는 전문직남성들과 일용할 빵값을 버는 일에 쫓겨나온 여성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 싸움은 <페미니즘>—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적인 남성들에게 대항하여 공동의 힘을 모으고자 했던 부르주아여성들의 시도—의 열기를 드높였다. 이 여성들은 노동영역에 들어가게 되자 자신들을 <여성운동의 전위부대>라고 자랑스럽게 일컫기 시작했다. 이 여성들은 다른 분야에 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그들의 어린 자매들의 선례를 따르고 있고, 그 자매들이 물집 잡힌 손으로 빚어낸 결과물을 따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부르주아여성운동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십만의 프롤레타리아여성들이 공장과 상점에 내몰려 산업의 이 분야 저 분야를 떠돌아왔는데, 여성들이 노동에 진출하는 길을 페미니스트들이 선구적으로 개척했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 덕분에 부르주아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자랑해마지 않는 사회에서의 독립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프롤레타리아여성들의 투쟁의 역사속에서 일반적인 페미니스트운동이 프롤레타리아여성들의 물질적인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공헌을 했다는 단 한번의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프롤레타리아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얻은 것은 모두가 노동자계급의 노력, 그중에서도 특히 프롤레타리아여성들 스스로 노력한 결과이다. 더 나은 노동조건과 더욱 풍족한 삶을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 콜론타이,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

이렇게 등장한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역사와 사회주의전통이 상대적으로 짧은 남한사회에서 맑스주의와 대등한 정도의 <진보사상>으로 대접받고 있다. 심지어 마치 노동계급의 필수사상의 하나인 양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산발적인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 모순과 반인민적이고 파괴적 성격이 대중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2012년 10월경 이른바 <담배성폭력사건>을 통해서였다.

〈담배성폭력사건〉은 〈충남사건〉과 무관한가?

이번 〈충남성폭력사건〉에서 〈2차가해〉규정이거나 〈담배성폭력사건〉에서의 가해규정은 모두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교차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2차가해〉규정이 옳고, 그들은 운동권에서 발을 못 붙이게 축출돼야 한다. 라는 입장을 가진 <공대위>측은 〈충남사건〉은 〈담배성폭력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충남사건〉에는 〈담배성폭력사건〉에는 없는 <진짜>성폭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물론 둘은 다른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의 소위 〈1차가해〉는 강간미수에 가깝다. 아직 혐의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가해혐의자의 반론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지만, 피해자 진술서와 징계 결정문을 읽어본 소감은 <강간미수이거나 그에 가까운 성폭력이 있었다.〉이다.

하지만 첫째, 지금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차가해>가 아니라, <2차가해>이다. 실제로 <성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두사건 모두에서 <1차가해자>보다는 <2차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들이었다. 〈담배성폭력사건〉에서 그 사건이 <성폭력사건>임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2차가해자>가 된 당시 사회대학 생회장 S는, <조리돌림하며 고해성사를 강요(받아)···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 하루종일 일어나지도 먹지도 못하는 등 문자 그대로 생활이 완전히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료집 (서울대 <성폭력대책위>사건 및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둘째, 〈담배성폭력사건〉도 <진짜>성폭력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2011년 3월에 발생하여 다음해인 2012년 10월 성폭력 <2차가해자>로 시달림을 당하던 S가 사회대학생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사건을 공개하기전까지, 그 사건은 <성폭력>사건이었다. 피해호소인의 소속 단체 행진(전국학생행진) 그리고 S의 <사노위> 등이 참가한 대책위의 명칭은 <<사노위>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였다.

〈대책위가 제안되었을 때부터 이미 사건이 성폭력으로 규정되었으며, 대책위도 아무 토론 없이 그대로 <<사노위>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로 명명되었으며 가해지목인들은 소명의 기회도 없이 <000성폭력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비난하는 발제문을 제출받고 사과문을 써야했다. 초동모임에서 <사노위>가 사실관계확정과 사건성격규정토론을 제안하였으나 <공간>은 이를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묵살하였고, <사노위>가 여기에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대책위진행절차는 B, 수진, D 순으로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자료집>

S가 소속된 <사노위>가 <성폭력>규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엔

〈사노위〉도 〈사실상 성폭력사건과 다름없는가-피해구도를 받아들〉 하면서 이 〈폭력적인〉 대책위는 가동되었다.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은 〈행진〉만이 아니라 〈사노위〉자신의 정치적 신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전에 우선 사과부터 하자는 앞뒤 순서가 거꾸로 된 방식이었음에도 큰 충돌없이 합의되었다. 이는 공간의 진행자가 가지고 온 안을 그냥 가결시키는 식으로 회의를 주도했기 때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일하게 이런 일방적인 방식에 이견을 제기했던 〈사노위〉 또한 성격규정 이전에 사실상 성폭력사건과 다름없는가-피해구도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자료집〉

셋째, 〈담배성폭력사건〉을 해결한 것은 〈운동권〉이 아니었다. 대중의 전국적 관심이라는 햇볕을 받아 이제 누구의 눈에도 명약관화해진 그 사건을 보며 마치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는 듯이 〈그 사건은 〈진짜〉성폭력이 있는 이 사건과 달라.〉라고 말하지만, 그 사건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든 것은 운동권이 아니었다. 그 사건은 언론과 대중이 해결한 것이다.

마치 습한 곳에 피어난 곰팡이가 강렬한 햇볕을 받아 이내 사라지듯이, 광범한 대중의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그토록 완강하던 성폭력론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대중적 관심을 받고 비난이 쏟아지자 이렇다할 저항도 없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린 모습에서도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이 얼마나 비겁한 허위의식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만약 S의 영웅적 인내와 투쟁이 없었더라면 그리하여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적 관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만약 2차가해자로 몰리던 S가 대책위를 박차고 나오지 않고 그 사건의 공개를 결정하지 않고, 그 사건이 전국적 관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사건 또한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의 전리품으로 또 한 사람의 인생과 운동을 잡아먹으며 끝났을 것이다. 아찔하고 끔찍한 상상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그 사건이 공개되어 그 코미디성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때에조차, 이른바 〈전문가〉중 한 사람은, 대중의 그러한 반응과 판단은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의 비과학성과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ㄱ씨가 피해를 주장하게 된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일단 〈담배녀〉라는 이름부터 붙여 사건을 단순화하고, ㄱ씨 개인과 페미니즘 전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유독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남친, 졸업배 피우며 〈헤어지자〉...성폭력?〉, 경향신문,

〈진보의 가부장제를 비판한 〈옴빠는 필요없다〉의 저자이자 여성학자인 전희경씨는 〈많은 사람들이 ㄱ씨가 피해를 주장하게 된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일단 〈담배녀〉라는 이름부터 붙여 사건을 단순화하고, ㄱ씨 개인과 페미니즘 전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유독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남친, 졸업배 피우며 〈헤어지자〉...성폭력?〉, 경향신문,

2012년 10월 28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론〉은 〈보위〉되어야 한다?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의 폭력성과 파괴력 그리고 그 비논리성은 사실 그 〈전문가〉들도 이미 알고 있다. 발제자 이은심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파괴와 학대를 하는 가해자도 있고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가해자도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성폭력사건은 크게 비난받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운동사회에서 성폭력가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정치가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 2차가해자가 되는가? 역시 이은심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2차가해의 경우 어디까지가 성폭력인지 어디까지가 성폭력이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문제적인 행동이라고해도 피해자와의 친분이 나 조직내 역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단순경고로 그칠 것인지 2차가해로 징계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2차가해자로 제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건접수를 받은 담당자나 책임자인 경우가 많은데, 악의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사회통념을 따라 피해자를 비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가해자가 조직내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가해자를 두둔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직의 미래나 평판을 걱정하여 사건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1차가해자를 두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거나 사건해결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2차가해로 제소되기도 한다.

...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 관여하다가 2차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에 느끼는 억울함이나 피해자에게 가지는 원망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강조는 인용자)

자, 생각해 보자.

왜 우리는,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두둔할 의사가 없더라도, 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 관여하다가, 사건해결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수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1차가해자를 두둔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것을, 기어이 〈성폭력〉으로 판단해서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건강부회의 의지를 써서 〈극심한 고통, 죄책감, 자기파괴와 학대, 정신과 치료, 정치가로서의 생명 끝남〉이라는 잔인한 형벌을 주어야 하는가? 이거 뭐가 끔찍하지 않은가? 누가, 왜, 그런 권리를 가지려 하고 행사하려 하는가? 이은심대표는 말한다.

〈어떠한 노력이라도 성폭력피해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정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이미 원래의 핵심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다.〉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오류가 있더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은 의심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가 보위되기 위해선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뒤틀린 〈인권감수성〉과 〈정치감수성〉

우리의 도덕감각과 〈인권감수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치/계급감수성〉은 지금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회의 주된 역할이 남성에게서 나온다는 비과학적 인식이 횡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의 억압과 피해만 과장, 부각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잘못된 작은 잘못된 용납되지 않고 잔인하게 그 책임을 묻는다. 한편 남성과 남성 사이, 선배-후배 사이의 폭력이나,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둔감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충남의 〈공개토론회〉에서 듣고 당한 욕설과 반말 그리고 물리적 위협은 별문제 안되는 것처럼 치부하는 〈공대위〉와 그 참가자들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피해자나 피해자측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나 가해자측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은 그대로 용인된다. 폭력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폭력을 거리낌 없이 행사한다. 이번 사건 이후 소위 〈2차가해자〉에게 가해진 욕설과 인격을 짓밟는 잔인한 말들 그리고 물리적 폭력은 일그러진 우리의 균형감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모습은 〈담배성폭력〉사건에서도 고스란히 있었다. 피해를 호소한 A는 가해자로 지목한 이들에게 윙크하기 민망스러운 막말을 함부로 내뱉었고 당시에 그것을 저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아무리 그 〈2차가해자〉들이 후진적이고 저열한 인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되거나 자신들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계급적 토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 진보적이지는 않다. 특히 혁명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항상 후진적이다.

그러는 사이 정작 예민해져야 할 〈정치·계급 감수성〉은 엉망이 되고 있다. 〈선거에서 부르주아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라크와 리비아 등에 대한 제국주의침략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심지어 제국주의편을 들거나, 북핵에 대해 방어하지 않고 양비론이나 제국주의 편을 드는 정치적 배신행위들〉이 있지만, 그런 반동적 사상과 실천에 대해서는 〈여유풀고 관용적〉이다. 굳이 계량한다면, 위에 언급한 정치적 사안은 최소 수백 많게는 수십만의 애꿎은 목숨이 좌우되는 것들이다. 어느 당에서는 당기위를 소집해 여럿을 제명시켰는데, 대부분 성폭력 〈2차가해자〉들이라고 한다. 그 당은 부르주아와 계급연합을 추구하고, 제국주의 폭격을 지지하며, 북핵에 대해서 단호히 남한정권·미 제국주의와 같은편에 서지만, 그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거나 당기위가 소집되거나 제명자가 나온 적은 없다고 한다.

계급적 단결과 노동자민주주의를 위하여

성적(sexual)호기심, 성적탐색, 성적호소, 성적경쟁 등은 우리의 일상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그래서 쉽게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상대를 쉽게 공격할 무기를 제공한다. 정치 그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적수의 신뢰를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 때로는 성적인 스캔들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쉬운 만큼 해악도 많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비과학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리고 우리 것도 아니다. 클린턴 스캔들 사건이나,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어산지를 상대로 성스캔들 캠페인을 벌인 것을 보라. 결국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것이 아니다. 노동계급의 단결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대체로 반동적이다.

노동자민주주의를 사수하자. 성폭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욕설과 왜곡날조 등의 언어폭력 그리고 물리적 폭력 등 모든 폭력에 반대하자. 계급적 바리케이드를 사수하자.

3. 민주노총충남본부 제대로 서야 한다. 제대로 할 수 있다.

지역노동자, 민주노총충남본부자유게시판, 2013.7.5

민주노총충남본부가 제대로 순서를 찾아가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과 요구를 실현하는 대중 조직이다. 개인이 아닌 조직이다. 그리하여 민주노총충남본부는 그 골간에서 지역에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그 중심에서 조직책임자인 본부장과 간부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서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진보적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선거를 통해, 직접투표로 선출되어 책임과 권한이 마련된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00, 충남대련 김00 성000사건을 접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간부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을 보고 1차와 2차 가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다. 공대위가 먼저인지 진상조사가 먼저인지 생각해 보아야 했다. 만약 다른 조직대문제로 본다면 통합진보당에서 진행된 내용으로 정리하고 끝내야 했다. 그렇지 않고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공대위를 구성했다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목적, 기간, 문제해결 전까지의 역할까지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민주노총의 설 자리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

만약 조직내(외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 사건은 외부에서 민주노총에 접수된 사건이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지 않았나? 진상조사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이 순서였다. 사실여부를 누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피해자중심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 무턱대고 피해자 있으니 무조건 들어주고, 민주노총에서 간부로 사건처리를 제대로 했나?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조사되고, 보고되고,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접촉을 했는지, 가해자에게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등 그 결과는 어떻게 수집된 정확한 사실관계인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면 다시 조사해야 한다.

다시한번 민주노총에 책임자와 간부를 비판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뒤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가길 바란다.

민주노총간부의 편의주의가 아닌가? 민주노총간부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어떤 조사행위를 공정하고 실력있게 했는지 의심되고, 또한 매뉴얼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 처음 담당했던 민주노총충남본부간부가 교체되고, 민중의힘 회의에서 실명거론문서를 돌려 문제를 확대시켰고, 이에 책임있는 최본부장은 질서있게 회의를 다시 정돈하고 소집해야 했는데 제대로 회의도 운영하지 못하고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노총충남본부운영위에서 보고하면 끝나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일은 잘 처리되지 못하고 2차가해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개념과 규정이 없으니 억울해하는 속칭 2차가해자들이 <포다른피해자모임>을 만들어 천막농성진행, 1인시위진행 등 나름의 시위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민주노총충남본부 다른 간부들은 힘이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자유게시판에서 편파적으로 글을 삭제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욕도 먹고, 문제해결은 꼬여가고, 민주노총답지 못한 모습이다. 노동자답지 못한 모습이다. 충남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며칠전에는 민중의힘이라는 연대조직을 깨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첫단추부터 잘 끼워야 했지만 민주노총충남본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

다.

민주노총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제대로 대응했는가? 조사는 제대로 했는가?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신고인 등 내용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노총중앙에 보고 했는가?

이것은 내부에서 발생했을 경우이다. 하지만 연대단체에서 벌어진 사건을 민주노총으로 가져왔을 경우는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사건에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절차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충남본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해결의 기미조차 제대로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고소까지 했고 법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1차성폭력이나 2차가해에 대한 판결이 민주노총이 예상한 것같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 2차가해자를 비롯한 가해자라는 사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행동도 민주노총똥이 되었다. 현재 강압적으로 결정할 것을 따르라고 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진실한 내용에 대한 접근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2차가해운 윤회면서 일을 더 크게 벌려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맞추어야 한다.

민주노총매뉴얼을 기본으로 제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해 본다. 민주노총조직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에 대해 접수하고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핵심은 민주노총이 책임있게 다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처리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용기를 가져야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 노조내 성폭력예방을 위한 매뉴얼규정 내용이다.

제6조(접수 및 처리절차) 민주노총은 성폭력 및 폭언폭행 피해자(대리인)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민주노총여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징계는 민주노총상벌규정에 따르되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이수 등을 부가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후 피해자의 요청시 징계결과를 7일이내에 공표 한다.

4.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왜곡된 피해자중심주의로 진실을 가리우고 또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21세기판 마녀사냥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이른바 <공대위 공개입장문>에 대한 반박문

또다른피해자모임, 2013.6.19

이른바 <공대위>의 공개입장문의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기에는 그 허위사실과 왜곡논리가 끝이 없어, 일단 오늘 우리의 선명한 입장부터 밝힌다.

1. 우리는 이른바 <공대위>가 공개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피해자중심에 서있는 듯 자기포장을 하는 위선적 작태야말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단체는 여성인권을 운운하면서 또다른 여성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진보운동을 운운하면서 진보운동동지들을 매장하고 연대운동을 파괴하며, <피해자중심주의>의 진의를 왜곡하고 술한 허위와 음해로 또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가장 위험한 유해집단임을 만천하에 확인한다. 만일 이런 식의 21세기판 마녀사냥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활동가들, 시민들이 <성범죄자>로 낙인되며 사회정치적 생명이 절단나겠는지, 그러다가 심각한 이들이 목숨까지 끊지는 않을지를 생각하니 치밀어오르는 격분을 참을 수 없다. 우리는 <공대위>야말로 지금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공연히 실명까지 적시하며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범죄를 저지른 단체이고 지금도 사건을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회운동가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가장 질이 나쁜 유해집단임을 앞으로 날날이 폭로할 것이다.

2. <공대위>가 전가의 보검처럼 사용하며 뻔뻔스럽게 <피해자중심주의>를 왜곡해 악용함으로써 그 본래의 소중한 내용이 오히려 훼손될까 두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런 경우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대위>처럼 언제든 왜곡해 쓸 수 있는 <피해자중심주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진실이다. <피해자>의 말이 진실인데 <가해자>의 말이나 힘에 눌려 왜곡되어서도 안되지만, <피해자>의 말이 진실이 아닌데 <가해자>를 공격하려고 정당화되어서도

안된다. 사건을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전제해야 할 것은 <진실>이지 <피해자냐 아니냐>가 아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사회경험상 <피해자>의 진실이 <가해자>의 말과 힘으로 왜곡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 제기된 것이지, 지금처럼 또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일부운동권들이 다른운동권들을 정파적으로 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쓰는 음해모략의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공대위>가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중심주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여성운동적으로, 여성인권적으로 가장 위험한 반여성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신랄히 규탄한다. 우리는 앞으로 객관적인 실제적 진실을 밝히면서, <공대위>의 허위와 위선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고 여성운동, 여성인권을 도리어 훼손한 반여성만행을 강력히 단죄할 것이다.

3. 사실상 두개의 <당기위원회>가 정파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심판하였다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당기위의 최종판결 이전에 이미 결과는 나와 있었고 당기위의 조사와 판결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공대위>는 당기위조사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성범죄집단>으로 부당히 규정하고 통합진보당 당기위와 긴밀히 공조하며 당기위의 황당한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당기위의 조사위원회에 공대위성원이 참여한 것이나, 총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을 겸한 당기위원장이 공대위와 함께 사건을 안전으로 논의한 것만 봐도 명백하다. 당기위는 말그대로 당내 <재판기관>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에 사실상 피해자의 대리인격이자 우리에게 대한 명예훼손의 가장 극렬한 집단의 성원을 참석시킨다든지, 소속 단체를 보호하고 연대운동을 촉진해야 할 연대체의 집행책임자가 초보적인 민주적 조직운영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비소속단체가 소속단체성원들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방조한다든지 하는 분별력없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 당기위의 판결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통합진보당분당사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통합진보당은 도당까지도 오직 패권에 눈먼 종파적이고 정파집단들에 의해 <진보정당의 대의>나 <진보운동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지 오래됐다. 진보운동의 소중한 동지들을, 객관적 사실규명에 대한 초보적인 원칙과 노력도 없이 이른바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전가의 보도를 들어 <성범죄자>로 낙인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악질적인 행태에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을 위해 그간 숱한 밤을 지새며 피땀을 바치고 헌신분투했던 나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치솟는 울분을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사전에 판결을 계획한 <기획자공대위>와 실제로 판결을 통과시킨 <거수기당기위>의 더러운 커넥션을 앞으로 남김없이 밝혀내고 온천하에 고발할 것이다.

4. 우리는 진보운동내의 갑의 지위에 있는 상층의 패권적 작태가 이제 는 을의 지위에 있는 기층의 동지들을 쳐내다 못해 <성범죄집단>이라는 주홍글씨를 찍어, 공안당국을 능가하는 마녀사냥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을 절단내려는데 가장 심각한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운동가로서의 순수했던 초심은 이미 오래전에 온데간데 없고 또다른 운동권내 갑이 되어 벌였던 행태들을 일일이 거론하면 24시간 밤을 새도 모자란다. 가령 우리는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책임자가 한 남성동지를 부당히 구타했던 사례나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집행자가 모성추문사건에서 보였던 이중적 작태를 똑똑히 기억한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 여성동지가 지금 이 진보운동갑들에게 폭행당한 사례까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확인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운동권들이 운동권갑들의 횡포와 만행에 한발 물러서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행태와 더 큰 야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심장깊이 각인하였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우리는 운동권갑들이 톨톨뭉쳐 어떠한 협박과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한치의 굴함없이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사회정치적 명예를 지킬 것이며 운동권갑들이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반운동적 작태들의 악순환을 이 기회에 반드시 끊어버릴 것이다.

5. 우리는 생명보다 귀중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킨 범죄자들, 인권유린자들이 해임되고 21세기마녀사냥이 바로잡힐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곳곳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 진보운동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키며 분열과 혼란의 원천지가 되고 있는 <공대위>를 즉시 해체하며 <공대위>의 책임자들은 공식사과하고 주된 책임자와 실무자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충남민중의힘에서 <지역연대활동중지요구>라는 진보운동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황당하고 수치스런 의제결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 소속단체를 보호하고 연대운동을 촉진하기는커녕 열심히 실천하는 동지들을 21세기마녀로 사냥하며 운동대오의 분열을 조장한 이 종파적이고 한심한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셋째, 잘못된 당기위의 판결을 무효로 하며 당기위원장과 조사위원을 해임, 징계해야 한다.

<공대위>해체·책임자구속! 민중의힘책임자들해임! 당기위결정무효·당기위원징계!

<공대위>, <충남민중의힘>, <당기위>에서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파렴치하고 종파적인 운동권갑들에게 고한다. 사람을 잘못 봤다. 아무리 우리가 운동권을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사회정치적 생명, 명예, 자존심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싸움에서는 단한치도 물러섬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끝까지 맞서 싸운다는 것을 운동권갑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권갑들이 저지른 죄과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며 사회운동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특히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 철저히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운동권갑으로서 행세하다가 어느새 이 그릇된 세상의 갑들을 닮아있는 그대들의 조포한 모습에 스스로 전율하라!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상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켜라! 운동권갑들의 횡포무도한 작태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른바 <공개입장문>은 갈수록 당신들을 옥죄는 준엄한 정치적 사형선고장이 될 것이다.

5. 충남민중의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성명

진보의 슈퍼잡, 이제는 마음대로 <지역연대체>마저 깨버리는가!

코리아충남연대, 2013.7.4

7월3일, 충남민중의힘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진보운동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역사는 이날을 지역연대운동의 사망선고일로 기억할 것이며, 일부활동가와 소속단체를 쫓아내지 못해서 스스로 연대운동과 연대단체를 파괴한 진보슈퍼잡의 비이성적 행태를 낱알이 기록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해서 충남의 진보잡들은 그동안 <연대>운동이 아닌 <분열>운동을 추구했으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준이 다르면 단체 하나쯤은 언제든지 깨버릴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충남민중의힘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연대단체>이지 분열을 부추기고 활동가들을 내치는 <분열단체>가 결코 아니다. 5월 14일에 이어 또다시 일부활동가들에 대한 <연대활동중지>와 <소속단체배제>라는 비상식적 안건을 다수단체의 힘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한 사실은 이미 충남민중의힘이 진보잡들에 의해 균형있는 지역연대체로서의 의의를 상실했음을 말해주며, 과연 누가 단결을 원하고 분열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확인시켜주었다. 누가 누구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누가 어떤 단체를 배제시킨단 말인가! 활동가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고, 소속단체의 자주권을 침해할 권리와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소속단체로서 지역연대운동의 분열을 부추기는 안전상정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지만, 정확히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연대단체를 강제 해산시켜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공대위>를 조직하여 일방적 왜곡주장과 우리단체 성원들의 실명을 적시한 명예훼손문서를 유포, 확산한 엄중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대위해체와 주요책임자가 사과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연대운동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를 부당하게 <성범죄집단>·<2

차가해자>로 규정하는 활동가나 단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권력과 자본의 탄압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함께 비를 맞으며 싸울 것이다. 실제 우리는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등의 공안탄압을 받은 단체, 지역의 활동가와 관련하여 충남민중의힘 소속 어느 단체도 하지 않았던 <연대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 관점이며 정신이다. 지금은 진보잡들의 횡포에 의해 송고한 연대정신이 깨지고 연대단체가 강제 해산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진정한 연대의 원칙과 정신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7월3일, 역사는 이날에 벌어진 분열의 책임자, 진보슈퍼잡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누가 연대정신을 훼손하고 파괴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6. 코리아충남연대해산에 부쳐

이른바 <공대위>의 야만적 망동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다른피해자모임, 2013.11.26

코리아충남연대는 지난 11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공식 결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정사항을 11월 9일 코리아연대에 통보하며 산하단체들도 자동탈퇴가 완료되었음을 재차 확인한다. 이는 이성을 상실한 이른바 <공대위>측의 계속되는 야만적 망동에 일일이 맞대응하는 것이 진보운동과 지역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자기희생적인 조치이다. 더불어 2명의 사건관련자는 2012년 11월경에 이미 소속단체를 스스로 탈퇴완료하였다는 사실도 재확인한다.

우리는 <공대위>측의 이전투구판을 만들려는 기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아예 자기희생적으로 우리단체들로 구성된 임의의 연대체를 해산하지만, 이른바 <공대위>측은 종파패권적인 <진보갑>부류들을 보호하려고 지역의 공인된 공공의 연대체인 충남민중의힘을 해산한 사실을 역사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 <공대위>측이 비폭력적으로 항의하는 우리의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어버이연합>식으로 온갖 폭력과 욕설을 퍼붓고 홈페이지의 비판의견들마저 무단삭제한 사실도 역사는 잊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충남본부대대 사상최악의 수치스런 결정을 내리고도 모자라 후안무치하게 민주노총에까지 끌고 가 민주노총마저 사상유래없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게 만든 사실도 이미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민주노총충남본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파적인 사이버운동권과 패권적인 <진보갑>부류들이, 정작 절박한 실천적인 진짜 <공대위>보다 운동권동지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반박근혜·반독재투쟁대열에서 떼어내려는 반운동권적인 이른바 <공대위>놀음에 골몰하는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차가해>라는 여전히 논란중인 미확정<개념>을 악용해 십수년간 오직 실천투쟁에만 헌신하며 투옥도 마다하지 않았던 동지들을 실천대열에서 떼어내려는 행위에 대해, 과연 공안파쇼당국이 어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지 이른바 <공대위>측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심한 추종자들은 전을

하며 자기반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역사가 이른바 <공대위>의 마녀사냥을 주도한 종파패권주의자들과 또 그에 부화뇌동한 추종자들의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망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을 확신한다. 그 역사적 기록을 위하여, 우리 9인은 지난 과정에서 최만정, 오은희, 이연재를 비롯한 종파패권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한 모든 야만적이고 황당한 망언, 망동을 실명과 함께 낱알이 비망록과 영상자료로 작성해 머지않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코리아충남연대는 해산되었지만 그 조직성원들이 일관되게 추진하였던 통합적이고 전투적인 진보운동과 지역운동, 연대운동의 기치는 결코 내릴 수 없다. 이후 사이버운동권의 전형인 이른바 <공대위>측이 어떤 황당한 시비질도 부릴 수 없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진보적인 대중운동, 연대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정의로운 대열에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역사가 부여한 우리의 임무를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처럼, 어떤 야만과 불의에도 굴함없이 전진하는 견결하고 순결하며 실천적인 진짜진보운동과 그렇지 않은 <사이비진보운동>이 무엇인지를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7.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노릇 그만하고 연대파기 철회하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2014.5.9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26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정의로운 가치를 선명히 들고 어떤 분파와 패권도 반대하며 오로지 실천에만 앞장서는 참된 연대체>라고 내외에 선포하며 당당히 출범하였다. 우리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패권적·분파적으로 어떤 단체를 장악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적이 결단코 없다. 모든 것을 대중에게 돌려주는 원칙으로 다양한 선전·교육사업에 매진하며 실천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새로운 국제연대영역을 개척하여왔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국민파업 성사를 위해 우리역량을 총동원하였으며 민주노총을 국제적으로 지지·엄호하는 투쟁에 우리의 시간·노력·자금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를 고립압살하려는 충격적인 행태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코리아연대가 민주노총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단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민주노총은 <연대파기>라는 진보운동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우리 항의방문단에게 폭언, 폭행까지 자행한 망동에 대해 노동계급적, 변혁적 원칙에서 스스로를 심각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전체노동계급을 대표하고 단결과 연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민주노총이 정파적이고 종파적인 세력에게 휘둘러 함부로 <연대파기>를 결정·집행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민주노총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그 어떤 노동조합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고 여전히 진위공방중인 사건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온 동지적 연대단체와의 <연대>를 파기하고 민중의힘에서 고립·제명시키려는 행태는 진보운동에서 전례가 없는 폭거이며 민주노총이 <운동권의 슈퍼갑>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징표로 될 것이다. <사회적갑>과 싸우다가 어느새 <운동권갑>이 된 민주노총,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민주노총을 두고 과연 어떤 진보단체·개혁단체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함께 연대하려고 하겠는가. 그동안

집회현장에서 민주노총이 수없이 외쳐온 <단결>과 <연대>는 말로만의 헛소리였던 말인가.

마치 미국이 <국제헌병>을 자처하며 북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처럼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을 자처하며 코리아연대를 운동권내에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내종파들이 동지적 연대단체를 고립압살하려는 월권과 횡포에 코리아연대가 정당방위적인 자위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옳다. 우리의 자위적 조치는 진보진영의 혁신과 참된 연대기풍을 세우는 투쟁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민주노총이 동지적 연대단체를 매장하는 운동권내 가장 큰 금기를 깬 조건에서 그보다 작은 금기를 깨며 운동권내종파들과 전면적인 사상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내 종파적인 세력>을 엄격히 구분하고 민주노총내에서와 진보진영에서의 대표적인 종파들을 제거하는데 과녁을 집중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연대파기>를 철회하지 않고 끝끝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순간, 코리아연대는 가능한 모든 선전, 조직,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내종파세력들과 진보진영내대표종파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코리아연대는 하나를 받으면 열로 돌려주는 원칙으로 제국주의·파시즘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온, 단 한번도 굴복한 적이 없는 불굴의 조직, 전투적인 단체이다. 우리는 반전반미·반박근혜투쟁을 사활적으로 벌여야 할 때, 동시에 민주노총내, 진보진영내 종파들과의 사상전도 동시에 벌이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운동권내부의 적인 종파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운동이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경험의 총화이자 이번 사건을 겪은 우리들의 결론이다. 실사이 과정에서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종파들을 청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없이 기꺼이 그길로 나아갈 것이다.

8. <농민회성폭력>사건과 황당한 <연대파기> 책임지고 전농지도부 총사퇴하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2014.5.17

코리아연대는 15일 전농으로부터 우리와의 <연대파기>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고공문을 받고, <운동권잡>들의 월권·매도·횡포·2중잣대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넘어 그들에 의해 농민대중단체가 갈수록 쇠퇴·몰락하는 현실에 대한 참담함과 서글픔을 감출 수가 없다. 전농공문은 <2013년12월10일> 전농14기 2차년도 9차중앙상무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충남도연맹의 요청으로 충남대련과 21세기코리아연대와 연대 사업을 중단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함>이라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전농이 더 이상 300만 농민들의 대표조직이 아닌, 지도부를 장악한 일부 종파세력의 정파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21세기코리아연대>라는 있지도 않은 단체이름을 사용하거나 황당하게도 결정사항을 5개월이 지나서야 통고하는 것만 보아도 전농의 사업작풍, 곧 전농일꾼들의 천박한 수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문제는 단체의 생명과도 같은 <연대>문제를 쉽게 결정한 것이고 그 이유와 근거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권잡>의 통고에 <운동권을>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조폭식협박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서 서글픔까지 느낀다. 전농이 갈수록 왜소해지고 그 운동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전농은 우리에게 황당한 <연대파기>결정과 통고를 보낼 대신 우선적으로 운동권내에 충격을 주며 화제가 되고 있는 <농민회성폭력>사건에 대해 책임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는 것이 순리이며 상식이다. 이 사건은 아산농민회간부가 충남대련의 여성을 포함한 간부들을 농민회 사무실로 유인하여 성폭행·폭행·협박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실행까지 선고받은 가해자는 그 어떤 제재나 징계도 받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사건현장에서 방조하거나 묵인·외면하였던 이들이 현재 전농의장과 충남도연맹의장을 맡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농은 1년4개월간 이 사건을 방치하고 외면하면서 오히려 그보다 작고 연관도 없는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연대파기>운운하는 스스로의 <2중잣대>를 심각히 돌아봐야 한다. 전농은 이제부터

<형평성>·<공정성>·<합리성>이란 표현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이 자행하고 있는 연대파기의 월권과 폭언폭행의 횡포가 보여주듯이 전농의 핵심문제도 전농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관료적으로 틀고 앉아 패권적 행태를 부리는 종파세력들에 있다. 우리는 전농과 전농내종파세력들을 엄격히 구분하고 갈라보며 운동권내의 암·독버섯과 같은 존재인 종파세력들과의 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여나갈 것이다. 운동의 본질이자 생명인 <연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고 그것도 2중잣대를 들이대며 힘으로 관철하려는 <운동권잡>·종파세력에 맞서 우리같은 <운동권잡>이 반종파투쟁을 벌이는 것은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이다. 우리는 우리대오의 생명과 같은 존엄과 연대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굴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코리아연대는 전농이 <농민회성폭력>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당사자인 가해자를 즉시 제명하며 실질적인 방조자인 현전농의장, 현충남도연맹의장을 즉각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운동권헌법>·<운동권경찰>노릇과 전농의 <2중잣대>에 맞서 민중의힘에 <대중단체를 장악하여 우리운동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종파세력들의 문제>를 집중제기할 것이다. <운동권잡>들의 월권·매도·횡포·2중잣대라는 불의에 맞선 정당한 투쟁에서 우리는 결코 조금도 굴함없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하나를 받으면 열로 돌려주는 원칙,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것이다. 우리역량이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운동권내종파세력들을 완전히 박멸하고 우리운동이 재생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전농의 종파적인 지도부는 300만농민이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9.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등의 건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2014.5.15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경 유 : 사무처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 - 002 (2014.05.15 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등의 건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재환에게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재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재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 의장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혼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재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통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재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건>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재환폭행강요건>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따라서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재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 및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고, 2013년 9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충남시국회의(준)> 주최의 행사에 참여하는(오마이뉴스 9월9일자)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성폭력법>을 방조·묵인·비호하는 것은 명백한 <추가가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성폭력가해자 박정우와 이에 적극적으로 방조한 이연재를 농민회에서 즉시 제명조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폭언·폭행·협박 방조자이자 추가가해를 저지른 장명진은 충남도연맹의장직에서, 당시 정책위원장으로 이 사건처리를 총괄하며 결국 추가가해가 일어나게 하고 사건처리를 무마하려고 한 권혁주는 충남도연맹사무처장직에서 즉시 사퇴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는 피해자 한지은과 김재환, 그리고 충남대련에게 공식사과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5. 더불어 충남도연맹이 문제삼는 <김재환사건>을 바로 잡습니다. 충남대련은 2012년 9월 사건을 접수한 후, 당시 피해자가 사건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간부를 바로 활동정지시키고 2013년 1월에 해임시키는 최고수위의 징계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았습니다. 이를 충남대련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초 아산농민회 이연재가 개입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폭행사건까지 발생되었으며, 관련해서 억울한 <2차가해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또한 <김재환사건>은 처음부터 코리아연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미 충남대련이 해임징계조치를 한 조건에서 더이상 <김재환사건>과 <충남대련>을 연관짓거나 표현하는 것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계속 유포되고 공론화될 경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가장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첨부자료5 김재환해임공고문, 전농충남도연맹발송공문)

6.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련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다음의 두가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첫째, 충남대련은 민주노총충남본부가 이 사건을 다룰 공대위를 구성하고 충남본부대의 위원회에서 결의하며 민주노총여성위원회와 민주노총본부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제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충남대련은 상급단체인 한대련을 통해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제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충남대련이 취할 이 두가지 조치는 충남본부와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을 다루며 취한 전례에 따른 것으로서 이 두가지 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민주노총충남본부와 민주노총에 따진 후에 그 결과에 의거해 제기하기 바랍니다. (첨부자료6 충남본부대대결정과 민주노총중집결정)

7. 충남대련은 전농, 전농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가 4항의 세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이 3단체를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자료

- 1 충남대련 간부징계건 공지
- 2 충남대련, 아산시농민회에서 벌어진 폭력·협박사건 해결요청
- 3 충남대련, 김00사건조치에 대한 사실확인요청과 충남대련의 입장 발표
- 4 충남도연맹, 충남대련 요청서에 대해 답변
- 5 충남대련, 한지은집행위원장 폭행·협박사건 해결요청(2차)
- 6 충남대련, 아산농민회간부의 폭행·협박사건 해결요청
- 7 한지은, 아산시농민회에서 벌어진 폭력·협박사건에 대한 해결요청
- 8 한준해·지영철·한지은·차상엽·남창우·한혜인·방진호, 공대위 공문에 답변
- 9 <통합진보당 충남도당당기위원회 제소장>에 관한 (1)남창우·(2)방진호·(3)지영철·(4)한준해·(5)한지은의 소명서
- 10 <이동근>사건 당기위제출 소명서(1)
- 11 <이동근>사건 당기위제출 소명서(2)
- 12 <이동근>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입장
- 13 공대위, 충남민중의힘에 <성폭력 2차기해자> 활동중지요청
- 14 충남민중의힘, <2차기해자> 활동중지요청 논의
- 15 통합진보당여성위, 당기위에 제소된 성평등강사 교육자격중지 통보
- 16 또다른피해자모임, 공대위의 <활동중지요청의건>공문에 대한 입장발표와 항의
- 17 또다른피해자모임, <우리의 실수된 명예회복을 위한 요구서한> 발표
- 18 <이동근>사건 징계무효입장과 재심청구
- 19 공대위, 공주민협에 2차기해자목 협박
- 20 코리아충남연대·충남대련, 충남민중의힘 상임대표·집행위원장 사임요구
- 21 코리아충남연대·충남대련, 충남민중의힘 대표자회의 소집요구
- 22 코리아충남연대·충남대련, 공대위소속단체들 공대위탈퇴와 사과요구
- 23 또다른피해자모임, 통합진보당충남도당 당기위원장 사임요구
- 24 또다른피해자모임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끝장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25 또다른피해자모임, 이른바 <공대위 공개입장문>에 대해 반박
- 26 성폭력2차기해남용으로 인한 인권피해사례 워크샵 음성(QR코드)
- 27 또다른피해자모임, 통합진보당 당기위결정에 대한 항의방문
- 28 충남본부, 또다른피해자모임 게시물 충남본부자유게시판에서 임의삭제
- 29 또다른피해자모임 <충남본부의 글삭제·여론차단에 강력히 항의한다>
- 30 또다른피해자모임 <운동권잡들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31 또다른피해자모임 <진보갑>
- 32 또다른피해자모임 <진보갑, 스스로를 돌아보라>
- 33 코리아연대, 충남민중의힘 강제해산 결정에 대한 성명
- 34 또다른피해자모임 <우리는 왜 당기위를 거부하고 탈당하였는가>
- 35 또다른피해자모임 E-Book <2차기해는 없다> 발간(QR코드)
- 36 또다른피해자모임 <우리는 왜 민주노총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가>
- 37 또다른피해자모임 <우리는 왜 <2차기해는 없다>라고 주장하는가>
- 38 공대위의 천막난입폭력 직전 기자회견
- 39 공대위, <또다른피해자모임>천막 폭력난입 (QR코드)
- 40 또다른피해자모임 <공대위의 천막파손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41 공대위, <또다른피해자모임>천막 기물파손
- 42 또다른피해자모임 <계속되는 폭력의 끝은 어디인가>
- 43 또다른피해자모임 워크샵 <민주노총 반성폭력 매뉴얼을 기준으로 본 충남 지역 성폭력사건의 문제점과 과제>(QR코드)
- 44 또다른피해자모임 <천막농성 한 달을 맞은 우리의 입장>
- 45 또다른피해자모임 <천막농성은 접지만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46 공대위, <충남지역내 성폭력사건 기해자 및 2차기해자> 사과지도요청
- 47 아산농민회 박정우, 폭행건으로 벌금 30만원 판결
- 48 공대위, <충남지역내 성폭력사건 기해자 및 2차기해자> 사과지도 재요청
- 49 공대위, <2차기해매도> 스톱카식 1인시위
- 50 이동근 통합진보당 <제명무효>확인
- 51 충남본부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및 대의원명단
- 52 공대위, 노동자대회에서 피켓시위·유인물배포
- 53 또다른피해자모임 <코리아충남연대해산에 부처>
- 54 민주노총, 충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치 요청
- 55 코리아연대, 민주노총공문<민주기획1108-068호>에 대한 답변
- 56 박정우, 징역4개월 판결(1심)
- 57 민주노총, 코리아연대가 요청한 간담회수락
- 58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의 간담회수락 환영
- 59 진보노동뉴스, 코리아연대 항의방문단 폭언폭행에 대한 사실확인
- 60 코리아연대, 항의방문단 폭언·폭행 사실확인 및 해당상근자 엄중문책 요구
- 61 민주노총, 본지가 폭행... 코리아연대 항의방문시
- 62 코리아연대 <폭언폭행>·<연대파기> 민주노총은 각성하라!
- 63 코리아연대, 메이데이집회장에서 <민주노총 각성하라!> ... <프락치혐의자> 문제제기
- 64 민주노총조합원, 폭언·폭행사건으로 한석호·조경석 징계 제기
- 65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의 <연대파기 공식안건화>와 종파적 행태에 대해 엄중경고
- 66 코리아연대, 민중의힘에 답변공문촉구와 추가질의·요구
- 67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노릇 그만하고 연대파기 철회하라!> ... 민주노총규탄집회
- 68 코리아연대, 전농중앙간부와 민주노총중앙간부 간의 <반코리아연대담합> 여부 확인
- 69 코리아연대, 통합진보당최고위급당직자와 민주노총간부와와의 <반코리아연대담합> 여부 확인
- 70 코리아연대, 전국여성연대중앙간부와 민주노총중앙간부의 <반코리아연대담합> 여부 확인
- 71 민주노총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 입장문
- 72 충남대련, (1)전농·(2)한대련·(3)전국여성연대에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 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 73 전농, 충남대련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사업중단 결정 통보
- 74 <연대파기는 <21세기판 연좌제>... 민주노총규탄촛불집회
- 75 코리아연대 <이중жат대 들어대는 민주노총, 연대파기 철회하라!>
- 76 코리아연대, 전농의 한심한 <연대파기>통보에 대한 확인과 항의
- 77 코리아연대,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의 촉구 ((1)민주노총·(2)통합진보당·(3)전국여성연대)
- 78 코리아연대, 민중의힘 차기대표자회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안건상정 제기
- 79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규정
- 80 <한석호, 너 프락치지?>
- 81 <그때 니만 구속되지않은 이유들>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간부 징계 건 공지

○ 피징계자

· 교육선전부장 김○○

○ 사건내용

· 간부로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요청

○ 결론

· 2013.01.13. 부로 교육선전부장 김○○을 해임한다.

○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

· 2012.09. 피징계자는 충남지역대학생연합 간부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문제가 되었음.

· 충남지역대학생연합은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피징계자의 활동을 중단시킴.

· 자체조사과정에 3개월간 자숙기간을 갖고 총화하는 시간을 가짐.

· 자숙기간 동안 성평등센터 상담 및 교육 이수, 성희롱관련 영화 ‘노스컨슈리’와 성폭력 피해여성 이야기를 다룬 소설 ‘빨간모자 울음을 터뜨리다’ 등 인문학 서적 10권을 학습하면서 반성기간을 가지면서 글주함.

· 자체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상 얼마든지 정상참작 할 사유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대학생연합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에 교육선전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최고수위인 해임으로 결정함.

2013년 1월 13일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 도연맹, 아산시농민회

발 신: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문서번호: 충남대련2013-001(2013. 01. 14. 시행)

담 당: 집행위원장 한지은()

제 목: 아산시농민회에서 벌어진 폭력·협박사건에 대한 해결요청 건

1. 2013.01.06. 18:45.경 아산시에 위치한 농민회 사무실에서 아산시농민회 박정우사무국장으로부터 충남대련 한지은집행위원장과 김재환간부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는 선배에게 당한 폭행도 문제지만, 남성인 박정우사무국장이 여성인 한지은집행위원장을 폭행한 것으로 인해 우리 충남대련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충남대련은 이 일로 농학연대의 오랜 전통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폭력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충남대련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 폭력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1) 박정우사무국장이 한지은집행위원장과 김재환간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 2) 박정우사무국장의 사과문을 사건개요와 함께 충남도연맹 게시판에 15일 동안 게시한다.
- 3)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 4) 박정우사무국장의 해임 등의 징계와 함께, 1년 동안 자숙할 것을 요구합니다.
- 5) 위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을 1월 18일 18시까지 충남대련 공식이메일(21cn_stu@hanmail.net)로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1. 폭력사건개요(0106)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한지은 진술서

- 1월 5일 13시경 아산시농민회 박정우사무국장에게 6일 저녁 농민회사무실로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이하 충남대련) 간부들 다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음.
- 1월 6일 13시 30분 경 충남대련 한지은집행위원장이 아산시농민회 박정우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형님 저 충남대련 지은인데요 어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혹시 내일 시간 가능하세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오늘 안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시간에 와! 재환이 꼭 데리고!”라고 박정우사무국장에게 답문메시지 받음.
- 1월 6일 18시에 아산시농민회에 충남대련 한지은집행위원장이 먼저 도착하고 김재환간부는 45분정도 늦게 도착함.
- 18시 45분 경 김재환간부가 도착하자마자, 박정우사무국장이 김재환간부를 농민회사무실 한 쪽 구석으로 끌고가 폭력을 행사함. 얼굴을 3-4회 정도 손바닥으로 가격했고, 연이어 3-4회 정도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가격했음.
- 한지은집행위원장이 말리려고 다가가자 박정우사무국장이 “애(김재환)가 프락치가 아닌 이상 이럴 수가 없다. 너네는 애를 데려다가 2년 동안 성범죄자로 키웠다. 너희는 성범죄자를 두둔한 성범죄집단이다. 너(한지은)는 10년 동안 한 결과가 이거다.”라고 폭언을 행사하였음.
- 박정우사무국장이 폭언을 내뱉으며 충남대련이 잘못 처신했다고 비난하자, 한지은집행위원장과 연쟁이 벌어짐. 그 과정에 박정우사무국장이 “넌 그 동안 뭘했느냐?”는 말과 함께 한지은집행위원장의 허벅지를 발로 한두차례 가격하며 가슴을 두차례 밀치는 폭행을 가함.
- 이후 20여분 동안 박정우사무국장이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행사하면서 각서를 요구함. 각서의 내용은 ‘8월까지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박정우사무국장이 아산시농민회 사무실 안에 있던 이연재총무부장에게 각서를 출력해오라고 하자, 이연재총무부장이 각서내용을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후 김재환간부에게 제시했고, 김재환간부가 이에 서명함.
- 박정우사무국장이 한지은집행위원장에게 보증인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니 “이후 어느 자리에서 충남대련 간부들이 내(박정우) 눈에 띄시 그 자리의 성격과 참석자를 막론하고 폭로하고 매장하겠다.”며 “내 눈에서 끼져라.”는 폭언과 함께 상황 마무리 됨.
- 19시 15분경 한지은집행위원장, 김재환간부 아산시농민회에서 나옴.

수 신: 김OO사건 피해자, 피해자 대리인 귀하
발 신: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문서번호: 충남대련2013-002(2013. 01. 20. 시행)
답 당: 남창우

제 목: 김OO사건 조치에 대한 사실확인과 충남대련의 입장

1. 김OO사건으로 인해 시련을 겪은 귀하께 진심으로 유감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충남대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 충남대련의 가능한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충남대련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당사자인 김OO의 직무(활동)를 중단시켰으며, 충남대련 간부를 즉각 파견하여 직무중단사실을 통보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4. 다음으로, 김OO를 자체조사과정에 3개월간 자숙기간을 설정하여 총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OO은 자숙기간 동안 여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교육을 이수했고, 성희롱관련 영화 '노스컨츄리'와 성폭력 피해여성 이야기를 다룬 소설 '빨간모자 울음을 터뜨리다' 등 인문학 서적 10권을 학습하면서 반성기간을 가졌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부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해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6. 충남대련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대련이 한 게 뭐 있냐?', '충남대련이 대응을 잘 못했다.'는 등의 왜곡된 말들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더 이상은 충남대련이 할 수 있는 몫도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건의 당사자끼리 원만히 문제해결이 되길 바랍니다.(끝)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340-804)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50번지 2층/전화: 332-3866/전송: 332-3867/nongcn@hanmail.net

문서번호 : 전농_충남도연맹 2013-01-28-01

수 신 :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경 유) :

발 신 일 : 2013. 01. 28.

제 목 :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요청서에 대한 답변의 건

1. 안녕하세요, 전농 충남도연맹입니다.

2. 전농 충남도연맹은 2013. 01. 13. 귀 단체에서 발송한 공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일련의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번 사건이 피해자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될 때 까지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귀 단체가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상기 사항에 대한 회신을 2013. 02. 08 18:00까지 전농 충남도연맹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 농 민 회 총 연 맹 충 남 도 연 맹 의 장



정책위원장 권혁주

총무부장 이지은

협조자 아산시농민회 총무부장 이연재

시행 총농 2013-01-28 (2013.01.28) 접수

우 340-80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50번지 2층

이메일 nongcn@hanmail.net

전화 041-332-3865 전송 041-332-3867

수 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아산시농민회
발 신: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문서번호: 충남대련2013-003(2013. 02. 3. 시행)
답 당: 차상업

제 목: 한지은 집행위원장 폭행·협박사건에 대한 해결요청(2차) 건 등

1. 전농충남도연맹 2013-01-28 공문은 한지은 집행위원장 폭행·협박사건에 대한 충남대련의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1월 19일 전농충남도연맹에서 한지은 집행위원장 폭행·협박사건에 대한 회동을 제안했으나 장명진부의장과 이연재 아산농민회간부가 김00사건에 대해 추궁하는 자리로 애초 약속된 회동과 성격이 다르게 진행되어 단체상호간 관계 속에서 분별력을 잃은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2. 한지은 집행위원장과 김00전 간부 폭행·협박사건에 대해

1월 6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한 달이 다되어가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집행위원장 폭행·협박사건은 진보운동진영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으로 조직의 총괄 책임자를 폭행함으로써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또한 여성활동가를 폭행폭언에 협박까지 한 것은 진보단체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2월 5일 13시(오후1시)까지 충남대련 공식이메일로 성실히 답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을시 정치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덧붙여 분명히 확인합니다.

- 요구사항 -

- 1) 박정우사무국장은 한지은집행위원장과 김00 전간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 2) 박정우사무국장의 사과문을 사건개요와 함께 충남도연맹 게시판에 15일 동안 게시한다.
- 3)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 4) 박정우사무국장은 해임 등 징계조치하고 1년 동안 자숙케 한다.
- 5) 위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을 2월 5일 13시(오후1시)까지 충남대련 공식이메일(21cn_stu@hanmail.net)로 주기 바랍니다.

3. 연대사업 중단에 대하여

농-학 연대의 역사 속에서 농민회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건으로 연대사업 중단을 선언한 일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인 것으로서 분별력을 잃은 전례없는 사건입니다. 이는 농-학 연대 역사를 부정하는 커다란 잘못이므로 충남대련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철회요청을 또한 2월5일 오후1시까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철회가 없을시 상층조직(전농)에 공식 제기하겠습니다.

4. 김00사건에 대하여 충남대련을 음해하는 일부 농민회간부에 대한 입장

김00사건에 대한 충남대련 입장에 대한 공문을 첨부합니다. 김00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접수 후 즉각적 조치를 취했으며 진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조치한 사실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또한 김00사건은 학생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조직이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민회간부가 지역사회에서 충남대련에 대해 음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는 충남대련조직의 권위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그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5. 향후, 충남대련에 의견이 있을시 공문으로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끝>

수 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발 신: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문서번호: 충남대련2013-004(2013. 02. 05. 시행)
담 당: 차상엽

제 목: 아산농민회 간부의 폭행·협박사건 등에 대한 해결요청의 건

1. 아산농민회 간부의 폭행·협박사건에 대한 요청사항

2013년 1월 6일 우리단체의 여성집행위원장과 전 간부가 아산농민회 간부에게 폭행·협박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 등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문제해결요청 공문을 2차례에 걸쳐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발신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상급조직인 전농에 <아산농민회 간부의 폭행·협박사건 등>의 문제해결을 아래와 같이 공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요청사항 -

- 1) 우리단체가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으로 제기한 4항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급조직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2) 1항이 안될 시 전농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간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3) 한 달 이상 사건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위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을 2월 12일까지 충남대련 공식이메일(21cn_stu@hanmail.net)로 주기 바랍니다.

2. 우리단체에 대한 분별없는 충남도연맹의 연대사업 중단 선언에 대해

충남도연맹은 1월 28일 우리단체에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농민회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을 문제 삼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학 연대 중단을 선언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이며 전례없는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충남도연맹에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답변이 없어 상급조직인 전농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합니다. 분별없는 <충남도연맹이 우리단체에 통보한 연대사업 중단 선언>에 대해 합리적인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위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에 포함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공문들을 첨부합니다.

- 첨부 1. 공문 충남대련2013-001(아산농민회 폭력사건 해결요청)
- 첨부 2. 공문_전농충남_20130128_충남대련
- 첨부 3. 충남대련2013-003(아산농민회 폭력사건 해결요청-2차)

내 용 증 명

● 발 신

- 발신인 : 한 지 은
- 연락처 : [REDACTED]
- 주소 : [REDACTED]

● 수 신

- 수신인 : 박 정 우
- 연락처 : [REDACTED]
- 주소 : [REDACTED]

● 제 목 : 아산시 농민회에서 벌어진 폭력, 협박 사건에 대한 해결 요청의 건

● 내 용 :

- 2013년 1월 7일, 아산시 농민회에서 아산시 농민회 박정우 사무국장에게 충남지역대학생연합 한지은 집행위원장이 폭력 및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1, 사건개요)

- 이에 2013년 1월 14일 충남대련 공문 2013-001 '아산시 농민회에서 벌어진 폭력, 협박 사건에 대한 해결 요청의 건'을 충남도연맹과 아산시농민회에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3-001 공문을 통해

- 1) 박정우사무국장이 한지은집행위원장과 김재환간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 2) 박정우사무국장의 사과문을 사건개요와 함께 충남도연맹 게시판에 15일 동안 게시한다.
- 3)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 4) 박정우사무국장의 해임 등의 징계와 함께, 1년 동안 자숙할 것을 요구합니다.
- 5) 위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을 1월 18일 18시까지 충남대련 공식이메일(21cn_stu@hanmail.net)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위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남도연맹에서는 2013년 1월 28일 문서번호 전농_충남도연맹 2013-01-28-01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요청서에 대한 답변의 건'을 통해 일련의 폭행, 협박 건에 대한 답변이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충남지역대학생연합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며, 폭력 및 협박 건에 대한 일체의 답변과 입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 이후 박정우 사무국장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비롯한 어떠한 연락 및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아산시 농민회 및 충남도연맹 차원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26일

성명 : 한 지 은

**<통합진보당 이○○ 성폭력 사건 및 2차 가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의 <문서번호 2013-04-04-02> 공문에 대한 답변**

수신 통합진보당 이○○ 성폭력 사건 및 2차 가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 2차가해자로 지목된 한준혜 지영철 한지은 차상엽 남창우 한혜인 방진호
시행일자 2013년 4월 5일

제목 <문서번호 2013-04-04-02> 공문에 대한 답변

1. 공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사실확인과 소명기회도 없고, 일방적인 내용의 공문이 전달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당원으로서 통합진보당 당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3. 한편, 우리는 그간 공대위 소속 단체들과의 연대를 중시해왔기에 이런 공문이 오고가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문제를 균형있게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간담회는 서로간 협의하에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고 공대위 소속 단체에서 이 문제를 힘있게 처리할 수 있는 대표자급들이 참가했으면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황과 운동권의 분열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하길 바랍니다. 물론 공개로 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혜 지영철 한지은 차상엽 남창우 한혜인 방진호

2013년 4월 5일

소 명 서

•제 목 「2013.4.4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제소장」에 관한 소명서

•소명방식 ☒소명서 제출

•인적사항

소 속 통합진보당 공주시위원회

성 명 남 창 우

전화번호 010-1234-5678

이 메 일 namcangwoo@naver.com

1. 제소장 내용

『남창우는 사건 당시 CCTV영상과일과 가해자 진술서를 넘겨 받아 방진호 당원에게 전달하였다. 즉 당원들과 사건에 대해 공유했으나 문제들 공식화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이는 8년간 충남도당 학생위원장 역할을 했던 당원으로서 책임없는 행동을 한 것.』

2. 소 명 내 용

- 1) 학교에 선택로서 사건을 알게됨. 허나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방진호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
- 2) 피해자와 가해자 풀어야할 문제이지 피계소인이 당시 학생위원장이었다고는 하나 학생위원회로 피해접수가 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두 사람이 당원이었다하여 학교의 당원들과 공유할 사안은 아님
- 3) 이에 학위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사라고 생각되며 현재 당기위에 제소된 것은 부당함

3. 결 론

- 1) 현재 두 사람은 당원이 아닙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기위에 접수할 하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습니다.
- 2) 사건이 명확히 밝혀져야 2차 가해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사 없이 2차 가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2차 가해라는 증거도 없이 2차 가해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3) 이와 관련해 이번 당기위 제소는 부당하며, 기각되어야 합니다.

제 출 일 2013년 4월 7일

제 출 인 남창우(직인생략)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귀하

피제소자 소명서

피제소인 : 방진호

소속당부 : 충남도당 학생위원회

1. 피제소인의 제소사유에 대한 소명

제소인의 제소사유

방진호 또한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 그리고 방진호가 제소인 남자친구에게 가해자 진술서와 CCTV 영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가해자 측이 사건의 진실을 흐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진술서를 신뢰하며 제소인 남자친구에 제소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2차 가해가 있었다.

- 1) 사건에 대해 묵인하지 않음.
- 2) 제소인 남자친구에게 가해자 진술서와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음.
- 3) 가해자 진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본 적도 없음.
- 4) 진실을 흐리기 위해 준비한적 없음.
- 5) 제소인 남자친구에게 제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적 없음.
- 6) 나머지 해당사항 없음.

2. 피제소인의 당기위 절차에 대한 비판

1) 당규 제11호 1장 3조 3항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시·도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두며 성차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에 의해 조사위가 꾸려지는 것이 절차적으로 우선이나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

2) 그러므로 제소인이 당규 제11호 3장 9조 2항에 따라 제소하였다는 것은 판단이 불가능하다.

3) 또한 당규 제11호 3장 12호 2항 [모든 당원과 당기관은 소속 광역시·도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에 따르면 당기위 제소는 당원에게만 해당하는 절차로 사건이 어느 시기에 발생했는지를 떠나 제소인 ■■■■■은 제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원이 아닌 자에 의해 제소가 진행되었고 설사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조사위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제소가 진행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충남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제소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소에 대한 소명〉 - 지영철

수신 :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위원회

발신 : 피제소자 지영철 (이메일 : [REDACTED] / 전화 [REDACTED])

소명내용

1. 제소인은 제가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고 제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소인이 밝힌 이런 이유가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며 유감입니다. 묵인해도 제소되고 묵인하지 않아도 제소되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런 불합리한 제소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2. 하지만 제가 당기위원회의 제소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이유는 제소의 불합리성의 유무를 떠나 당의 체계와 절차를 존중하기 때문이며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입니다.

3. 저는 묵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밝힙니다.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은 즉시 제가 대표로 있는 대안경제센터에서는 관련 단체인 만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해 선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조사와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4. 제소인의 제소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를 이른바 2차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소사실에 대한 정황이나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1차가해의 사실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차가해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설사 제소자의 주장대로 이른바 1차 가해자에게 잘못이 백프로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속해있는 책임단위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직위해제 등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2차가해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어느 대중단체든 조직의 구성원이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단체 전체가 때로 되고 문제시 되어야 하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단체의 의무는 문제가 된 구성원을 반성시키고 문제의 수위에 맞게 징계를 내려 함께 정치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1차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제소자의 주장대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성폭력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사건발생의 정치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건을 안 순간 활동을 즉시 중단시키고 우리 단체와 관련된 모든 직위를 해제시켰습니다.

5. 제소인이 제소한 건에 대한 제 소견을 덧붙이자면 운동대오내의 이런 문제들이 소모적인 갈등과 결론 없는 공방으로 장기화되며 제소인과 피제소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갔던 이전의 여러 사례들과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제소인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법적인 조사와 처벌 과정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라 판단합니다.

5.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지금의 문제가 운동대오내의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단결의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서

발신 : 한준혜

수신 :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소명1.

○ 제소인으로부터 사건발행 2012년 10월23일부터 탈당한 2012년 11월 2일까지 통합진보당 공주시지역위원회나 본인에게 통합진보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의사가 있거나 도움을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사건발행 2012년 10월23일부터 탈당한 2012년 11월 2일까지 제소인과 전화, 이메일, SNS로 서로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증거자료들 제출 하겠습니다. 본인은 수년간 성폭력상담과 해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의사확인없이 사건을 알았다하여 행동할 수 없으며, 원저하게 사건피의자의 의사대로 해야합니다. 피의자의사없이 사건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2차 가해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조직에서의 경계원차는 피해자본의 의사들 중심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 2012년 10월24일 오전8시30분경 남자친구 김00로부터 본인에게 사건이 접수되고, 사실확인과 상관없이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하여, 10월25일 대안경제센터대표에게 이동근부대표관련 불미스런사건이 제보되어 피해자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대안경제부대표 직위해제들 요청했고 이들 수용하여 대안경제센터 부대표직을 대표직권으로 직위해제했습니다.(본인은 대안경제센터 고문입니다.) 이동근에게 충남희망청년연대 대표와 노동연대실천단 단장 사임요청과 이장과 아파트연합회 일주일안에 정리하고 자숙할 것을 제기했으며 이동근은 이들 수용함. 이들 사건을 제보한 김00에게 전달하였으며, 제소자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원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전달함.

○ 대안경제센터 이동근동지의 징계관련하여,

이동근동지의 불미스런 사실을 제보로 알고 있는 운동가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소자가 고소하겠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이동근동지의 오류에 대해 동지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혁신시켜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본인과 이동근동지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대안경제센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했습니다.

이동근동지는 사건당시 노동연대실천단 단장, 대안경제센터 부대표, 충남희망청년연대 대표들 두루 맡고있었고, 대안경제센터, 충남희망청년연대, 노동연대실천단 등 연석회의들 통해 본인과 이동근동지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으며 본인과 이동근동지와 관계에서 대안경제센터는 1차적 활동이었습니다.

이동근동지가 활동가로 적절하지 못한 도덕적문제점을 원저하게 비판하고, 오류들 범한만큼 징계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본인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대안경제센터차원에서 진상조사이후 징계를 하여 현재 직책을 박탈하고 근신중에 있습니다. 진보운동영역에서 활동가가 소속되어 있는 정치적 책임단위에서 잘못을 했을 때 원저하게 비판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동근동지의

실수에 대해 비판하고 처벌하것을 두고 2차 가해고, 개인적인것이라고 시비걸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해자 주장을 균형있게 들었다하여 2차 가해자로 몰고, 또한 활동가들 책임지는 운동대오내에서 이들 징계했다하여 이들 개인적 처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조직적으로 이문제를 처리하고자 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런 사건이 운동내에서 발생되었을 때 운동대오의 핵심구성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엄격하게 징계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가려야할 문제로 제소자가 예초에 밝힌대로 고소하여 이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사건의 핵심당자자가 제소자와 피제소인이 당원이 아닌 신분으로 조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데 억지로 이사건을 조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최근 4월4일자로 공대위이름으로 온 공문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당내 당기위 제소자들 어떻게 알고 공문을 보냈는지도 의문이고, 징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받으라고 하고, 공대위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고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만나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사건을 결론짓고 쫓겨온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은 향후 지역진보운동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법으로 가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제소인과 이동근동지의 문제로 이문제가 진보진영의 단결을 저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소인과 이동근동지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결국 법으로 시시비비를 해결해야합니다.

○ 이번 제소의 부당성

제소인과 1차 가해자로 지목된 제소자가 당원이 아닌 사건이므로 징계할 수 없는 사건을 제소하는 것은 그동안 당내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기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당연히 이 제소는 철회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있다면 충남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이사건이 해결될 수있도록 경찰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있도록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2013년 4월 7일

소명서

▶성명 : 한 지 은

▶수신 :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제소사유 : 피제소인 한지은은 당에서 사건 공식화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제소인의 동의 없이 타 단위 (충남대학연연합)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건 해결을 요구, 이에 제소인이 거부하자 피제소인 한지은의 언어 폭력이 있었다.

▶소명내용 :

피제소인은 사건 다음 날 제소인의 남자친구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되었다.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2011년 한 대련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제소인의 남자친구와는 피제소인의 관계는 충남대련과 함께 활동해 온 공주대 연석회의의 한 구성원과 충남대련 공주대 담당간부의 관계였습니다.)

사건을 들은 직후 피제소인은 충남대련 차원에서 책임있게 이 사건을 풀어나가겠다는 판단하에 사건 이후 제소자와 한 차례, 제소인의 남자친구와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제소인의 입장과 제소인이 원하는 요구 및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했고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충남대련 차원에서 토론하지 않았고, 충남대련의 집행위원장이자 공주대 담당 간부의 자격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제소인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을 중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고민하에 제소인과 제소인의 남자친구에게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 상의하였고, 이에대해 제소인측에서 충남대련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진행하지 않았다.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으나 제소인 측의 성폭력 상담센터의 상담과 경찰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른 가해자와 제소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견을 통해 해결 과정에서 피제소인의 역할이 필요치 않겠다고. 제소인 측과의 마지막 만남을 통해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 사건과 별개로 선후배로서 언제든 필요할 때 연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 끝으로 사건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제소인은 제소자 측이 당에서 사건을 공식화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러한 의도 역시 없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제소자 측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언어폭력도 있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또한 피계소인은 이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가해자와 계소인이 당원이 아닌 조건에서 당기위에 계소가 진행 될 수 없음과 1차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건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당기위원회에서는 이 계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계소인에게 경찰 조사 등을 통한 명확한 사건 조사를 통한 사건 해결할 것을 권고하길 요청합니다. 피계소인은 위의 계소 건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피계소인의 활동과 명예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계소인측의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2013년 4월 7일, 한 지 은

소명

수신 : 통합진보당 당기위원회

발신 : 이동근

1. 제소인과 피제소인 모두 당원이 아닌 조건에서 이 사건이 당기위원회에 제소된 점 유감입니다. 하지만 소명하는 이유는 당적이 있었던 책임감과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운동대오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 본인은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소인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제소인이 수치심을 느낀 것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3. 성폭행의 법적 해석은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이상의 구체적인 소명이 불가능합니다.
4. 본인은 제소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한 적도 없고 거짓증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장과 제소가 아닌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5. 본인은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원하며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의 총화기간을 갖고 있으며 근신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2013년 4월 17일

진술과 소명

진술과 소명에 앞서 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저의 부족함에 대해 돌아보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스스로를 진심으로 총화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술은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며 소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는 의문이며 저를 강간범, 파렴치한으로만 몰아가는 것에 대한 항변입니다.

1. 진술

- 본인은 2012년 4월 통합진보당 선거과정(당진)에서 제소인을 처음 만났으며 그때부터 카톡으로 친분을 쌓았고 호감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월 27일 오전1시경 폐북을 하다가 제소인의 글을 보고 바로 오전 1시 10분경 카톡으로 반갑게 40분 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있는 등 이후 한 달에 두어차례 새벽에 한두시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제소인이 카톡으로 본인에게 탄원서부탁도 하고 들어주고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이후 카톡대화의 횟수와 대화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본인이 서울에서 행사를 하면서는 서로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23일 처음으로 핸드폰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9월 29일 카톡을 보냈으나 반응이 없어 연락을 안했습니다.

- 그러던 중 한달만인 10월 23일에 제소인을 만나서 저녁과 반주를 했으며 제소인의 동의하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본인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23일 오후 12시 43분에 제소인이 "아산에 오니 만나자"는 카톡을 보냈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제 일정이 바빠서 바로는 만나지 못하고 저녁식사를 제안했고 제소인이 흔쾌히 좋다고 응했습니다. 이후 저녁 7시 10분경 아산역에서 만나 제가 사는 동네 있는 아산생고기 집에서 저녁식사와 소주3명(본인 2명, 제소인 1명)을 나눠먹었습니다. 먹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참 잘 통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경에 제소인이 술을 먹다가 "버스를 놓쳤다"고 했고 제가 잘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잘 곳이 없다하여 제가 방이 두 개니 우리집에서 자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제소인은 흔쾌히 "좋다"고 해서 함께 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다. 저녁 9시 40분경 식당에서 나와 집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제소인이 술이 많이 취해 비틀거리거나 그런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10분거리인 집까지 오면서 제소인의 어깨에 제가 손을 살짝 올렸고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서도 저에게 제소인이 살짝 안기는 과정도 있었고 제소인과 제가 층수도 같이 누르면서 장난도 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과정에서 제소인과 제가 서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나와서는 어깨동무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 집에 들어와서 제가 감정표현은 했으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현관 앞에 있는 방에서 자라고 하고 본인은 바로 부엌 걸 거실을 지나 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평소 습관대로 속옷차림으로 누워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고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니 제소인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때 제가 제소인

을 보고 좀 더 감정을 표현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팔목을 살짝 잡고 “이리와”하고 제방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자연스러웠으며 저항하는 밀고 당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소인을 자연스럽게 제 침대에 눕혔고 살짝 팔목을 잡았을 때 제소인이 “저 애인이 있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옆방에서 자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제방에 누워서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전화벨소리에 잠이 깬고 11시 30분경 제소인의 남자친구(나중에 안 사실임)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 갔다”고 전했고 전화를 끊고 보니 방진호에게 부재중전화도 와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2. 소명

저는 집까지 함께 오는 과정, 집에서의 과정에서 제소인에게 강압적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다라면 저녁식사를 저의 동네에서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저의 집에 가자는 권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동네이장이었으며 아파트 동대표를 맡아 동네주민들이 본인을 다 알고 있으며 저녁식사장소도 평소 자주 가는 동네식당이며 사장님과 종업원까지 친하게 지내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제소인의 주장대로 강압적으로 술을 먹여 강제로 집까지 데려올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한 점은 저녁식사 끝 무렵 집에 갈 버스를 놓쳤다고 제소인이 말한 시간이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시간이면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버스를 타고 공주로 갈 수 있었습니다.(공주 가는 막차는 9시 10분. 나중에 확인함) 공주가 아니라면 서울 집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소인이 버스를 놓쳤다고 하니 저는 방이 두 개인 우리집에서 자도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제소인은 남자친구와의 카톡에서 집에 가려는데 제가 붙잡아서 못가게 했다고 했고 술자리가 무섭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녁식사자리는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였고 종업원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만약 제가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한 파렴치한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소인과 함께 다정하게 아파트현관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9시 50분이었으며 제소인이 본인아파트를 나갔던 시간은 저녁 10시 20분이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모습은 제소인의 주장처럼 성폭행을 당한 사람처럼 겁에 질리거나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아닌 매우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소인은 동거하고 있는(나중에 안 사실) 남자친구와의 카톡을 통해 남자선배집에서 자는데 무섭다라는 내용을 그날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 전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많이 창피했으며 혼자만의 착각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이전 카톡을 주고받던 과정과 사건당일의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남녀가 사귀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소인과 새벽에 카톡으로 장시간 대

화를 했는데 오히려 사랑한다고 감정을 표현하는 등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했으며 새벽시간에 카톡을 장시간 주고받는 관계이면 일반적으로 호감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소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저녁식사자리를 제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소명하려 합니다. 폐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시시콜콜 사생활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제소인은 사건발행 직후 10월 24일 자신의 폐북에 연애훈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또한 제소인은 자신의 폐북에 본인이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진을 올리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함을 보여 사실 만나서 사실확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으나 혹시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까 겁도 났습니다.(이후 제소인은 폐북에 그런 글을 삭제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점점 부풀려지면서 제가 유부남이다. 집에 나갔다가 다시들어와서 제소인을 덮쳤다 등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제가 강제로 강간을 목적으로 집으로 데리고 간 파렴치한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참 답답했습니다. 제소인의 폐북에 예전 자해한 경험의 글도 올라와 전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혹시나 이 문제로 자살할까 걱정도 되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제소인에게 사과의 문자를 전한 이유는 23일 당일에 구체적으로 구두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킨십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한 사과입니다. 암묵적 동의라고 판단한 저의 오판일 수 있겠지만 집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분위기를 돌아보면 일반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행동으로 인해 상처와 수치감을 제소인이 느꼈다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소인과 제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3일의 일이 발생했으며 싫다는 의사표현을 확인한 즉시 저의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다만 이런 저의 행동이 제소인에게 수치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운동하는 사람으로 저의 부족점에 대한 반성과 연애훈에 대해 돌아보고 있으며 모든 직책과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과 근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제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 강제성이 없다는 증거자료가 있음.

수신 :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원장

발신 : 이동근

제목 : 당기위의 징계결정에 대한 입장

당기위의 징계결정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당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조사에 임하고 성실히 소명하였지만 징계까지 내린 결과(당원이 아닌 저를 굳이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당기위의 결정에 저의 소명과 진술이 단 1퍼센트도 반영되지 않고 제조자의 입장만으로도 결론지어진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당기위 조사진행 이전부터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이번 사건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미 소명하고 진술한 내용은 1퍼센트의 거짓말도 없는 진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5월 14일

이동근.

- 수 신 : 충남 민중의 힘
 - 번 호 : 2013 - 05 -14
 - 발 신 : 통합진보당 이00성폭력 공대위, 충남대련 김00성폭력 공대위
 - 내 용 : 성폭력 2차 가해자 활동 중지 요청의 건
-

1. 충남 민중의 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대위는 통합진보당 이00성폭력과 충남대련 김00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지역 노동,농민,여성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이00성폭력의 가해자는 지난 5월 6일 통합진보당에서 제명되었으며 현재 2차 가해자 조사 진행 중입니다. 김00 성폭력 사건 또한 현재 통합진보당 당기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3. 유감스럽게도 2명의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폭력 사건 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1명은 당 탈당 후 지역 내 공식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1명은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접고 서울에서의 꿈을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접게 만든 것입니다.
4. 공대위는 두 건의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진보진영 내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공대위 차원의 입장을 첨부하오며 빠른 시일 내 충남 민중의 힘 대표단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차 가해자

- 이00 성폭력 사건 : 한준혜, 지영철, 한지은, 차상엽, 남창우, 방진호, 한혜인 (7명)
- 김00 성폭력 사건 : 김정희, 최 민, 한지은, 차상엽, 남창우 (5명)

2) 요구

-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 가해자들의 지역 연대활동 중단을 요구합니다.

[첨부:공대위 입장]

농민회 충남도연맹/민주노총 충남본부/진보신당 충남도당/충남성폭력
상담소/천안여성의 진화/천안여성회/충남노동전선/충남사노위

2차 가해자 연대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공대위의 입장

진보운동사회에서 노동, 농민, 빈민, 여성, 통일, 반전, 반핵, 환경 운동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의제입니다.

여성운동의 역사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각종 법과 제도권 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알려내는 데 10년이 넘는 역사를 투쟁했습니다. 여성운동 및 진보진영 내에서는 반성폭력 운동 전개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개념 및 범주의 확장을 이뤄냈으며 부족하지만 이런 확장된 개념은 제도권으로도 확장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성폭력의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제3자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에 의해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합진보당 이00성폭력 사건과 충남대련 김00성폭력 사건에서 무엇이 2차 가해인 지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차 가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행동이 2차 가해인지 그 목록을 나열하는 것 보다,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2차 가해'라 명명하고 성폭력에 준하는 폭력행위를 규율하고자 했던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 후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로 받는 고통은 물론 조직 내 가해자를 옹호하는 가해자를 둘러싼 조직 내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2차 피해로 더 큰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운동 사회에서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은 피해자의 소리를 가해자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게 들리게 하고, 조직 내 혹은 운동사회 전체에서 성폭력을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이00, 김00 두 건의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2차 가해자들은 성폭력 사건 인지 후 발빠른 대응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옹호함으로써 집단적이고 암묵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운동진영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 고립감, 좌절감을 안겨줬습니다.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몇명은 지역 운동사회에서 중요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였고, 여성운동가로 활발한 활동 중이며 그들은 여전히 2차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 사안의 심각성은 더 큼니다.

또한 2차 가해 행위를 볼 때 도저히 진보적 활동가로 보기 어려울 만큼, 여성운동가로 함께 연대할 수 없을 만큼 집단적이고 암묵적인 2차 가해였다는 점에서 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따

를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로 지목되었으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의 어떤 행위가 2차 피해를 유발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며,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자기 반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차 가해자들은 2차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황성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대위 소속의 대표 및 활동가들은 2차 가해자들을 연대활동 공간에서 만날 때마다 혼란스럽고, 연대활동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크게는 진보 진영 내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까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 수준이 매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진보진영 내에서 할 수 있는 수위를 넘나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운동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과 지역 현안에 대한 연대활동은 위상과 성격, 판단과 해결의 지점은 다르지만 지역전제 운동사회 내에서 그 투쟁이 갖는 가치의 문제와 지향의 지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 둘이 학생이라는 점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비해 권력을 갖고 있으며, 다년간 쌓아 온 인간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도 황성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이고, 연대활동은 연대활동이다’라는 안일한 대응은 성폭력에 대한 또 다른 왜곡과 또 다른 2차 폭력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연대활동은 진보진영 내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들을 갉아먹는 행위이며, 연대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스스로 2차 가해를 집단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더 이상 2차 가해자들로부터 또 다시 두 건의 성폭력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지역에서 용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운동 사회 내에서 2차 가해자들의 아무 거리낌없는 연대활동은 여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활동가들, 혹은 두 건의 성폭력 사건을 알고 있는 지역의 단체 및 활동가들에게는 사실상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 연대운동에 있어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공대위는 요구합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민중의 힘 차원의 연대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신속한 해결을 바라며 지역운동사회 내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한 공대위의 이런 요구가 '정치탄압' 혹은 또 다른 정파적 해석으로 간주된다면 그 해석 또한 성폭력 사건을 또 다시 은폐·축소하고 또 다른 2차 폭력과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진보는 진보다워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임하는 태도와 관점이 꼰대보수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웃만 진보 웃을 입고 있을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사건을 임하는 진보진영의 상식적 해결과 상식적 관점을 기대합니다. 그 상식적 해결과 상식적 관점은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끝)

[회의자료]

충남 민중의 힘

2013년 3차 집행책임자 회의 결과

- 일시 : 2013년 5월 14일 16시
- 장소 : 민주노총충남본부
- 참석 : 민주노총, 노동전선, 전노련, 범민련, 전농, 진보신당, 충남대련, 공주민협, 코리아연대, 통합진보당, 천안민중의힘 /참관:시민단체연대회의

1. 각 단위 보고

2. 활동보고

3.기타 안건

- 전농도연맹의 충남대련 참여 배제 요구의 건 -대표자, 집행책임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함
- 통합진보당,충남대련 공대위의 2차가해자 활동 중지 요청의 건
: 대표자,집행책임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함

4.광고

5. 차기회의 -집행위원장 추후 공지



통합진보당

150-748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프빌딩 Tel 02-2139-7777 Fax 02-2139-7890 홈페이지 <http://goupp.org/>
담당자 : 여성부장 강경란(02-2139-7867), 이메일 : womenupp@hanmail.net

문서번호 : 중앙 여성위 제13-05-15-02호

시행일자 : 2013년 05월 15일


수 신 : 충남도당

참 조 :

제 목 : 당기위 회부 중인 사건에 제소된 강사의 교육자격 여부에 관한 전국여성위원회 결정의 건

1. 귀 지역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위원회는 당기위 회부 중인 사건에 제소된 강사의 교육자격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았으며, 이에 5월 15일 14시에 개최된 전국여성위원회 2차 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경우, 당기위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하지만 당기위에서 해당자의 잘못을 다루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해당자의 강사 활동자격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 여성위원회는 당의 성평등의무교육을 주관하는 곳으로서, 전국여성위원회 결정에 기초하여, 충남도당에 해당 성평등 강사의 강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만약 강의를 강행할 시 그 강의는 당의 의무교육으로서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통 합 진 보 당 대 표 이 정 희

 통합진보당

수신 : '통합진보당 이00성폭력 공대위, 충남대련 김00성폭력 공대위'의 소속단체

내용 : '통합진보당 이00성폭력 공대위, 충남대련 김00성폭력 공대위'의 <성폭력 2차 가해자 활동 중지 요청의 건>문서에 대한 입장과 항의서한

1. 두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진실공방중에 있고 그 결과는 적어도 재판확정판결전까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주장한다면 이른바 '가해자'의 인권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며 '가해자'를 단죄하려면 확정판결이전에는 모두 무죄추정이라는 최소한의 법원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1차가해자'에 대한 진위조차 이렇진데, 이른바 '2차가해자'에 대한 진위는 오죽하겠습니까.

2. 운동권중 일부가 '공대위'까지 꾸려 이른바 '2차가해자'의 연대체활동중단이라는 움직임을 가히 중세의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며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원칙마저도 무시한 채, 운동권들이 그토록 규탄해 마지않는 수구보수들의 '종북마녀사냥'을 뼈담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실입니까. '공대위'가 알고있는 사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는 진실입니까. 피해자중심주의는 당연한 원칙이지만 그 전제는 진실입니다.

3.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들을 공개하며 반박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무고하게 훼손된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도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른바 '공대위'까지 꾸려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한심한 행태를 벌인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유치하고 악의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일이 비망록에 담아 만천하에 공개할 것입니다.

4. 지금 정세는 반전평화투쟁과 긴급한 노동현안들이 한둘이 아님에도 진보운동의 일부가 더욱 힘있게 단결투쟁할 대신 투쟁하는 동지들을 음해하고 모독하기에 여념이 없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정파적인 의도는 없는지 그 양심에 대고 반문합니다. 지금이라도 동지들에 대한 음해모독을 중단하고 긴급한 투쟁전선에 떨쳐나서기 바랍니다. '공대위'는 지금 명백히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반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또다른피해자모임('공대위'가 2차가해자로 지목한 김정희, 남창우, 방진호, 지영철, 차상엽, 최민, 한준혜, 한지은, 한혜인)

우리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요구서한

통합진보당 ‘이00성폭력, 충남대련 김00성폭력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2013년 5월 14일 충남민중의힘 집행위원회에서 제기, 논의한 ‘성폭력 2차 가해자 활동중지 요청의 건’은 우리 9명의 실명을 격시하고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성폭력 2차가해자로 규정하면서 마치 성범죄집단으로 때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연대활동중단’이라는 비상식적인 부당한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를 강요하였습니다.

우리는 심각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같은 활동가들을 성범죄집단으로 때도하면서 ‘연대활동중단’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공대위’를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명거론하며 명예훼손하고 부당한 요구를 강요한 ‘성폭력 2차 가해자 활동중지 요청의 건’ 문서를 철회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난 4월 5일 오해를 풀고 문제를 균형있게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문서를 통해 공식제안 한 바 있고 여러 차례 합리적인 대화를 요청하였지만 ‘공대위’소속단체는 무응답이었습니다. 이에 4월 5일 우리가 제안했던 취지의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5월 23일

또다른피해자모임(‘공대위’가 2차가해자로 실명격시한 김정희, 남창우, 방진호, 지영철, 차상엽, 최민, 한준혜, 한지은, 한혜인/ 가나다순)

수신 :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원장

발신 : 이동근

제목 : 징계무효입장과 재심청구

저에 대한 징계결과는 무효이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저는 이미 탈당하여 당원이 아님에도 당원이었던 책임감으로 당기위조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원이 아닌 저에게 '제명'이라는 실효성 없는 정치적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번 당기위의 조사와 판결은 당규를 현저히 위반하고 무시한 '원천무효' 판결임을 밝힙니다.

저는 당규 제13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규 제13호 제3조의 규정으로 제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당기위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규 제13호 제9조 1항과 2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저의 소속단체에 함께 협의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문서도 오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판결은 무효임을 밝히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동근

참고당규

★ 제9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해결한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한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이○○/충남대련 김○○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충남 서산시 풍문동 189-7 2층 / 메일> wbekf066@hotmail.net / 팩스> 041-665-5757 / 담당>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지영(010-4633-1083)

문서번호 13-0607-001

수 신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주 소 미상

참 조 공주민협 공동대표 우두용, 이문형, 장창수, 신경미, 정선원

제 목 공주민협 2013-05-31에 대한 답신의 건

1. 지난 5월 31일 귀 협의회에서 발신한 '공주민협 2013-05-31' 공문에 대한 답신입니다.
2. 충남 민중의 힘 집행위에 제출된 당 공대위의 문서는 피해자가 참가한 공대위 회의에서 논의·결정되었고 공대위 소속 단체의 회람·수정 후 제출되었으며 문서제출의 취지는 당일 제출된 문서들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공대위 명의의 모든 공문과 문서에 대한 책임은 모든 공문서가 그릇된 개인이 아닌 공문서의 명의자인 공대위(소속단체 대표자 공동대표) 단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3. 아울러 당 공대위는 '공주민협 2013-05-31' 공문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2차가해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제3자가 그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사건을 왜곡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공대위는 다른 이도 아닌 지역운동의 선배로부터 가해진 성폭력과 이후 그에 대한 어떤 구제조치도 받지못했던 피해자가 받은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한마디 우려와 공감없이 피해자가 직접 결정·회람한 문서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해자들의 입장을 견지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귀 협의회에 이러한 공문은 명백한 성폭력 2차가해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신중을 기하시길 요청드립니다.
4. 또한, 당 공대위는 통합진보당 이○○/충남대련 김○○ 성폭력사건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신속히 해결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의 징계결과를 2차 가해자들이 결히 수용하여 더 이상 진보진영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충남지역 내 진보운동의 연대와 발전을 심각히 훼손하는 위와 같은 성폭력사건 발생 시 지역의 계 단체들이 견지하여야 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기본 매뉴얼 작성 등 관련된 열띤 논의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귀 협의회가 요구한 공대

위 소속단체들의 입장은 본 공대위의 공문으로 대체합니다.

<협조요청. 담당자는 본 공문상단을 확인하시고 추후 공문발송 시 문자등을 통해 반드시 발신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충남대련 김○○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인생략]

민주노총 충남본부 | 전농 충남도연맹 | 진보신당 충남도당 | 찬언여성회 | 충남성폭력상담소 | 충남노동인권센터 |
충남노동전선 | 충남 사노위 | 이○○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 김○○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총남민중의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사임요구서한

수신 : 총남민중의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참조 : 총남민중의힘 소속단체 대표자, 집행위원장

발신 : 코리아총남연대, 총남대련

담당 : 지영철

제목 : 총남민중의힘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 사임요구서한

1. 지난 5월 14일 총남민중의힘 집행위원회에서 우리단체 성원들의 실명을 적시하고 사실관계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2차가해자로 매도하며 연대활동중지라는 비상식적 요구의 내용이 담긴 '공대위'공문이 공식 안전화되고 공공연히 논의된 사실이 우리단체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민주조직운영의 원칙에 철저히 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단체는 문제의 공문을 발송한 이른바 '공대위'에 항의서한발송,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증명발송, 개별적 사과요구전화 등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총남민중의힘대표자를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3. 그렇게 해서 결국 '공대위'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우리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공대위의 주요대표자와 집행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오늘 6월10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4. 동시에 '공대위' 공문을 공식안전으로 접수, 논의하여 소속단체들에 유포, 확산시킨 총남민중의힘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은 '공대위'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하고 민주조직의 운영원칙을 저버린 것임을 확인합니다.

5. 이런 이유로 우리는 총남민중의힘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사임을 공식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단체와 '공대위'의 공문에 실명적시된 활동가들에게 공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요구사항이 민중의힘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한 이메일(cnec2012@gmail.com)을 11일(화) 오전 9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6.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우리단체는 총남민중의힘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책임자 사임건을 공식안전으로 제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자회의소집이 늦어지거나 그 회의에서 또다시 위의 정당한 사임건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첫째, 충남민중의힘이 더 이상 균형있는 지역연대체로서의 상식적 역할이 불가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제단체들과 충남민중의힘 탈퇴할 것이고, 둘째, '공대위'와 관련된 주요인사들과 충남민중의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의 모든 악의적이고 잘못된 발언들과 행동들을 일일이 비망록에 정리해 사퇴이유로 공개할 것이며, 셋째, 대화로 해결될 수 없음을 공식확인하며, 충남민중의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을 '공대위'의해당책임자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충남민중의힘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0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교리아충남연대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충남민중의힘 대표자회의 소집요구서한

수신 : 충남민중의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참조 : 충남민중의힘 소속단체 대표자, 집행위원장

발신 : 코리아충남연대, 충남대련

제목 : 충남민중의힘 대표자회의 소집요구서한

1. 우리단체의 '충남민중의힘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 사임요구서한'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기에 충남민중의힘 긴급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단일안건으로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 사임의 건'을 제의합니다.
2. 긴급대표자회의의 개최일정은 17일(월)로 하며 소집일정과 관련된 답변을 13일(목) 20시까지 이메일(cnec2012@gmail.com)로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차 밝히지만 대표자회의소집이 늦어지거나 그 회의에서 또다시 위의 정당한 사임건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첫째, 충남민중의힘이 더 이상 균형있는 지역연대체로서의 상식적 역할이 불가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계단체들과 충남민중의힘을 탈퇴한다

둘째, '공대위'와 관련된 주요인사들과 충남민중의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의 모든 악의적이고 잘못된 발언들과 행동들을 일일이 비망록에 정리해 사퇴이유로 공개한다.

셋째, '공대위'의 우리에게 대한 명예훼손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최만장상임대표와 정한구집행위원장에 대한 형사및민사상 고소를 한다.

2013년 6월 11일

자주동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충남연대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공대위’ 탈퇴와 사과 요구서한

수신 : <통진당 이00 충남대련 김00 공대위>의 현재 소속단체인 <민주노총충남본부, 전농충남도연맹, 진보신당충남도당, 천안여성회, 충남노동전선, 충남사노위, 충남성폭력상담소, 노동인권센터>

발신 : 코리아충남연대, 충남대련

담당 : 대표 지역철 [REDACTED]

제목 : ‘공대위’ 탈퇴와 사과 요구서한

1. ‘공대위(<통진당 이00 충남대련 김00 공대위>’는 현재 우리단체성원들을 성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허위공문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그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며 연대운동중단요구라는 비상식적인 반운동적인 안건으로 지역연대운동에서 분열과 혼란의 근원으로 되고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2. 그간 우리단체는 문제의 공문을 발송한 공대위에 항의서한발송,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증명발송, 개별적 사과요구전화 등 합리적인 내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시각까지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이나 성의있는 해결책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3. 그 결과 우리단체성원들의 심각히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공대위’의 집행책임자와 주요대표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지난 6월 10일, 11일 각각 이미 진행하였음을 재확인합니다.
4. 우리는 귀단체가 지역연대운동을 분열시키고 지역활동가를 매도하는 그릇된 행동을 벌이고 있는 ‘공대위’에서 즉시 탈퇴하고 그 활동으로 인해 심각히 명예가 훼손된 우리단체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메일(coreaydcn@gmail.com)을 6월 17일(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5. 만약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공대위’에 소속된 귀단체의 대표자를 상대로, 우리단체성원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6. 우리는 귀단체와 귀단체의 대표자가 지역연대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충남연대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통합진보당충남도당 당기위원장 사임요구서한

수신 : 통합진보당충남도당 당기위원장

참조 : 통합진보당충남도당 위원장, 사무처장

발신 : 또다른피해자모임 ('공대위'가 2차가해자로 실명적시한 김정희, 남창우, 방진호, 지영철, 차상엽, 최민, 한준혜, 한지은, 한혜인/ 가나다순 - 대표담당 : 지영철 [REDACTED])

제목 : 통합진보당충남도당 당기위원장 사임요구서한

1. 통합진보당충남도당 당기위원장은 첫째, 우리와 관련된 내부적인 제소사건을 공공연히 외부에 유포하여(5월 14일 충남민중의힘 집행책임자회의에 '공대위'의 명예훼손 공문을 공식 안전화) 널리 전파되게 하고, 둘째, '공대위'소속단체 성원을 당기위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며, 셋째, '공대위'와 밀접히 연계해 활동하는 등 공정성과 분별력을 상실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공정해야 할 당기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 이에 통합진보당충남도당 당기위원장직을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만약 당기위원장 사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통합진보당충남도당의 당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비롯 통합진보당충남도당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당원들의 소중한 정치생명과 명예를 훼손하며 정당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한 책임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히 물을 것을 확인합니다.
4. 또한 이미 '공대위'의 주요대표자와 집행책임자에 대해 각각 6월 11일, 10일 명예훼손 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충남민중의힘대표자회의의 개최와 그 논의를 지켜보며 충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으로서 자행한 명예훼손방조라는 범죄의 법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6월 12일

또다른피해자모임 ('공대위'가 2차가해자로 실명적시한 김정희, 남창우, 방진호, 지영철, 차상엽, 최민, 한준혜, 한지은, 한혜인/ 가나다순)

또다른피해자모임

2013. 6. 17. <제1호>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끝장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다른피해자모임은 잘못된 성폭력2차가해 규정의 악용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막고 심각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연대운동의 대의와 민주적인 조직운영의 원칙을 지키며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한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우리의 실천으로 그간 잘못된 지역연대운동의 기풍을 쇠신하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명예훼손 인권침해 공대위를 해체하라!

이른바 <통진당 이00, 충남대련 김00 성폭력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고 성폭력2차가해자로 매도하는 허위사실을 담은 공문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우리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는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였다. 우리는 합리적인 대화요청 및 사과요구를 여러 번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동지를 마치 적(사측)으로 규정하고 성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공대위의 주요 대표책임자는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한 데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공대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지역운동 분열시키는 책임자를 해임하라!

충남민중의힘은 단결을 지향하는 연대체이지 동지를 내모는 분열체가 아니다. 공대위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문을 접수하고 동지들에 대한 지역연대활동중지요구라는 진보운동역사상 들어보지 못한 안전상정, 논의유포 사태가 충남민중의힘 공식회의에서 벌어졌다. 우리는 민주적인 조직운영 원칙을 망각하고 연대정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표자회의소집을 정당하게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공대위와 한 몸이 되어 지역연대운동의 정신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동지를 공격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충남민중의힘 대표와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역연대체로서의 의의를 상실한 충남민중의힘의 탈퇴도 불사할 것이다.

당신도 <성폭력2차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성폭력2차가해>의 규정이 진정한 피해자보호가 아닌 주관적 자의적으로 악용되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무소불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담배녀>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남자친구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즐담배를 피운 것이 남성성을 과시한 성폭력이라는 가치판단을 거부한 당시 서울대사회대학생회장을 <성폭력2차가해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중심주의가 왜곡되고 문제제기한 여성단체들이 사과하였던 사례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도 왜곡된 피해자중심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성폭력2차가해자>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왜곡된 피해자중심주의가 모든 가치판단, 행동의 절대기준이 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낸다면 실체적 진실과 가치판단의 자유와 다양성이 매장당하는 21세기판 마녀사냥으로 될 것이다.

부당한 통진당 당기위의 2차가해 판결은 원천무효이다!

통합진보당 <당기위>는 이미 2차가해자로 판결을 내리고 심판하는 <공대위>의 소속단체 성원을 조사위원으로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조사과정과 판결과정에서 <공대위>와 함께 편향적으로 활동하는 등 사실상 두 개의 당기위가 존재하였다. 징계결정문에도 우리의 소명과 상관없는 왜곡된 사실관계들을 나열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성폭력2차가해자로 규정하면서 자격정지 1년 등의 중징계결론을 내렸다. 이는 원천무효임을 확인하며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징계무효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사하고 결론 낸 당기위원장과 당기위원들을 즉각 해임하고 징계해야 한다.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단탈당도 불사할 것이다.

명예훼손 인권유린 책임자는 사퇴하라!

지역운동 분열시키는 책임자를 해임하라!

억울한 2차가해 양산하는 공대위는 해체하라!

부당하고 불공정한 당기위결정을 원천무효화하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왜곡된 피해자중심주의로 진실을 가리우고 또다른피해자들을 양산하는 21세기판마녀사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른바 '공대위 공개입장문'에 대한 반박문

이른바 '공대위'의 공개입장문의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기에는 그 허위사실과 왜곡논리가 끝이 없어, 일단 오늘 우리의 선명한 입장부터 밝힌다.

1. 우리는 이른바 '공대위'가 공개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피해자중심에 서있는 듯 자기포장을 하는 위선적 작태야말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단체는 여성인권을 운운하면서 또다른 여성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진보운동을 운운하면서 진보운동동지들을 매장하고 연대운동을 파괴하며, '피해자중심주의'의 진의를 왜곡하고 술한 허위와 음해로 또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가장 위험한 유해집단임을 만천하에 확인한다. 만일 이런 식의 21세기판 마녀사냥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활동가들, 시민들이 '성범죄자'로 낙인되며 사회정치적 생명이 절단 나갔는지, 그러다가 심각한 이들이 목숨까지 끊지는 않을지를 생각하니 치밀어오르는 격분을 참을 수 없다. 우리는 '공대위'야말로 지금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공연히 실명까지 적시하며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범죄를 저지른 단체이고 지금도 사건을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회운동가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가장 질이 나쁜 유해집단임을 앞으로 낱낱이 폭로할 것이다.

2. '공대위'가 전가의 보검처럼 사용하며 뽐뽐스럽게 '피해자중심주의'를 왜곡해 악용함으로써 그 본래의 소중한 내용이 오히려 훼손될까 두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런 경우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대위'처럼 언제든 왜곡해 쓸 수 있는 '피해자중심주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진실이다. '피해자'의 말이 진실인데 '가해자'의 말이나 힘에 눌러 왜곡되어서도 안되지만, '피해자'의 말이 진실이 아닌데 '가해자'를 공격하려고 정당화되어서도 안된다. 사건을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전제해야 할 것은 진실이지 피해자나 아니냐가 아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사회경험상 '피해자'의 진실이 '가해자'의 말과 힘으로 왜곡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 제기된 것이지, 지금처럼 또다른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일부운동권들이 다 른운동권들을 정파적으로 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쓰는 음해모략의 수단이다. 우리는 '공대위'가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중심주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여성운동적으로, 여성인권적으로 가장 위험한 반여성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신랄히 규탄한다. 우리는 앞으로 객관적인 실제적 진실을 밝히면서, '공대위'의 허위와 위선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고 여성운동, 여성인권을 도리어 훼손한 반여성만행을 강력히 단죄할 것이다.

3. 사실상 두개의 '당기위원회'가 정파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심판하였다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당기위의 최종판결 이전에 이미 결과는 나와 있었고 당기위의 조사와 판결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공대위'는 당기위조사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성범죄집단'으로 부당히 규정하고는 통합진보당당기위와 긴밀히 공조하며 당기위의 황당한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당기위의 조사위원에 공대위성원이 참여한 것이나, 총남민중의힘집행위원장을 겸한 당기위원장이 공대위와 함께 사건을 안건으로 논의한 것만 봐도 명백하다. 당기위는 말그대로 당내 '재판기관'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에 사실상 피해자의 대리인격이고 우리에게 대한 명예훼손의 가장 극렬한 집단의 성원을 참석시킨다든지, 소속단체를 보호하고 연대운동을 촉진해야 할 연대체의 집행책임자가 초보적인 민주적 조직운영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비소속단체가 소속단체성원들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방조한다든지 하는 분별력없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 당기위의 판결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통합진보당분당사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통합진보당은 도당까지도 오직 패권에 눈먼 종파적이고 정파집단들에 의해 '진보정당의 대의'나 '진보운동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지 오래됐다. 진보운동의 소중한 동지들을, 객관적 사실규명에 대한 초보적인 원칙과 노력도 없이 이른바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전가의 보도를 들어 '성범죄자'로 낙인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악질적인 행태에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을 위해 그간 술한 밤을 지새며 피땀을 바치고 헌신분투했던 나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차츰은 울분을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사전에 판결을 계획한 '기획자공대위'와 실제로 판결을 통과시킨 '거수기당기위'의 더러운 커넥션을 앞으로 남김없이 밝혀내고 온천하에 고발할 것이다.

4. 우리는 진보운동내의 갑의 지위에 있는 상층의 패권적 작태가 이제는 을의 지위에 있는 기층의 동지들을 쳐내다 못해 '성범죄집단'이라는 주홍글씨를 찍어, 공안당국을 능가하는 마녀사냥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을 절단내려는데 가장 심각한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운동가로서의 순수했던 초심은 이미 오래 전에 온데간데 없고 또다른 운동권내 갑이 되어 벌였던 행태들을 일일이 거론하면 24시간 밤을 새도 모자란다. 기령 우리는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책임자가 한 남성동지를 부당히 구타했던 사례나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집행자가 모성추문사건에서 보였던 이중적 작태를 똑똑히 기억한다. 심지어 지난 해에는 한 여성동지가 지금 이 진보운동갑들에게 폭행당한 사례까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확인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운동권들이 운동권갑들의 횡포와 만행에 한발 물러서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행태와 더 큰 아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심장깊이 각인하였다. 그래서 늦

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우리는 운동권갑들이 뚫뚫뚫어 어떠한 협박과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한치의 굴함없이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사회 정치적 명예를 지킬 것이며 운동권갑들이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반운동적 작태들의 악순환을 이 기회에 반드시 끊어버릴 것이다.

5. 우리는 생명보다 귀중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킨 범법자들, 인권유린자들이 해임되고 21세기 마녀사냥이 바로잡힐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곳곳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 진보운동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키며 분열과 혼란의 원천지가 되고 있는 '공대위'를 즉시 해체하며 '공대위'의 책임자들은 공식사과하고 주된 책임자와 실무자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충남민중의힘에서 '지역연대활동중지요구'라는 진보 운동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황당하고 수치스런 의제결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 소속단체를 보호하고 연대운동을 촉진하기는 커녕 열심히 실천하는 동지들을 21세기 마녀로 사냥하며 운동대오의 분열을 조장한 이 종파적이고 한심한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셋째, 잘못된 당기위의 판결을 무효로 하며 당기위원장과 조사위원을 해임, 징계해야 한다. '공대위'해체·책임자구속! 민중의힘책임자들해임! 당기위결정무효·당기위원징계!

'공대위', '충남민중의힘', '당기위'에서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파렴치하고 종파적인 운동권갑들에게 고한다. 사람을 잘못 봤다. 아무리 우리가 운동권을 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사회정치적 생명, 명예, 자존심이 목숨보다 소중한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싸움에서는 단한치도 물러섬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끝까지 맞서 싸운다는 것을 운동권갑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권갑들이 저지른 죄과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며 사회운동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특히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 철저히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운동권갑으로서 행세하다가 어느새 이 그릇된 세상의 갑들을 닮아있는 그대들의 조포한 모습에 스스로 전율하라!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상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켜라! 운동권갑들의 횡포무도한 작태가 어느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른바 '공개입장문'은 갈수록 당신들을 옥죄는 준엄한 정치적 사형선고장이 될 것이다.

6월 19일 또다른피해자모임

자료26[파일] 성폭력 2차가해 남용으로 인한 인권피해사례 워크샵 음성(QR코드) (6.25)

성폭력 2차가해 남용으로 인한 인권피해사례 워크/크/샵



일시 | 2013년 6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 온양관광호텔

주최 | 21세기충남여성회

사회_ 차은정 21세기충남여성회 회장

발제1_ 성폭력 2차가해에 대한 정의와 기준

- 김정희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발제2_ 이른바 공대위활동의 또 다른 피해를 양상해 낸다 - 지영철 대안경제센터 대표

발제3_ 2차가해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발표 (피해자증언)





또다른피해자모임은 통합진보당충남도당당기위원회 징계결정에 항의하며 충남도당사무실을 방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노총충남본부의 반민주적 글삭제, 여론차단에 강력히 항의한다!

-아무리 삭제해도 진실을 가리울수 없다!

25일 오전 민주노총충남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었던 우리의 글이 전부 삭제되는 등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토론과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 글삭제를 자행한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비상식적인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노총충남본부가 공지사항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았지만, 삭제된 글의 복구는 물론이고 홈페이지 관리자와 직접 삭제한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없다면 이는 공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충남본부의 '무단글삭제'라는 반민주적 여론억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2차기해의 부당성과 21세기판 마녀사냥, 운동권갑들의 패권적 횡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6월 26일 또다른피해자모임

민주노총충남본부 앞 천막농성 5일째!

또다른피해자모임은 민주노총충남본부 건물 앞에서 2013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파켓시위를 진행했으며 6월 24일부터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예의상 화장실 사용도 민주노총충남본부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현관 앞에는 민주노총충남본부의 명의로 또다른피해자모임 구성원들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경고문도 붙어있다. 민주노총충남본부의 간부들이 우리의 천막농성 모습을 몰래 사진을 찍어 개인 페이스북에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식의 화풀이를 하고 있다. 또한 질문에 대답을 안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여론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 유계시판의 우리글들을 무단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들, 전형적인 갑의 모습이다.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두박두박 걸어갈 것이다.

아래는 민주노총충남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우리의 입장이다.

6월 28일 또다른피해자모임

운동권갑들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명확하다. 민주노총충남본부를 중심으로 연대단체를 묶고 공대위라는 임의단체를 급조하여 소수의 사람들을 '성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등의 21세기판 마녀사냥을 벌이는 운동권갑들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명확히 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간명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운동권갑들의 무차별적 마녀사냥과 부당한 횡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어제는 폭력, 오늘은 마녀사냥인가! 이제 운동권갑들의 패권적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며 그냥 숨기며 넘겨버릴 일도 아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부터 휘두르는 일이 어디 한두번이었는가. 폭력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양심을 믿고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대중들은 조폭을 능가하는 폭력을 행사한 운동권갑들의 만행에 대해 일일이 기억하고 있으며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둘째, 우리를 성범죄집단으로 매도한 부당한 2차기해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 것이다! 그동안 근거없이 2차기해라는 마녀사냥식 왜곡과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파적 목적의 희생양이 되었는가. 오로지 피해자의 말만으로 공대위가 이미 우리를 성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충남민중의힘에서 몰아내려고 한 과정은 그야말로 21세기판 마녀사냥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억울함뿐 만 아니라 그동안 왜곡된 2차기해규정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에도 같이 연대하며 싸울 것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홍글씨를 덧씌워 성범죄집단으로 몰아도 진실은 가리울 수 없다.

셋째, 우리는 통진당 당기위의 부당한 정치판결을 반드시 무효화시킬 것이다! 공정성과 균형성은 당기위의 기본이다. 하지만 통진당 당기위의 이번 조사, 판결과정은 공대위의 형식적 거수기노릇을 하며 철저히 우리를 2차기해자로 내몰기 위한 정치재판이었다. 당기위의 모든 조사과정이 실시간으로 공대위와 소통되고 심지어 충남민중의힘에서 안건논의, 유포된 사실은 진보진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되묻고 싶다. 공대위의 소속단체들이 언제 통진당을 신뢰하고 믿었던 적이 있었는가. 공대위의 정파적 목적에 철저히 이용당한 통진당 당기위의 부당한 조사와 판결은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우리는 아래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울 것임을 재삼 확인한다!

21세기판 마녀사냥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대위'를 즉각해체하라!

지역운동 분열시키는 충남민중의힘 주요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

명예훼손 인권유린 공대위 주요책임자는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부당한 징계결정 통진당 당기위원장, 당기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6월 28일 또다른피해자모임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 천막농성 7월 1일 "진보갑"

지난 주말에 진행된 최저임금 5,910원 쟁취를 위한 건기대회가 신정호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른바 진보갑에게 성폭력2차가해라고 낙인찍힌 소속단체에는 행사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 이른바 왕따를 당한 것이다.

충남지역의 진보갑은 자신의 질서에 수긍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고립시키거나 심지어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굴복시킨다. 사회운동을 한다면, 서로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풍토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대화하자고 몇차례 요구해도 무시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갑은 을을 만나주지 않는다.

어느새 진보갑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철저히 외면당한다. 10년 넘게 지역활동을 해도, 자기맘대로 선거출마도 못하게 완력으로 막아나선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후배의 이야기가 마음에 안든다고 폭행은 기본이다. 이런 모습은 내용으로 논리가 없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리게 뭘아냐, 너희가 전쟁을 알아?와 같은 맥락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누르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갑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권위를 유지한다. 갑의 모습에 주변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 이 또한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진영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도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진보갑은 권위를 앞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애써 사임하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함께 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같이 안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갑은 요즘은 아무나 조직 만들어서 대표한다며, 가입회원수와 심지어 돈내는 회원이 얼마인지도 시시콜콜 캐물으면서 조직의 전통성을 따진다. 진보갑이 허락하지 않는 단체를 늘 검증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은 충남민중의힘 가입할 때 여실히 드러났다. 충남민중의힘 가입은 강령에 동의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두를 환영해야 한다. 하지만, 진보갑이 달가워하지 않는 단체는 가입조차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다. 회의참관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여도 누구하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검증할 권한은 없다. 검증은 오로지 실천뿐이다.

이렇다보니, 활동가의 사회정치적 생명도 함부로 하는 거다. 더욱이 10년 넘게 여성운동을 한 활동가에게 단한차례 사실확인조차 없이 공개적으로 성폭력2차가해자로 규정짓고 공식회의에 회람하고 심지어 홈페이지 공고란까지 보란 듯이 올려놓는다. 진보갑의 권위를 이용한 대표적 모습이다. 언제부터 통합진보당을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위있는 조직의 대표자 말 한마디에 활동가들은 죽고산다. 지나가다 툭 내뱉는 말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보갑이 직접 나서서, 성폭력2차가해자들이라고 공개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조직공식입장까지 내올 정도면, 성폭력2차가해자들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권위있는 조직의 대표자나 주요간부라고 해서, 사람의 정치적 생명, 목숨보다 소중한 명예를 함부로 모욕할 권한을 준적은 없다.

지금 성폭력2차가해자로 낙인찍힌 이들의 목소리는 억울한 것을 호소한 것도 있지만, 이는 현상일뿐 본질은 진보갑들의 불의와 횡포에 맞서는 정의의 투쟁이다. 누구나 느끼지만 아무나 감히 말하지 못하는, 충남지역내에서 벌어진 그동안의 진보갑의 유형무형의 폭력에 대한 용감한 문제제기이다.

진보갑은 처음부터 없는 거다. 진보엔 갑을 없기 때문이다.

7월1일 또다른피해자모임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 천막농성 7월3일 진보갑, 스스로를 돌아보라

분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를. 아무리 자신은 주관적으로는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무감각하게 되고 끝내는 인간적양심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점점 분파주의적으로 됐던 것은 결국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지 않았던데 있다고 기본원인을 분석했다.

분파주의적 독소에 물들고, 점점 분파주의적으로 된 것은 나에게 주체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주체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인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고 실천하고, 모든 일을 인민의 이익에 맞도록 해결해 갈 수 있는 관점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좁고 얇은 경험에서 나온 생각만을 말하고 행동해온 것을 마치 주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책임했던 것이다. 혁명에 대한 바뀌 말 하면 자기와 인민의 운명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없이 주체의 확립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혁명가 다미야다까마로가 자신의 좌경적 활동을 총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한 대목의 일부를 발제한 것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본인 스스로의 넓은 생각을 마치 운동의 신념인양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싶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경험과 주관 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종합분석해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단지 현상적으로 보이는 사건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수십년 운동의 경험을 앞 세워 자신의 주관만이 기준과 원칙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오늘 쏟아져 나온 것이다. 민중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신념있는 활동가들에게 2차기해라는 멍에를 지우고 지역사회에서 찍어 내려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충남지역의 진보갑의 솔직한 자기 총화없이 지역운동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진보갑은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에 치졸하고 유치한 방해와 하고 있다. 이는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수준이다. 생각보다 수준이 낮다.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말이다.

우리는 오늘도 뚝뚝뚝 걸어간다.

운동은 내 자신의 요구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노선에 맞게 앞으로 통이 크게 사업을 할 것이다. 우리를 2차기해자라고 지목하고 지역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이 탄압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규탄성명서를 지역에서 발표했다. 이것이 연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낡은 것과 결별하고 새 시대의 시대정신에 따라 실천할 것이다. 시대는 늘 그렇듯이 힘있는 자와 다수의 편이지만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 기억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우리 그 때를 기다릴 것이며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다.

7월3일 또다른피해자모임

충남민중의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성명

진보의 슈퍼갑, 이제는 마음대로 ‘지역연대체’ 마저 깨버리는가!

7월3일 충남민중의힘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진보운동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역사는 이날을 지역연대운동의 사망선고일로 기억할 것이며, 일부 활동가와 소속단체를 쫓아내지 못해서 스스로 연대운동과 연대단체를 파괴한 진보슈퍼갑의 비이성적 행태를 낱알이 기록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해서 충남의 진보갑들은 그동안 ‘연대’운동이 아닌 ‘분열’운동을 추구했으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준이 다르면 단체 하나쯤은 언제든지 깨버릴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충남민중의힘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연대단체’이지 분열을 부추기고 활동가들을 내치는 ‘분열단체’가 결코 아니다. 5월 14일에 이어 또다시 일부활동가들에 대한 ‘연대활동중지’와 ‘소속단체배제’라는 비상식적 안건을 다수단체의 힘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한 사실은 이미 충남민중의힘이 진보갑들에 의해 균형있는 지역연대체로서의 의의를 상실했음을 말해주며, 과연 누가 단결을 원하고 분열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확인시켜주었다. 누가 누구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누가 어떤 단체를 배제시킨단 말인가! 활동가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고, 소속단체의 자주권을 침해할 권리와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소속단체로서 지역연대운동의 분열을 부추기는 안건상정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지만, 정확히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연대단체를 강제 해산시켜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공대위’를 조직하여 일방적 왜곡주장과 우리단체 성원들의 실명을 적시한 명예훼손문서를 유포, 확산한 엄중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억울한 피해를 양산하는 공대위해체와 주요책임자가 사과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연대운동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를 부당하게 ‘성범죄집단’ ‘2차기해자’로 규정하는 활동가나 단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권력과 자본의 탄압을 받는다면 우리는 가까이 함께 비를 맞으며 싸울 것이다. 실제 우리는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등의 공안탄압을 받은 단체, 지역의 활동가와 관련하여 충남민중의힘 소속 어느 단체도 하지 않았던 ‘연대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 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 관점이며 정신이다. 지금은 진보갑들의 횡포에 의해 송고한 연대정신이 깨지고 연대단체가 강제 해산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진정한 연대의 원칙과 정신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7월3일, 역사는 이날에 벌어진 분열의 책임자, 진보슈퍼갑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누가 연대정신을 훼손하고 파괴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7월4일

코리아충남연대

[천막외침1] 우리는 왜 당기위를 거부하고 탈당하였는가

우리 또다른피해자모임은 당기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통합진보당 사태에도 하지 않았던 탈당을 하였다.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항간의 떠도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핵심은 당기위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있다. 이미 도를 넘어 각급단체를 쫓아다니며 통합진보당 징계결정문을 설명하고 우리를 범죄집단으로 내몰기위해 혈안이 되있는 공대위 소속단체들의 저열한 행태와, 아무런 상관없는 국가기관에까지 관련 공문을 보내는 통합진보당의 저급한 모습은 이들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 이른바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매장시켜버리는데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시켜준다.

당기위는 이미 우리를 2차기해자로 결론내리고 있었다. 제소되었음을 알리는 당기위의 제소장과 2차기해자로 규정한 공대위의 협박공문이 동시에 날라왔다. 이것이 공대위와 당기위의 검은 커넥션의 시작이다. 조사중인 사건임에도 당기위원장이 공대위와 함께 사건관련 안건을, 그것도 실명을 공개한 문서로 징계를 공식회의석상에서 논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굳이 비밀엄수라는 당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누가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것이다. 이것이 공대위와 당기위의 두번째 커넥션이다. 당기위의 성폭력관련 조사위원회에 공대위 소속단체의 운영위원이 포함되었다. 공대위가 밝히는 바와 같이 자신들을 이른바 피해자대리인격이라고 한다면 당기위의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있는 격이 된다. 이것이 당기위와 공대위의 검은 커넥션 세번째이다. 우리는 당기위조사과정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당규가 정한 바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공정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기위원장의 사과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당규에는 서면조사, 출석조사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에도 공대위는 우리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인 왜곡선전을 하였다. 이는 오히려 당기위의 조사과정이 실시간으로 공대위에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우리의 소명을 단 1%도 반영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지않은 사실관계마저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로만 가득매운 자극히 주관적 판단의 징계결정문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충남대련 김00관련 조사과정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석조사에 임하자아예 공대위 성원을 배석시키고, 유도심문을 하기도 하였다. "당신이 각하된 이유는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한 조사위원의 발언은 당기위의 조사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혐의를 씌워 징계를 내리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제 통합진보당이 지역에서 이렇게 인정받은 적이 있었는가. 공대위의 요구에 화답하여 척척 판결을 해주니 그야말로 재판관공대위에 거수기당기위가 정확하다. 우리는 사실상 두 개의 당기위, 이미 판결내린 형식적 조사와 결론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대한 마녀사냥식 정치재판은 진보운동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당기위원장과 당기위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끊임없이 물을 것이며, 현재 통합진보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계결정문 회람과 유포도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7월11일 또다른피해자모임

〈2차기해는 없다〉



[천막외침2] 우리는 왜 민주노총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가

우리 또다른피해자모임은 민주노총충남본부 앞에서 매일 천막농성을 하고있다. 자본가도 적들도 아닌 민주노총 앞에서 왜 우리가 천막까지 치면서 항의 농성을 해야하는가. 1차가해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대위의 선전은 명백히 왜곡이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관적 욕망에 지나지않는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이른바 피해자의 '말'만으로 결론 내린 후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는 2차가해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있는가.

이전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공대위를 구성하고 운영했으며, 어이없이 해산된 충남민중의힘도 민주노총본부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책임이 어느 단체보다 큰 것이다. 십분양보해서 만약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면 그 또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해야하며 그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천막농성을 시작한 초기에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우리의 글들을 무단 삭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이며 현재 민주노총의 실상을 알수있는 단면이다.

민주노총 성폭력 매뉴얼을 보라. 핵심은 공정성과 균형성이다. 가해자낙인찍기, 피해자주관주의 등을 주의하여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사건에 접근해야 함이 설명되어 있다. 만약 그 진상조사위 구성을 통합진보당 당기위로 대체하였다면 실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며 책임전가이다. 또한 우리는 당기위결정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천막농성이라는 극단적 투쟁을 선택하기 한 달 전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공대위에 여러차례 항의방문도 하고 항의서한도 보내고 심지어는 경고하는 내용증명도 보내면서 합리적인 '대화'와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미 우리를 2차가해자로 낙인찍은 것에 대한 반증이다. 얼마나 우리를 2차가해자로 낙인찍고 싶었으면 충남민중의힘 공식회의 석상에서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건의 당사자들 실명을 공개하며 징계내 리지는 안건을 논의하였겠는가. 민주노총이 주도하였다면 스스로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 이 상식이다. 민주노총이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그 결과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이미 2차가해자로 낙인찍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가 만든 민주노총성폭력매뉴얼을 보라. 이른바 피해자, 가해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신중성을 기하는지를, 피해자중심주의가 피해자주관주의로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가해자낙인찍기가 아닌 성폭력문화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천막농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2차가해라며 중지하라는 공대위의 공문이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온다. 우리를 계속해서 2차 가해범죄집단으로 몰고가면서 사건을 계속 확대시키는 것이 스스로가 말하는 피해자중심주의와 진정한 사건해결인지를 냉정히 돌아보라.

우리는 민주노총처럼 수만의 조합원들도 없고, 충남민중의힘을 마음대로 깨버릴 힘도 없다. 하지만 결단코 2차가해자들이 아니라는 억울함과 양심, 스스로의 존엄이 있다. 또한 우리는 민주노총처럼 많은 단체를 규합하여 토끼몰이식 마녀사냥을 하는 공대위 같은 단체를 조직할 힘은 없으나, 그 누구든지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받는다면 가까이 연대하여 싸우고 함께 탄압받을 수 있는 연대의 정신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민주노총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이다.

7월12일 또다른피해자모임

[천막외침3] 우리는 왜 '2차가해는 없다'라고 주장하는가

우리 또다른피해자모임은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부당한 폭력을 분명히 반대함을 밝힌다

우리는 우리 9명에게 들쭉워진 2차가해규정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1차가 아니라, 2차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2차가해규정이라는 절대적 권력 앞에 무릎꿇고 또다른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주관적 잣대와 일방적 규정은 그 어떤 대화와 토론도 불가능하게 했으며 일단 2차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여기에 어떤 반론도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나쁜' 2차가해자로 확정, 확대되어왔다. 그래서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하는 것이다.

핵심은 2차가해규정과 판결을 소수가 독점하여 이를 또다른 권력으로 활용해왔으며 폭력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며 강요해왔다는 데에 있다. 이에 문제제기하거나 의문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것은 또다른 2차가해자라는 폭력적 규정력으로 되어 스스로 몸을 움츠리게 된다. 이로써 이른바 성폭력 또는 2차가해 관련된 사건에는 반경 3km 안으로는 접근금지라는 새로운 매뉴얼이 탄생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이른바 성폭력론, 2차가해를 반대한다. 이는 폭력일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입장이 아닌 소수의 여성주의가 독점한 2차가해라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폭력성을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중세시대 사제의 말은 곧 진리요 법이었다. 사제의 뜻은 곧 하늘이기에 생사람을 잡아도 마녀를 잡은 옳은 일이기에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인행위가 무한 용납되고 합리화되었다. 올바른 노동계급의 역사엔 누가누굴 죽이는 이런 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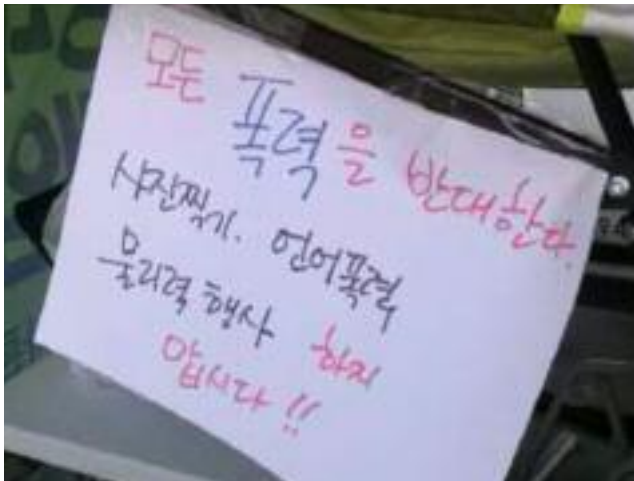
우리 또다른피해자모임은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들, 무결점의 순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주홍글씨로, 무자비한 낙인찍기로, 또다른 폭력적 규정성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들쭉워진 '2차가해자들'이라는 부당함에 단호히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9명에 대한 2차가해자라는 부당함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히고자 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우리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나갈 것이다. 이것마저도 2차가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뿐 아니라 모든 2차가해규정의 일방성과 폭력성을 밝혀낼 것이며, 노동계급의 진보성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2차가해규정의 반동성에 대해 진보진영 모두가 토론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7월15일 또다른피해자모임



공대위는 7월18일 충남본부사무실앞 천막농성장바로 옆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공대위의 기자회견에서 충남지역노조위원장 안성환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거짓진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노조원들이 또다른 피해자모임의 천막을 폭력난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7월18일, 공대위의 수십명이 기자회견을 가진 후 우르르 몰려와 천막을 난입, 폭력을 행사했다. 조합원 김태석은 욕설을 퍼부으며 책상을 발로 차고 현충남본부본부장인 정진희는 천막을 찢으며 위협을 가했다. 30여명의 사람 중 아무도 폭언·폭행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묵인·방관했다.

* 18일 - 공대위와 민주노총은 오전 11시 기자회견 후 천막에 난입하여 피켓을 부수고 천막을 찢는 등의 폭력을 가하였다.

18일 난입당시 음성파일

<http://www.youtube.com/watch?v=LYMWMdn-ss>

자료40[성명] 또다른피해자모임〈공대위의 천막파손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7.18)



공대위의 천막파손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18일 오전 11시 통진당 이00, 충남대련 김00 공대위가 민주노총충남본부 앞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우리 또다른피해자모임의 천막에 난입하여 피켓과 현수막을 찢고 훼손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우리는 공대위의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하여 폭력까지 행사하는 비상식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우리에게 대한 2차가 해지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공대위가 해체되고 책임자가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늘의 폭력같은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적 인민행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공대위의 오늘 폭력행위를 포함하여 기간에 있었던 진보갑들이 자행한 모간부에 대한 폭력, 학생활동가들에 대한 폭력과 공갈협박 등 모든 비상식적인 폭력만행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7월18일 또다른피해자모임



7월19일, 현대자동차아산비정규직지회조합 원 권수정은 충남본부사무실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천막으로 난입, 피켓을 부수고 책상을 넘어뜨리는 횡포를 부렸다.

계속되는 폭력의 끝은 어디인가

18일에 이어 오늘도 공대위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그 끝은 어디인지 의문이며, 이것이 바로 공대위가 목적하는 바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9일 아침 공대위 소속 민주노총 여성간부가 아무런 말 없이 우리의 피켓을 두동강내고 책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자행하였다.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일방적으로 2차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가.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피켓을 부수고 현수막을 찢는 행위는 자본이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탄압할 때의 딱 그 모습이다.

우리는 연이은 폭력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간부의 중징계를 촉구한다. 이를 묵인한다면 민주노총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에게 대한 폭력만행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7월19일 또다른피해자모임

* 19일 - 공대위 소속 민주노총 여성간부는 오전 9시 50분 경 천막에 난입하여 피켓을 두동강내고 책상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등의 폭력을 가하였다.

[천막외침5] 민주노총 반성폭력 매뉴얼을 기준으로 본 문제점과 과제

또다른피해자모임은 지난 〈2차 워크숍〉에서의 자료를 공개합니다.

-민주노총 반성폭력 매뉴얼을 기준으로 본 충남지역 성폭력사건 해결의 문제점과 과제

오른쪽 QR코드를 누르면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또다른피해자모임

자료44 [성명] 또다른피해자모임 〈천막농성 한 달을 맞은 우리의 입장〉(7.25)

[천막외침6] 천막농성 한 달을 맞은 우리의 입장

낙안찍기 집단따돌림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우리 또다른피해자모임은 민주노총충남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지 한 달을 맞아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가 천막농성과 법적대응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처음부터 우리를 2차가해자로 낙안찍고 철저히 배제하는 등의 집단따돌림을 해왔던 민주노총의 과도한 대응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가 천막농성을 하며 항의, 시위하는 목적은 이른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며 사태의 본질을 덮자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과 공대위의 마녀사냥식 일방적 2차가해자 낙안찍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현 상황을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몰고 온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총 충남본부장과 공대위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시종일관 사태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대화를 제의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방적인 2차가해자 규정과 부당한 연대활동중지 요구였다.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공대위를 구성하였고 민주노총이 선두에서 우리에게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천막농성장 피켓, 현수막 훼손 등의 폭력사태를 포함하여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한다.

2차가해자 낙안찍기 집단따돌림 공대위를 즉시 해체하라!

충남진보진영에서 언제 이런 공대위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연대단체 활동가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인 2차가해자 낙안찍기, 연대활동 배제라는 집단따돌림을 지속해온 공대위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충남 진보운동의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힘 있는 다수 단체들이 모여 힘없는 소수 활동가를 매장시키기 위한 공대위는 스스로 해체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현 상황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마녀사냥은 현 상황을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할 것이지만, 합리적인 문제해결은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촛불정세에 맞게 충남진보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이 총적인 책임을 지고 비상식적인 공대위가 해체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의 천막농성과 법적대응 등 극단적 방법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민주노총과 공대위에 있으며 천막농성 한 달을 맞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7월 25일 또다른피해자모임

천막농성은 접지만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우리 또다른피해자모임은 8월 6일까지 한 달 넘게 진행한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 천막농성을 접는다. 우리가 자본과 정권이 아닌 민주노총을 상대로 천막농성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는 공대위라는 간판을 내세워 단 한명의 조합원도 없는 우리를 부당하게 2차기해자로 낙인찍고 마녀사냥을 해온 충남진보갑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최소한의 방어였다. 천막농성 과정에서 충남진보갑들은 우리를 성폭력범죄집단으로 낙인찍는 것을 넘어 연대활동 중단, 연대단체배제라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며 충남민중의힘을 해산시키는 사태까지 만들었으며 천막의 집기를 부수고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의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노총과 공대위는 각급 단체들을 방문하여 우리와의 연대를 가로막고 우리사업을 방해하였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2차기해자로 낙인찍고 집단따돌림을 하면 할수록 대중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총이 조합원도 아닌 지역의 일부활동을 공대위를 구성하면서까지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2. 우리는 몇 분의 합리적인 지역운동선배들의 간곡한 부탁과 촛불정세에 부합하는 실천과 투쟁에 집중하여 복무하기 위해 천막을 접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충남에는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진보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운동선배들의 목소리도 살아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시대와 정세는 전국민적인 촛불항쟁을 요구하고 있다. 3.15부정선거로 하야하였던 이승만정권의 말로가 바로 국정원부정선거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머지않은 미래가 된 현 정국에서 이에 부합하는 실천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마음속의 천막을 치고 정세에 맞는 실천으로 복무할 것이다.

3. 우리는 천막을 접지만 충남진보갑들과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소수가 해석권을 독점하여 마녀사냥의 무기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온 2차기해의 부당성에 맞서 싸울 것이다. 진보운동의 발전과 하등의 인연도 없을뿐더러 지역운동을 분열시키고 소수의 활동을 매장시키려 하였던 공대위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공대위를 주도한 최만정민주노총충남본부장과 공대위의 거수기역할을 한 정한구통합진보당당기위원장, 연대중지문서작성한 오은희공대위실무간사 3인은 우리에게 대한 인권유린, 명예훼손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천막은 접지만 우리의 촉구는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4. 우리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인신공격과 욕설, 폭력이 난무했던 비상식적인 지역운동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화와 합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일방적인 낙인찍기와 집단따돌림을 거부하지만 상식적인 대화와 토론은 언제든지 받아들이 수 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다른 일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되어온 2차기해 담론은 운동진영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토론으로 해결해야 한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반성폭력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도 일방적 강요가 아닌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중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래야만 소수가 독점해온 성폭력론, 2차기해론이 권력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8월7일 또다른피해자모임

통합진보당 이동근/충남대련 김재환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충남 서산시 동문동 189-7 2층 / 메일 wisetfor308@hanmail.net / 팩스 041-686-5757 / 담당>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지()

문서번호 13-0925-001

수 신 충남대인경제센터

참 조 운영위 및 사무국

제 목 충남지역 내 성폭력사건 관련 가해자 및 2차가해자 사과지도요청의 건

1. 저희는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성폭력사건을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충남지역의 노동·농민·여성·정당·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2. 각종 기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등을 통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동근성폭력사건의 피해자 가영은 가해자 이동근 및 2차가해자 한준혜, 지영철, 한지은, 남창우, 한혜인, 방진호 외 1인(조사를 통해 제소가 기각됨)을 2013년 2월 28일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에 제소하였고, 김재환성폭력사건의 피해자 하늘은 가해자 김재환 및 2차가해자 김정희, 최민, 차상엽, 한지은, 남창우를 2013년 4월 15일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당기위원회를 통해 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지난 2013년 6월 28일 징계를 최종확정한 바 있습니다. (징계결정문은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공지사항 참조)
3. 당 공대위는 그동안 공조적인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결정이 신속히 이행되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징계가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및 공대위성원들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10년이 넘는 반성폭력운동으로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2차가해의 의미까지 부정하는 등 그 가해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조.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역고소한 피해자 가영,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육부장 오은희,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직부장 구재보에 대한 고소는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되었음)
4. 이에 당 공대위 소속단체들은 각 단체 별 회의체계의 공식적인 의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한편,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가해자들이 사건조사과정에서 모두 탈당하여 통합진보당의 징계를 무력화시키고 지역내 대중단체들을 이적단체 운운하면서 지역운동진영을 분열, 파괴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며 마지막으로 인내를 담아 이들이 주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제재와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아래와 같이 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오니 가해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치유되고 생존할수 있도록 귀 단체의 지도 및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 김재환 성폭력사건 관련 피해자요구사항

- 김재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제정([REDACTED])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김정희: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제정([REDACTED])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남창우: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제정([REDACTED])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차상엽: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제정([REDACTED])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최민: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한지은: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이동근 성폭력사건 관련 피해자요구사항

- 이동근: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남창우: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방진호: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지영철: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한준혜: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한지은: 모든 활동을 1년간 정지한다. (단, 시점은 김재환성폭력사건 관련 활동정지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

- 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한해인: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정지한다.
-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 10월 8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통합진보당 이동근/충남대련 김재환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인생략]

민주노총 충남본부 | 전농 충남도연맹 | 노동당 충남도당 | 전안여성회 | 충남성폭력상담소 | 충남노동인권센터 |
충남노동전선 | 충남 사노위 | [사]평화캠프 천안지부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제주여성인권연대 | 이동근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 김재환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682 폭행
피 고 인 박정우 ([REDACTED])
주거 [REDACTED]
등록기준지 [REDACTED]
검 사 송봉준(기소), 유새뜸(공판)
판 결 선 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은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2013. 10. 2. 작성
이 문서는 등(초)본입니다.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판부
검찰주사(보) 임규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8:45경 아산시 번영로 117 2층 아산농민회사무실에서, 피해자
한지은(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한지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밀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성득 _____

통합진보당 이동근/충남대련 김재환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충남 서산시 동문동 189-7 2층 / 메일 waeikfo95@hanmail.net / 팩스 041-885-5757 / 담당>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지영

문서번호 13-1014-006

수 신 대안경제센터

주 소

참 조 대표 및 사무국

제 목 충남지역 내 성폭력사건 관련 가해자 및 2차가해자 사과지도 재요청의 건

1. 저희는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성폭력사건을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충남의 노동·농민·여성·정당·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2. 당 공대위는 지난 9월 25일 공문을 통해 귀 단체 소속 '통합진보당 이동근, 충남대련 김재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 대한 귀 단체의 지도 및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1차 요청한 사과시한인 10월 8일을 지나 현재까지도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물론이고 회원들을 지도해야 할 귀 단체에서조차 어떠한 사과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치유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귀 단체의 지도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2차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철저히 반성, 혁신하여 거듭나길 바라는 피해자들의 마음과 피해자들의 생존과 반성폭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가 다시 한번 묵살된다면 공대위 소속 단체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강제할 것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성폭력 가해자들과 2차가해자들, 그리고 침묵으로 그들을 지지한 가해자들과 2차가해자들의 소속단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 김재환 성폭력사건 관련 피해자요구사항

- 김재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 [REDACTED]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김정희: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 [REDACTED]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남창우: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 [REDACTED]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차상엽: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 [REDACTED]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최민: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 [REDACTED]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한지은: 피해자의 주활동공간인 동아리 '희망숲' 회원들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다.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 [REDACTED]로 가해사실과 그에
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이동근 성폭력사건 관련 피해자요구사항

- 이동근: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남창우: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방진호: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지영철: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한준혜: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한지은: 모든 활동을 1년간 정지한다. (단, 시점은 김재환성폭력사건 관련 활동정지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다.

- 한혜인: 모든 활동을 피해자가 사과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정지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이수한다.

10월 22일(화)까지 피해자대리인의 계정()으로 가해사실과
대한 반성이 명시된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송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개할수 있
다.

<당 공문의 내용증명발송을 위해 공대위 직인은 집행위원장의 인장으로 대신합니다.>

통합진보당 이동근/충남대련 김재환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인생략]

민주노총 충남본부 | 전농 충남도연맹 | 노동당 충남도당 | 천안여성회 | 충남성폭력상담소 | 충남노동인권센터 |
충남노동전신 | 충남 사노위 | (사)평화캠프 천안지부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제주여성인권연대 | 이동근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 김재환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민주노총상근자가노동자를 위해 싸야할 업무시간에 민주노총과 관계없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공대위는 사무실앞에서까지〈왜곡매도〉하는 스토크적인 1인시위를 진행했다. 다니고 있는 대학 안에까지 들어와서〈왜곡매도〉하는 스토크적인 1인시위를 진행 하고 있는 충남본부간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진 2013가합2941 제명무효확인

원 고 이동근 [REDACTED]

11.11.201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브

담당변호사 김재중

피 고 통합진보당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5 순포빌딩 12층

대표 이정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승남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0. 2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6.자 제명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3. 10. 28

[별첨자료]

2013년 민주노총 충남본부 임시대의원 대회 결과

1. 일시 : 2013년 10월 23일(수) 16시

2. 장소 : 아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

3. 성원보고 : 대의원 104명중, 사교1(구속), 참석 대의원 74명으로 성원

※ 참고 참석대의원 명단:

<건설노조 충남본부> 이옥선, 양광순, 김태식, <플랜트 충남지부> 원희상, 홍순각, <공공운수> 최인재, 김인수, 이성민, 하태원 <공무원노조 세종 충남본부> 이연주, 인은환, 임복규, 정길재, 양진복, 유병환, 이승수, <금속노조 대원프라크 지회> 이병철 <대원강업 지회> 이주형, <다스아산 지회> 김태호, 최정문, <갈을오토텍 지회> 이대희, 안재범, 유영재, <분말아금 지회> 김기성, <대성엘피씨 지회> 조성철, <나스 테크 지회> 최용우, <세영테크 지회> 김진상 <대한칼소너 지회> 강신규, 심길재, <동희 지회> 강희훈, <현대아산사내하청 지회> 권수경, <위니아 만도 지회> 이원범, 서동석, 이규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장용환, 박재희, <동희오토 사내하청 지회> 최진일, <세경 지회> 서동현, 강정현, <현대제철 지회> 이경연, 이태호, 김태년, 김지혁, 김정열, 김태한, 엄태광, 손진원, 박성환, 김현진, <유성기업 지회> 양희열, 이태영, <현대하이스코 지회> 김중소, 심용산, <대학노조> 손창원, <상록리조트 노조> 이옥호, <전교조 세종 충남지부> 이세중, 강경화, 이은영, <전국학비노조> 권말봉, 박정훈, <원안 공원요원> 유세중, <충남지역노조> 안성환, 김봉진, 주낙곤, 김재훈, 박인용, 이홍재, 강현성, <화성노조> 정진희, 최동규, 강진오, <칠도노조> 이진석, 최절숙

4. 회순통과

- 안전 1. 2013년 추경예산 편성 승인의 건
- 안전 2. 본부 임원(일반 부분부장, 여성 부분부장) 선출의 건
- 안전 3. 지역내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결의의 건
(현장 발의 안전)

5. 안전 처리 결과

안전 1> 2013년 추경예산 편성 승인의 건

- 유희중 사무처장이 안전 설명함.
- 내용 요약 : 서부지부 해산에 따라 서부지역지부 기금(운영사업비, 결의금 등) 일체를 본부 예산으로 통합하고 이를 본부 추경예산으로 편성함.



코리아충남연대해산에 부처

이른바 <공대위>의 아만적 망동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코리아충남연대는 지난 11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공식 결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정사항을 11월 9일 코리아연대에 통보하며 산하단체들도 자동탈퇴가 완료되었음을 재차 확인한다. 이는 이성을 상실한 이른바 <공대위>측의 계속되는 아만적 망동에 일일이 맞대응하는 것이 진보운동과 지역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자기희생적인 조치이다. 더불어 두명의 사건관련자는 2012년 11월경에 이미 소속단체를 스스로 탈퇴완료하였다는 사실도 재확인한다.

우리는 <공대위>측의 이전투구판을 만들려는 기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아예 자기희생적으로 우리단체들로 구성된 임의의 연대체를 해산하지만, 이른바 <공대위>측은 종파패권적인 <진보갑>부류들을 보호하려고 지역의 공인된 공공의 연대체인 '충남민중의힘'을 해산한 사실을 역사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 <공대위>측이 비폭력적으로 항의하는 우리의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아버지연합>식으로 온갖 폭력과 욕설을 퍼붓고 홈페이지의 비판의견들마저 무단삭제한 사실도 역사는 잊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충남본부대대 사상최악의 수치스런 결정을 내리고도 모자라 후안무치하게 민주노총에까지 끌고가 민주노총마저 사상유래없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게 만든 사실도 이미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민주노총충남본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파적인 사이비운동권과 패권적인 <진보갑>부류들이, 정작 절박한 실천적인 진짜 <공대위>보다 운동권동지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반박근혜·반독재투쟁대열에서 떼어내려는 반운동권적인 이른바 <공대위>놀음에 골몰하는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할 수 없다. <2차기해>라는 여전히 논란중인 미확정(개념)을 악용해 십수년간 오직 실천투쟁에만 헌신하며 투옥도 마다하지 않았던 동지들을 실천대열에서 떼어내려는 행위에 대해, 과연 공인파쇼당국이 어떤 호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지 이른바 <공대위>측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심한 추종자들은 전율하며 자기반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역사가 이른바 <공대위>의 마녀사냥을 주도한 종파패권주의자들과 또 그에 부화뇌동한 추종자들의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망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을 확신한다. 그 역사적 기록을 위하여, 우리 9인은 지난 과정에서 최만정, 오은희, 이연재를 비롯한 종파패권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한 모든 아만적이고 황당한 망언, 망동을 실명과 함께 낱말이 비망록과 영상자료로 작성해 머지않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코리아충남연대는 해산되었지만 그 조직성원들이 일관되게 추진하였던 통합적이고 전투적인 진보운동과 지역운동, 연대운동의 기치는 결코 내릴 수 없다. 이후 사이비운동권의 전형인 이른바 <공대위>측이 어떤 황당한 시비질도 부릴 수 없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진보적인 대중운동, 연대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정의로운 대열에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역사가 부여한 우리의 임무를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처럼, 어떤 아만과 불의에도 굴함없이 전진하는 견결하고 순결하며 실천적인 진짜 진보운동과 그렇지 않은 <사이비 진보운동>이 무엇인지를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2013년 11월 26일

또다른피해자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동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건물 14층(100-702) / 전화 (02)2670-9100 / 전송 (02)2635-1134 / E-mail : kctu@nodong.org

문서번호 민주기획1108 - 068호

시행일자 2014. 2. 20.

수 신 코리아연대 대표

참 조 코리아연대 운영위원

제 목 충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 요청 건

1.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혁 저지! 총파업 승리!

2. 민주노총은 지난 해 11월 19일(화) 7차 여성위원회 회의를 통해 충남지역에 심각한 성폭력 사건 발생 및 2차 가해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통해 민주노총은 운동사회내 성평등한 문화 건설을 위해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그간 기여해 온 노력과 무관하게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및 2차 가해자, 주변인들의 충남본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비방과 공격들이 오간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3. 충남에서 발생한 두 건의 성폭력 사건 중 원 가해자 1인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안경제센터대표,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대표 및 2차 가해자 전원이 귀 단체의 지역조직 소속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해 11월 21일(목) 18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코리아연대가 본 사안과 관련한 공식 사과를 포함한 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별첨 : 민주노총 18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1쪽)

* 문의 : 신석호 정치·연대사업국장(02-2670-9189, [REDACTED])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 승철



[별첨] 민주노총 18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민주노총 18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 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14:00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총원 50명 중 사교 3명 (공석 3명) / 성원 47명 중 40명 참석

- 참석자 : 신승철 위원장, 양성운 수석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중기 교수노조 부위원장(대리),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처장(대리),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이정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대리),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 이재웅 서울본부장, 전재환 인천본부장, 김상현 경기본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민 충북본부장, 최만정 충남본부장, 박봉주 광주본부장, 민점기 전남본부장, 김달식 경북본부장, 김재하 부산본부장, 강성신 울산본부장, 김재명 경남본부장, 박경선 강원본부 사무처장(대리) / 이근원 정치위원장, 기형노 사무부총장, 박석민 사업지원실장, 박병우 노동기본권본부실장, 석권호 미조직비정규전력본부국장(대리), 이창근 사회공공성본부실장,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박혜경 교육원장 (이상 40명)

○ 서기 : 김성란, 채근식, 홍순광, 박 민

○ 의장 : 신승철 위원장

안건5. 기타안건

1) 21세기 코리아연대, 21세기 여성회 관련 민주노총 충남본부 요청사항

- 충남본부장이 별지에 의거하여 설명함.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21세기코리아 중앙에 피해자 요구사항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 충남본부 요구대로 연대파기 및 민중의 힘에 제제 요구할 것을 중집이 결정하고 그 시기는 상집에 위임하기로 함.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선수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팩스 02-2065-6378 | 이메일 corez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225 - 013호

시행일자 2014. 2. 25.

수 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참 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제 목 민주노총공문<민주기획1108 - 068호>에 대한 답변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중시했으며 민중의힘에 적극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단한번의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귀단체의 '연대파기 및 민중의힘 제재요구' 공문에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3.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귀단체와의 공식간담회를 요구합니다.
4. 간담회는 서로간의 협의하에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고 우리측이 충분히 소명하고 반론하는 자리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총남본부와 '공대위'의 주장은 이미 최대한으로 반영된 만큼 이들의 간담회참가 및 배석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우리가 제안한 공식간담회가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는 한편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자료56[판결문] 박정우, 징역4개월 판결 1심(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법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무국장인바,

2013. 1. 7. 18:45경 아산시 D,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학생인 피해자 E(27세) 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료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극구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혼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가랑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를 4회 가랑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사과해서 될 것 같으나, 각서에 지장을 찍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여학생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지장을 날인 하게 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부담의 의사를 담은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함으로써 사적 제재조치를 위한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행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기타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중구 청동 22번지 경향신문사 건물 14층(100-702) / 전화 (02)2670-9100 / 전속 (02)2635-1134 / E-mail : kctu@nodong.org

문서번호 민주기획1108 - 097호

시행일자 2014. 3. 7.

수 신 코리아연대 대표

참 조 코리아연대 운영위원

제 목 코리아연대 공문 '우리연대0226 - 013호' 관련 건

1.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2. 코리아연대 공문 '우리연대0226 - 013호' 관련입니다.
3. 민주노총은 3월 4일(화) 9차 상임집행위원회 및 제10차 투쟁본부 집행위원회를 통해 코리아연대 공문과 관련한 결정을 했습니다.
4. 9차 상임집행위원회 결과에 대한 답변을 3월 14일(금) 정오까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9차 상임집행위원회 및 제10차 투쟁본부 집행위원회 결과

1. 소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코리아연대가 요청한 간담회는 총남본부와 여성위원회 배석하에 진행한다.
3.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코리아연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18차 중앙집행위(2013년 11월 21일) 결정대로 집행한다.

* 문의 : 신석호 정치·연대사업국장(02-2670-9189, 02-2670-9189)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팩스 02-2065-6378 | 이메일 corea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311 - 07호

시행일자 2014. 3. 11.

수 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참 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제 목 민주노총공문<민주기획1108 - 097호>에 대한 답변

1. 이번 간담회가 민주노총이 18차 중앙집행위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측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공정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민주노총의 간담회수락공문을 환영합니다.

2. 다만 지난공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충분히 입장이 반영돼있는 <충남본부>의 배석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충남본부>가 논란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충남성폭력공대위>의 주된 소속단체일 뿐 아니라 양단체의 주된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겹쳐서 공정성·형평성·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충남본부>의 배석을 고수하려 한다면, <충남본부>가 비난해온 이른바 <2차가해자>측 중 일부의 참석도 보장해야 최소한 공정성·형평성·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석자들은 원칙적으로 청취만 하고 발언을 하지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꼭 발언해야 할 경우에는 사실여부만 확인하는 선에서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4. 민주노총공문에 언급된 소명문서자료는 간담회자리에서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진보노동뉴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392 101호 | 전화 02-718-8815 | 02-2065-6378 | 이메일 prolabournews@gmail.com

문서번호 진보노동뉴스 14-01호

시행일자 2014. 4.22

수 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참 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제 목 코리아연대 항의방문단 폭언폭행에 대한 사실확인

1. 4월 22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의 민주노총 항의방문과정에서 민주노총 상근자들에 의한 항의방문단 폭언, 폭행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시 바랍니다. 특히 6~8항의 상근자들의 이름과 직위를 알려주시 바랍니다.

- 아 래 -

1) 조경석국장은 11시57분경 진보노동뉴스 김동관기자가 사진을 찍자 <년 뭐야>라고 언성을 높이며 뛰어올라 발로 김동관기자의 왼쪽팔을 1차례 가격, 폭행함.

2) 조경석국장은 11시59분경 <연대과기공문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외치던 이상준공동대표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려함.

3) 조경석국장은 12시4분경 코리아연대 항의방문단이 돌아가던 중 <이 쓰레기들>이라며 폭언함.

4) 김은기총무실장은 11시57분경 <야 당장 나가>라며 <연대과기 철거, 민주노총 사과>를 외치던 김경구 사무국장의 목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려함.

5) 한석호사무부총장은 12시4분경 <이 씨발>이라며 폭언과 함께 의자를 손으로 가격함.

6) 한 여성상근자는 11시 55분경 <야 너네 뭐하는 짓이야>라며 폭언함

7) 한 상근자는 11시 58분경 <성폭행을 가한 자들이 왜 여기에 와서 지랄이야>라며 폭언함.

8) 한 상근자가 11시 56분경 <성폭력집단, 성폭행집단 같으니라고>라며 폭언함.

3. 언론의 특성상,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없을 시에는 적어도 위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진보노동뉴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선릉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팩스 02-2065-6378 | 이메일 core.sy4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423 - 001호

시행일자 2014. 4. 23.

수 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참 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제 목 공개토론회 및 항의방문단 폭언·폭행 사실확인과 해당상근자 엄중문책
요 구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 이후부터 언제나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2. 우리는 22일 민주노총 항의방문단을 꾸려 민주노총의 지역본부, 민중의힘에 <연대중단>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과 더불어 <연대파기>의 철회와 사과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3. 그러나 사무총장으로부터 공문은 중립결정사항대로 보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립결정 이후 민주노총과 코리아연대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간담회를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철저히 부당한 것입니다. 첫째, 중립결정내용에서도 코리아연대와의 협의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협의한 결과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인데,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욱이 민주노총은 그 간담회합의파기에 대하여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민주노총이 어느 일방의 주장만 듣고 합의사항까지 깨며 취한 조치는 다름아닌 진보운동단체들이 생명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연대>의 파기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몰상식하고 파렴치하며 반운동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노총과의 단체 간의 간담회는 무의미함을 확인하며 이제부터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인 사건과 사태에 대하여 권위여부와 문제점을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4. 또한 이번 항의방문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단에게 폭언

과 욕설, 심지어 폭행을 가한 민주노총의 상근자들을 엄중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아래의 폭언·폭행사실에서 파악되지않은 해당 주체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아래에서 거명된 항목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셋째, 그 정당한 문책조치를 취한 후 공식사과와 제발방지약속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 1) 조경석국장은 11시59분경 <연대파기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외치던 이상준공동대표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려함.
- 2) 조경석국장은 12시4분경 코리아연대 항의방문단이 돌아가던 중 <이 쓰레기들>이라며 폭언함.
- 3) 김은기총무실장은 11시57분경 <야 당장 나가>라며 <연대파기 철회, 민주노총 사과>를 외치던 김정구 사무국장의 목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려함.
- 4) 한석호사무부총장은 12시4분경 <이 씨발>이라며 폭언과 함께 의자를 손으로 가격함.
- 5) 한 여성상근자는 11시 55분경 <야 너네 뭐하는 짓이야>라며 폭언함
- 6) 한 상근자는 11시 58분경 <성폭행을 가한 자들이 왜 여기에 와서 지랄이야>라며 폭언함.
- 7) 한 상근자가 11시 56분경 <성폭력집단, 성폭행집단 같으니라고>라며 폭언함.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민주노총, 본지기자 폭행 ... 코리아연대 항의방문시

민주노총, 코리아연대와의 합의 깨고 <연대파기> 공문발송 ... 충격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와의 간담회합의를 깨고 <산하지역본부>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지시·제약하는 공문을 발송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20일 공문(민주기획1108-068호)를 통해 18차중앙집행위결정사항이라며 <충남사건>과 관련해 코리아연대중앙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연대파기 및 민중의힘에 제재요구할 것을 중집이 결정하고 그 시기는 상집에 위임하기로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코리아연대는 2월25일 민주노총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단 한번의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귀단체의 공문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식간담회를 요구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3월7일 공문(민주기획1108-097호)를 통해 <코리아연대가 요청한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9차상임집행위원회 및 제10차투쟁본부집행위원회 결과>를 코리아연대에 전달했다.

코리아연대는 3월12일 답변공문으로 <민주노총의 간담회수락공문을 환영하며 소명문서자료를 간담회자리에서 전달하겠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나 민주노총이 수락한 간담회는 4월23일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미 <산하지역본부>와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지시·제약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코리아연대대표단이 <연대파기공문의 사실확인 및 간담회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항의방문과정에서 유기사무총장과 실무자의 답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코리아연대측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간담회개최를 우리와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며 <사 전에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일체 통보조차 없었다>고 항의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일방의 견해만 듣고 또 스스로 한 간담회약속마저 깨고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과 진보단체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연대를 이처럼 쉽게 파기하는 단체가 바로 진보단체들의 만행격인 민주노총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성토했다.

코리아연대 항의방문시 취재하던 진보노동뉴스기자 폭행 ... 법적 책임 추궁 방침

4월22일 화요일 오전 11시15분 코리아연대항의방문단(이상준공동대표겸집행위원장, 양고은공동대표겸희망청년연대대표, 김경구사무국장)은 경향신문사 14층 민주노총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방문단은 <황당한 연대파기 민주노총 사과하리>·<단결정신 가로막는 연대파기 철회하리>·<민주노총 연대파기 진보(갑)의 폭력횡포>라는 3종의 피켓을 들었다.

방문단은 방문전 유기사무총장에게 김경구사무국장이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안되거나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 방문단은 11시15분부터 11시50분까지 유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단단장 이상준공동대표는 유사무총장에게 산하조직과 민중의힘에 공문을 보냈는가, 내용은 연대중단에 대한 것인가를 확인질문했다. 이에 유사무총장은 <중집의 결정에 따라 공문 처리했다>고 확인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실무진의 보충설명을 통해 <간담회구성안에 코리아연대가 이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 공문발송여부에 대해서는 <충남본부에서 요청이 있어 코리아연대와 주고받은 공문을 충남본부에 보냈고, 민중의힘에는 (자체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집결정대로 알아서 공문을 보냈다>는 확인답변이 있었다.

그러자 이공동대표는 <코리아연대와 민주노총이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면 간담회가 명백히 합의됐기 때문에 민주노총측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합의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산하조직과 민중의힘에 연대파기공문을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코리아연대의 3월11일자공문(우리연대0311-07호)에서는 <민주노총의 간담회수락공문을 환영합니다>라면서 <민주노총공문에 언급된 소명문서자료는 간담회자리에서 함께 전달하겠습니다>라고까지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가 면담이 중단되고 유사무총장과 실무진은 방문단을 일방적으로 사무실에 대기시켰다. 5분이 넘도록 면담이 재개되지 않자, 12시경 방문단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양성윤부위원장, 유기사무총장 등 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경석상근자, 김은기총무실장 등 전체 10여명의 사무처성원들이 제지하며 방문단을 사무실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상근자는 <성폭행을 가한 자들이 왜 여기에 와서 지랄이야>라거나 김은기총무실장이 김사무국장의 멍살을 잡는 등 폭언·폭행이 있었다.



▲코리아연대 김경구사무국장의 멍살을 잡고 있는 민주노총 김은기총무실장

한석호사무부총장은 <이 씨발>이라면서 의자를 <짱> 치기도 했다. 유총장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고, 신승철위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공동대표는 다시한번 민주노총의 공식사과와, 이 사건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기했다.

한편 이런 과정을 사진촬영하던 본지 김동관기자를 조경석사무처성원이 날라서 앞발차기로 그 왼팔을 걷어챘다. 조경석은 방문단을 향해 <이 쓰레기들>이라는 욕설까지 퍼부었다. 김동관기자는 4월23일 병원에서 뼈에 금이 가진 않았지만 타박상으로 전치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이에 본지는 4월23일 오전9시이전 민주노총에 폭행사실의 확인과 공식항의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본지는 창간 이래 반노동·반민중정권으로부터도 있어본 적이 없었던 기자폭행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하면서 조경석사무처성원의 처벌과 폭언·폭행자들의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해 항의하기로 했다.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

코리아연대 1인시위 <민주노총 각성하라! 연대파기 철회하라!> ... 조경석처벌! 한석호해임도 요구

4월23일 오전 11시50분에서 오후1시까지 민주노총본부가 입주해있는 경향신문사건물 앞에서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와 김경구사무국장은 1인시위를 전개하고 코리아연대성명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김사무국장은 <민주노총 각성하라! 연대파기 중단하라!>·<조경석 처벌하라! 한석호 해임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특히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석호해임>구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배포된 유인물의 제목은 <어떤 경우라도 연대파기는 안된다!>였다. 평소 코리아연대와 연대활동을 하며 알게 된 적지않은 사람들이 1인시위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코리아연대측은 부당한 연대파기조치가 철회되고 민주노총의 공개 사과가 있을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문서번호 <우리연대0423-001호>라는 공문을 당일 오전9시이전에 민주노총으로 보냈다. 공문제목은 <항의방문단 폭언·폭행 사실 확인 및 해당상근자 엄중문책 요구>다.

진보노동뉴스

<폭언폭행>·<연대파기> 민주노총은 각성하라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산하지역본부>에 전달하고 <민중의힘>에 제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22일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이 합의한 <간담회약속>을 파기하며 스스로의 <중립결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 정당한 항의방문과정에서 몰상식적인 <폭언폭행>이 발생해 진보운동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측이 고의적으로 면담을 중단하고 지연시키자 방문단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였을 뿐인데, 이 과정에서 한석호사무부총장이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비롯 일부상근자가 <왜 지랄이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또 민주노총 김은기총무실장은 코리아연대 김경구사무국장의 먹살을 잡기까지 하였다. 특히 조경석상근자는 현장을 취재하던 <진보노동뉴스> 기자를 완력으로 끌어내고 앞발차기로 가격하는 등 취재방해와 폭행을 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진보노동뉴스>측은 진보세력내 문제로 보고 법적 고소조치를 최대한 자제하며 항의공문을 보냈으나 민주노총은 조치는 커녕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 민주노총조합원은 조경석·한석호를 민주노총규약위반으로 징계위에 제소하였다.

한편 코리아연대의 초청으로 남코리아를 방문한 프랑스진보단체(CIDFDE)대표 이브 헤미와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와의 간담회가 4월25일 철도노조사무실에서 열렸다. 김명환위원장은 철도사영화반대투쟁 과정을 전하며 <해고·징계·강제전출 등 탄압이 거세지만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하였다. 이브 헤미는 <영웅적인 투쟁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을 받는다>며 <역시 연대가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철도노조를 지지·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브헤미는 십수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수색 서울차량사무소 45m송전탑농성장도 방문해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농성중인 이영익전위원장과 유치상전사무처장은 주먹을 높이 울리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민주노총충남본부>와 <민주노총>은 <프락치혐의자>와 <분열주의자>에 놀아나는가?

<충남>사건배후조종 프락치혐의자 <이모씨>

이모씨의 과거행적에서 수상한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며 일만한 운동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프락치의를 받아왔다. 학생운동시기부터 좌경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군입대를 한 후에 집중적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그는 <군복무중 조사받고 국보법위반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이상하리만치 잦은 휴가를 나왔다. <국가보안법위반처벌>과 <잦은 휴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군복무중 집행유예처벌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모씨가 당장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프락치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아버지가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휴가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프락치 의혹을 심화시키는 말이다. 그는 제대 후에 충남아산에서 수시로 주변의 학생운동대오를 비방하고 음해하였다. <충남>사건을 문제화시키고 부풀려 억울한 <차기해자들>을 양산한 사실상의 <배후조종자>였고 이 과정에서 농민회원을 부추겨 충남대련학생들을 구타·폭행·협박하는 사건까지 방조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 농민회원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모씨가 있는 곳에서는 <함담>과 <비방>, <분열>과 <이간질>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서 열거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의문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모씨처럼 수상한 점들이 많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차라리 이모씨가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고소한다면 법정에서 객관적인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가 용이할 것이다.

민주노동당분당기획 분열주의자 <한석호>

민주노총의 <연대파기>공작의 이면에는 종파의 상징인 <한석호>가 있다. 이미 진보운동은 물론이고 온세상이 다 알다시피 한석호는 <분당기획문서>의 작성자이다. 현재 민주노총연대사업국장을 거쳐 민주노총사무부총장과 민중의힘공동집행위원장(상집성원)을 맡아서 연대운동의 길목에서 쐐기를 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파국적 분당과정에 몰아넣어 진보운동을 분열파괴하고 진보세력을 <중북>으로 음해하고 매도한 본인의 죄행에 대하여 단 한번도 제대로 반성하거나 총화한 적이 없다. 오히려 코리아연대의 정당한 항의방문에 사무부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민중의힘에서의 연대파기까지 앞서 추동하고 있다. 또한 <한석호>는 모인터넷언론의 연재기사를 통하여 스스로 <프락치>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양심선언이 아니라면 프락치가 프락치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없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프락치혐의를 받았고 민주노동당분당기획자인 장본인이 민주노총의 사무부총장이라는 고위직을 맡아 특히 연대운동의 중심에 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노동운동가가 이런 말을 하였다. <현장이 무너진 자리에 종파의 독버섯만 자란다> 이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현장이 무너진 자리에 프락치와 종파의 독버섯만 자란다>

2014년 5월1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코리아연대, 메이데이집회장에서 〈민주노총 각성하라〉 ... 〈프락치혐의자〉 문제제기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노동절(메이데이)집회현장에서 〈폭언폭행〉과 〈연대파기〉에 대한 민주노총의 각성을 촉구하는 항의투쟁을 전개했다. 국제노동절 124주년을 맞는 노동절집회는 5월1일 오후2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됐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기자폭행 조정석처벌! 폭언욕설 한석호해임〉, 〈폭언폭행 연대파기 민주노총 각성하라〉는 구호가 적힌 2개의 현수막을 들고 관련된 내용의 유인물 2000부기량을 배포했다. 노동절집회에 참여한 대다수의 민주노총조합원들과 시민들은 코리아연대의 민주노총비판 현수막과 유인물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남성조합원은 〈폭행한 조정석은 누군지 모르겠고 한석호는 잘못했네〉라며 〈민주노총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다. 수고 많다〉고 격려했다. 유인물을 받아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노총의 〈연대파기〉와 〈폭언폭행〉에 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연설에서 〈진보정당의 분열을 막지 못했고, 이땅의 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시키지 못한 것을 민주노총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면서 단결을 강조했다. 이는 민주노총의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사실과 배치돼 그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코리아연대, 반전·반미·반박근혜투쟁과 철도노조와의 국제연대 조직

한편 코리아연대는 〈세월호참사와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전쟁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정세를 반영해 〈반전·반미·반박근혜 투쟁에 총궐기하자〉, 〈미군 국방부 청와대는 〈잠수함추돌〉설 해명하라〉라는 현수막도 집회현장에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주 민주노총건물앞에서 진행한 1인시위역량을 이번주부터 미대사관앞으로 돌려 반전·반미·반박근혜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에서 배포된 코리아연대의 유인물은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산하지역본부에 전달하고 〈민중의힘〉에 제의해 파란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항의방문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폭언폭행〉이 발생해 진보운동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연대의 초청으로 남코리야를 방문한 프랑스진보단체(CIDEFF)대표 이브 헤미와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와의 간담회가 4월25일에 열렸다〉면서 이후 지속적인 〈국제연대〉를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헤미대표는 철도노조의 철탑농성장도 방문해 직접 전화도 걸고 책선물도 하면서 지지격려했다. 이 유인물에 담긴 두장의 사진중 한장에는 코리아연대의 김경구사무국장이 민주노총항의방문시 김은기총무실장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고, 다른 한장에는 헤미대표·김명환위원장과 함께 찍은 국제연대의 장면이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결국 민주노총의 몰상식적인 〈연대파기〉결정과 〈폭언·폭행〉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연대는 적지않은 자금·인력·시간을 들여 철도노조투쟁을 지원하는 국제연대활동을 조직진행한 셈이다.

프락치혐의자와 분열주의자 문제도 예리하게 지적

또 유인물에는 〈민주노총충남본부와 민주노총이 프락치혐의자와 분열주의자에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사건배후조종 프락치혐의자 〈이모씨〉와 민주노동당분당기획 분열주의자 〈한석호〉라는 중간제목하에 관련내용을 자세히 적시했다. 특히 한석호민주노총사무부총장이 과거 자신은 프락치가 아니라고 한 진보인터넷언론에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이 일부상근자들, 일부정파세력들에 의해 더 이상 반진보적인 행태를 벌여서는 안된다〉며 〈이는 대중들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하며 실천적인 항의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코리아연대가 밝힌 민주노총 전화번호는 △대표전화 (02)2670-9100 △총무실(02) 2670-9282이다.

진보노동뉴스

민주노총조합원, 폭언·폭행사건으로 한석호·조경석 징계 제기

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지난 22일 벌어진 폭언·폭행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한석호사무부총장, 조경석사무처성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에 28일 징계를 제기했다. 충남지역노조 진영하미조직비정규국장은 징계결의요청서를 통해 이번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한다는 민주노총 선언, 정신, 강령에 위배된다>며 성폭력폭언폭행금지및처벌규정제2조2항1·2호를 위반한 것으로 규약제60조2항1호위반, 상벌규정제6조1항위반을 지적했다. 이어 <진보운동을 함께 하며 노동해방과 박근혜퇴진을 위해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사물을 내리치는 폭력과 물리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성폭력폭언폭행금지및처벌규정제2조2항에는 폭언·폭행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1호),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제60조2항1호에는 가맹조직과 산하조직 및 임원,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 조합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2일 벌어진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연대파기>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에 항의방문했고, 민주노총 사무총국성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조경석총연맹간부가 기자를 폭행, 한석호사무부총장은 욕설을 했다.(관련기사: 민주노총, 본지기자 폭행 ... 코리아연대 항의방문시, <진보노동뉴스>http://prolabour21.com/xs/index.php?document_srl=44131)

진국장은 <민주노조운동이란 게 사람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온갖 예측과 억압에 맞선 노동해방운동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조운동이자 폭력을 반대하고, 폭력에 맞서는 운동>이라며 <폭력에 맞서야 할 핵심간부들이 폭력을 자행한 것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진영하국장과 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22일 벌어진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으로 한석호사무부총장과 조경석성원에 대한 징계결의요청을 28일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보노동뉴스를 통해 이번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을 접했다. 황당했다. 민주노조운동이란 사람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온갖 예측과 억압에 맞선 노동해방운동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조운동이자 폭력을 반대하고, 폭력에 맞서는 운동이다. 정권과 자본은 법과 제도, 폭력경찰과 구사대를 통해 우리의 자주성을 짓밟는 폭력을 자행하고, 우리는 그들의 폭력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그런 민주노총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폭력에 맞서야 할 핵심간부들이 폭력을 자행한 것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집단이 어디 있겠느냐는 특히 민주노총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충격적이다.

노조운동을 하다보면 수많은 폭력과 맞닥뜨리게 된다. 나 같은 경우도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맞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줄 알면서도 부딪친다. 저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으니까.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동지들 투쟁에 연대하다가 구사대에게 집단구타를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때만 해도 괜찮았다. 아프긴 했지만 어떤 훈장처럼 느껴져서, 영광의 상처랄까? 내심 뿌듯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2011년에 동지들과 술 한잔 하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논쟁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좀 나이차이가 나는 노조간부였는데) 급작스럽게 무차별 주먹세례와 발길질세례를 받았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라 정신없이 맞았다. 이내 주변사람들이 막아나서서 상황이 일단락 됐는데 아마 그 기억이 큰 상처가 된 것 같다. 그 뒤로는 공권력이나 구사대와 몸싸움을 할 때도 그렇지만 교섭 중에 언성이 조금 높아지거나, 집회 때 경찰들과 충돌해서 말싸움을 할 때도 막 불안하고 몸이 떨리는 것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쫄지마, 창피하게 왜 그래)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지만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 어찌하기가 어렵다.

동지라고 여겼던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해본 나로서는 이번 민주노총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안다. 아마 당시에 폭행을 당했던, 특히 발차기를 당했던 김동관기자의 경우 심리치유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의 당사자인 한석호와 조경석은 총연맹 사무총국의 중요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응당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앞장서서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 규약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징계결의

요청서에도 담았지만 이는 민주노총선언·강령뿐만 아니라 규약제60조2항1·2호, 상벌규정제6조1·2호, 성폭력폭언폭행금지및처벌규정제2조2항1·2호 위반으로 된다. 규약·규정 갖다 붙이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단순화하면 “동지들간 논쟁하다가 맘에 안 들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가?” 이거다. 동지를 빼고 사람으로 바뀌도 무방하다.

폭력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하다. 한석호, 조경석은 사무총국성원이다. 앞서 말했듯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성원이고 특히 한석호는 사무부총장이 다. 이를테면 간선으로 선임된 사람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다. 응당 지위에 대한 언행을 해야 마땅하다. 수구정차꾼들도 보여주기가 싫지만 만에 그런 실수를 지키려고 한다. 얼마 전 〈세월〉호참사로 인한 슬픔 중에 세종시장 후보 유한식시장의 폭탄주문제가 이슈가 됐다. 건배사는 했는데 폭탄주는 안 마셨다고 정리되어서 엄중경고 하되 후보자격은 유지하는 걸로 정리됐었다. 사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술자리를 가진 사람이 어찌 유한식시장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가 되는 건 사회적 지위 문제다. 수구꼴통이라는 새누리당도 그 정서를 알기 때문에 엄중경고 처분 한 거다. 정리하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규율도 높아야 하고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이번 민주노총 폭언폭행사건의 당사자인 한석호와 조경석. 이들이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핵심 인물인 만큼 민주노총의 응당 한도덕적 수위에서, 민주노총의 권위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진영하국장의 징계결의요청으로, 충남지역에서도 이번 폭언폭행사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사실이다.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결의를 요청하면서 머릿속으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렸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염두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경우의 수 중 가장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다.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 무지 때문에 이해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약을 몇번 읽어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민주노총 사무총국성원을 징계요청하려면 조합원이 하계끔 되어 있더라.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징계결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더욱 투명한 집단이 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징계결의를 요청한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가 전혀 없다. 고발자에 대한 보호, 이 건 초보적인 거다. 근데 민주노총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더라. 설사 민주노총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신변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은 꿈도 못 꾸는 거다. 또, 상벌문제는 민감하니까 담당자와 직통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규약·규정에는 징계요청방법이 간략히 구술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28일 징계결의를 요청하기 전에 총연맹에 전화해 여러 번 걸었는데 불통이었다.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런 게 없었다. 결국 총연맹 팩스로, 총연맹 대표이메일로 징계결의요청서를 보냈다. 팩스와 대표이메일은 사무총국성원들이라든가 누구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겠나. 민감한 문제를 수십명이 동시에 공유하게 된다. 또 징계요청당 사자가 직접 그 문서를 수신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모로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만에 하나 그 문서를 훼손하고 미수신했다고 할 경우 어쩔 텐가. 솔직히 생 각이 거기까지 미쳐서 등기로 원본을 총연맹에 발송했다. 28일에 징계결의를 요청하고 29일에 소문이 났다. 〈진영하가 사무총국성원들을 징계요청했다〉가시 돌친 소문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 징계결의요청서가 잘 수신됐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었다.

총연맹은 공식적으로 내 소속노조가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징계요청한 것인지, 진영하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인지 확인을 의뢰했다고 한다. 소속노조는 진영하가 개인조합원자격으로 한 거라고 답했다. 일단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집단적으로 요청하는 것과 개인조합원자격으로 요청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확인했는지 하는 것과, 그걸 확인하려면 징계요청 당사자에게 하면 되지 왜 노조에 문의하는가, 이것이다. 징계위원회 담당자는 징계요청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차 구성하기 전에 대의체계를 통해 공식확인요청하는 건 그만큼 불필요한 소문이 빨리 확산되는 거다. 원가 의도성이 있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징계요청 건으로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긴급회의를 했다고 한다. 왜? 내가 충남본부 소속 조합원이니까? 폭력사건이 일어난 곳이 총연맹이고, 폭력을 가한 당사자들이 총연맹 사무총국성원들이는데 왜 충남본부가 대책회의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외압이 있는 모양이다. 〈폭력을 당한 당사자도 아닌데 왜 진영하가 제소를 하는가〉 〈진영하가 소속노조를 팔아먹었다〉 〈진영하 때문에 소속노조가 시끄러워지게 됐다〉 〈진영하가 제소를 취하해야만 이 문제가 끝난다〉 등의 다양한 소문들이 있다.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잘못된 사람이 문제가 그것을 비판한 사람이 문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아니 보호하지 않는 민주노총에 대한 분노가 크다. 민주노총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하는 실망감도 있다. 원치 않게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이렇게 된 거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민주노총다운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데 복무하겠다.

- 이번 폭언·폭행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리 선배들이 만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 그 기준대로 하면 된다. 규약, 규정대로 징계결의를 요청했으니 규약, 규정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성원이라는 높은 지위만큼이나 엄격한 규율과 책임 속에서 말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선릉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이메일 core.r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09 - 001호

시행일자 2014. 5. 9.

수 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참 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제 목 민주노총의 <연대파기 공식안건화>와 종파적 행태에 대한 엄중경고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국민과업을 주목하며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선전, 조직, 실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국제적으로 지지·엄호하는데서도 우리의 국제연대역량을 적지않게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나아가 민중의힘에게까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코리아연대가 민주노총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단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2. 우리는 4월23일 문서번호 <우리연대0423-001호>, <공개토론회 및 항의방문단 폭언·폭행 사실확인과 해당상근자 엄중문책 요구>의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민주노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였으며 그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노총일부상근자들이 저지른 욕설과 폭언·폭행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공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못됩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공문에 대한 빠른 답변>과 <당사자엄중문책·공식사과·재발방지약속>이라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 우리는 민주노총이 당장 기사를 폭행한 조정석상근자를 처벌하고 폭언·욕설을 한 한석호 사무부총장을 해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지만 먹살을 잡다가 사건 촬영까지 된 김은기총무실장에 대해서는 참고있다는 사실도 상기시킵니다.

4. 민주노총, 충남본부를 비롯 어떤 노동조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여전히 건위공방이 진행중인 사건을 가지고 적지않은 기간 함께 투쟁해온 동지적연대 단체와의 <연대>를 파기하고 심지어 다른 더 큰 연대체 안에서 고립·제명시키려는 행태는 진보운동역사상 전례가 없는 폭거로서 민주노총이 <운동권의 슈퍼갑>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징표로 될 것입니다.

<사회적갑>과 싸우다가 어느새 <운동권갑>이 된 민주노총의 가련한 물결은 민주노총의 강령·규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무자들의 자질과 수준의 문제입니다. 과연 공문에 따른 상대방과의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채 힘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노총을 두고 어떤 진보단체·개혁단체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함께 연대하려고 하겠는가를 반추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5. 민주노총으로부터 <연대파기>를 당하고 <민중의힘>에서까지 유사한 조치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보세력내에서 절저히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제헌병>을 자처하는 미국 처럼 언제부터 민주노총이 <운동권헌병>을 자처하게 되었는지, 민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월권 행위를 하고 횡포를 부리는지 제대로 총화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조건에서 우리 코리아연대가 생명과도 같은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 연대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를 뺨으로 치면 코리아연대도 민주노총을 뺨으로 치고,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를 둘로 치면 코리아연대도 민주노총을 둘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코리아연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민주노총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공개사과 할 때까지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만, <민주노총>과 <민주노총내 종파적인 세력>을 냉정히 갈라볼 것입니다.

6. 민주노총이 여전히 <연대파기>를 철회하지 않고, 심지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순간, 코리아연대는 선전, 조직, 실천적 조치들을 가장 강력히 펼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동지적연대단체를 매장하려고 하며 운동권내 가장 큰 금기를 켜 조건에서 우리 또한 그보다 작은 금기를 깨며 운동권내종파들과의 전면적인 사상전으로 응답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민중의힘내 제명>이 확인되는 순간, 민주노총내종파들을 폭로하는 백서 외에 민주노총내종파와 담합하며 <민중의힘>제명에 적극 야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0000>라는 지역명칭의 종파도 함께 그 본질을 폭로하는 백서가 책으로 출판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때부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 것이며, 당연히 그 책임은 민주노총내종파와 <0000>종파가 전적으로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오류를 바로잡는 데서 남코리아의 허다한 악법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것으로는 사소한 위협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종파들과 법정에서 당당히 맞설 기회를 얻게 될 뿐임을 똑똑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신승철위원장>의 이름을 일체 거론하지 않았지만, <민중의힘내 제명>이라는 한계선을 넘기는 순간, 모든 책임을 신위원장이 지지않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밝힙니

다. 위원장이 폭로비판의 대상이 되는 만큼 <유기수사무총장>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폭언·욕설을 하고 연대파기에 앞장선 <한석호사무부총장>은 더욱 더 철저히 폭로단죄될 것입니다.

우리는 백서를 출판하고 비관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동시에 <프락치와 종파>들을 단호히 폭로단죄하는 팟캐스트도 개설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출판물, 영상, 팟캐스트는 SNS를 통해 널리 배포될 것이고 현시대 종파에 대한 자료로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영상들과 팟캐스트는 <민중의힘내 제명>이 이루어지는 때부터 공개될 것입니다.

7. 우리는 반전반미·반박근혜투쟁을 사활적으로 벌여야 할 때, 동시에 민주노총내, 진보운동내 종파들과의 사상전도 동시에 벌이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운동권 내부의 적인 종파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운동이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정협의 총화이자 이번 사건을 겪은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실사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종파들을 정리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없이 기꺼이 그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8. 이미 민주노총이 공문들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공문들이 계대로 보고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인만큼, 진실되고 성근하며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공문은 발송 즉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에 공개될 것입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세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팩스 02-2065-6378 | 이메일 corea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09 - 001호

시행일자 2014. 5. 9

수 신 민중의힘 상임대표

참 조 민중의힘 상임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제 목 답변공문촉구와 추가질의·요구

1. 우리 코리아연대는 민중의힘소속단체로서 진보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중시하고 실천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대 최근 코리아연대를 연대운동에서 제거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며 이 전 대미문의 사태에 대하여 먼저 정확한 사실확인부터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우리는 4월25일 문서번호 <우리연대0425-01호>, <<민주노동공문>전달과 <긴급간담회>요구>의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단체는 민중의힘의 소속단체이고 우리단체의 존엄과 명예, 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민주노동이 우리단체와 관련하여 민중의힘에 보낸 공문일체>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전달해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또한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하여 제의한 <긴급간담회>개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와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다음의 질문·요구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우리는 4월30일 민중의힘 <노동자·농민·빈민단체간담회>가 있었고 우리단체와의 연대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주고, 어떤 단체들의 누가 참석하고 어떤 발언을 했으며 그 논의 결과를 바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개최될 민중의힘 상임집행위나 대표자회의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 회의안건이 포함된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역시 바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대략적인 사항이라도 알려주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회의에 어떤 단체가 정식으로 참가하는지, 누가 해당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지, 그 사회를 누가 보는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4. 부르주아민주사회도 운명문제가 제기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주아민주사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이상의 참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세력이라면 당연히 이보다 나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5. 진보운동권내에 <진보의 슈퍼갑>으로 불리는 단체나 <무슨지역>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종파의 횡포가 한계를 넘었다는 내외의 엄중한 비판이 있습니다. 민중의힘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와 간담회로 진보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 민중의힘이 우리가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제때 그리고 성의있게 하지않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21세기민족일보, 진보노동뉴스를 비롯 인터넷에 공문발송 즉시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자주통일 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노릇 그만하고 연대파기 철회하라!> ... 민주노총규탄집회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9일정오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건물앞에서 <연대파기철회, 폭언 · 폭행사과 및 징계촉구 민주노총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묵상했다.

코리아연대 김경구사무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이 지난 2013년 11월 중앙집행위원회결정을 통해 연대파기결정하고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요청한 과정을 설명했다.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오늘 민주노총앞에서 규탄집회를 한 이유는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연대파기를 반대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한 항의방문과정에서 폭언 · 폭행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사과하고 해당관계자들을 징계하고 해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24일 <225국민파업 선포 및 대국민참가호소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단결은 권력보다 강하다. 모이면 희망이다>라는 문구의 문자보를 달고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도리어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강요하고 있다. 연대파기는 단결에 반대되는 것이다. 연대는 우리의 정치적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1995년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후 진보진영이 힘을 합쳐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사회이자주 · 민주 · 통일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왔던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은 공조직임에도 코리아연대와의 합의과정을 무시했고, 그 과정에서 종파와 패권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같은 종파적 · 패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정에서 폭언 · 폭행을 하고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간부들을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망청년연대 양고은대표는 규탄발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민주노총이 국민총파업을 성사시켰고, 코리아연대도 민주노총이 벌였던 국민파업에 연대하면서 함께 동참했다>면서 <지금 진보진영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강력한 단결과 연대로 박근혜정부에 맞서 투쟁하고,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한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우리를 진정으로 함께 연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코리아연대가 민주노총에 헌신적으로 연대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민주노총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된다>며 <4월22일 민주노총항의방문 이후 <연대파기>철회와 폭언 · 폭행관련자 징계 및 해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진행했는데, 민주노총 한 여성상근자는 <마음에 안들면 연대파기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나갔다.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연대>가 단순히 마음에 안들면 파기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연대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결투쟁가>를 합창했다.

계속해서 진보진영에서의 성폭력문제해결의 원칙과 대안에 대한 발언들을 이어갔다.

코리아연대 강순영회원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면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잘라내거나, 관료적으로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더이상 머리가 돌지 않는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합리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진보진영차원에서 성폭력 대응방법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절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질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성폭력사건을 단체에서 다룰 때 두가지 원칙을 내세운다>면서 <하나는 피해자중심주의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악용해 어떤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마저도 끊어놓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원칙은 반

드시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또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진보진영에서, 그것도 민주노총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연대파기라는 단체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신적인 활동기를 <2차기해자>로 매도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비열한 행태에 대한 규탄과 증언이 이어졌다.

충남청년연대 차은정회원은 <2013년 7월3일 <충남민중의힘>이 <연대>의 정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강제해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충남민중의힘>에 소속된 일부단체와 그 단체활동가들을 <2차기해자>로 낙인찍고 성폭력집단으로 몰아갔다>며 <그들은 십수년간 함께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토론회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단 한차례의 소명 기회도 없이 <2차기해자>로 매도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했던 연대의 정신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나 <충남민중의힘>을 강제해산했던 사람들의 연대정신은 그들의 입맛에 맞으면 함께하고, 입맛에 맞지 않고 반기를 들면 2차기해자로 매도해 지역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충남민중의힘>강제해산의 날>은 진보운동역사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며 그들이 민중과 역사 앞에서 평가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성폭력공대위>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충남성폭력사건을 해결한답시고 한 충남도연맹농민회원이 지역의 여성활동가를 폭행해 전치몇주의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폭행을 행사한 사람에게 실형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한 농민회원은 <정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했다>고 말했다. <성폭력공대위>가 내세운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기해자론에 의하면 그 폭력을 행사한 농민회원은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연대를 굳건하게 함께 해 온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모습은 한신적으로 활동해 온 진보세력 활동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른바 <성폭력공대위>에 놀아났던 <충남민중의힘>의 연대파기와 같은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가 민주노총안에서도 그대로 이뤄지고 있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차기해자에 대한 규정도 불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중심주의를 왜곡적용해 한신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2차기해자로 내몰고 매장시켜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작태를 벌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은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은 <운동권헌병>노릇 그만하고 연대파기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패권적·분파적으로 어떤 단체를 장악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적이 결단코 없다>며 <특히 최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국민파업 성사를 위해 우리역량을 총동원하였으며 민주노총을 국제적으로 지지·엄호하는 투쟁에 우리의 시간·노력·자금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를 고립압살하려는 충격적인 행태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체노동계급을 대표하고 단결과 연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민주노총이 정파적이고 종파적인 세력에게 휘둘려 함부로 <연대파기>를 결정·집행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민주노총역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내 종파적인 세력>을 엄격히 구분하고 민주노총내에서와 진보진영에서의 대표적인 종파들을 제거하는데 과녁을 집중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연대파기>를 철회하지 않고 끝끝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순간, 코리아연대는 가능한 모든 선전, 조직,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노동뉴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선수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이메일 corea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13 - 021호

시행일자 2014. 5. 13

수 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참 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제 목 전농중앙간부와 민주노총중앙간부 간의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등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전농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전과 조직활동, 국제연대를 통해 진보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일만 해왔지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농중앙간부(또는 상근자)가 민주노총중앙간부(또는 상근자)와 함께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를 때도하고 진보운동권에서 고립·배격시키려는 꾀권적이고 종파적이며 황당한 <반코리아연대담합>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지난 4월22일 민주노총 스스로가 한 간담회약속을 깨버린 것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와 관련한 문제를 합리적인 대화로 풀기 위해 민주노총사무실을 항의방문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10여명의 민주노총상근자들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취재기자를 폭행한 조경석상근자의 처벌과 폭언·욕설을 한 한석호사무부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의 공식 사과와 제발방지약속을 요구하는 항의공문도 보냈으나 일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가 가입하고 있는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 곧 사실상 제명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맞게 우리의 질문과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의 도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전농이 4월30일 민중의힘 <노동자·농민·빈민단체간담회>에 누가 참여하였고 <코리아연대>와 관련하여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그것이 전농의 강령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전농회원전체의 의견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서도 확인하여주기 바랍니다.

4. 전농중앙간부(또는 상근자)는 민주노총중앙간부(또는 상근자)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주노총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문제>(또는 코리아연대를 제제하는 일체의 안전)나 한국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고 전농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거나 실제로 논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5. 지난해말, 전농중앙의 공식회의에서 이른바 <충남사건>(코리아연대에 대한 연대파기 등에 발단이 되는 사건)이 보고되고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6. 2013년 1월6일 아산농민회의 간부 000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성폭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전농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 또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농 회원의 폭언폭행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7. 오직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구속도 각오하며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조금도 굴함 없이 전투적으로 활동하여온 우리 코리아연대를 운동권내에서 고립압살하려는 기도에 우리는 우리대오의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연대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위의 질문과 확인요청에 신속·정확히 답변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민주노총처럼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준비된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8.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전보노동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이메일 corey4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13 - 022호

시행일자 2014. 5. 13

수 신 통합진보당 대표

참 조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제 목 통합진보당 최고위급당직자와 민주노총간부와의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등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 이후부터 언제나 진보정당들의 <혁신>과 <단결>,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전과 조직활동, 국제연대를 통해 진보정당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일만 해왔지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민주노동당분당사태와 통합진보당분당사태때에도 탈당하지않고 여전히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하여 헌신한 당원들이 코리아연대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강제해산>기도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과 박근혜<정권>의 파쇼적 폭거로 규정하고 코리아연대의 선전매체와 국제연대네트워크를 동원해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합진보당 최고위급간부가 민주노총(또는 지역본부)간부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를 진보운동권에서 고립·배격하려는 꾀권적이고 종파적이며 황당한 <반코리아연대담합>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지난 4월22일 민주노총 스스로가 한 간담회약속을 깨버린 것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와 관련한 문제를 합리적인 대화로 풀기 위해 민주노총사무실을 항의방문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10여명의 민주노총상근자들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취재기자를 폭행한 조정석상근자의 처벌과 폭언·욕설을 한 한석호사무부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하는 항의공문도 보냈으나 일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가 가입하고 있는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 곧 사실상 제명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맞게 우리의 질문과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의 도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통합진보당은 특히 000최고위원(또는 다른 중앙간부)이 민주노총간부(또는 상근자)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주노총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또는 코리아연대를 제정하는 일체의 안건)이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고 000최고위원이 속한 <0000>지역명칭의 정파조직 또는 통합진보당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거나 논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 바랍니다.

4. 2013년 1월6일 아산농민회의 간부 000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성폭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시 폭행·방조한 아산농민회간부 박정우·이연재, 현장에 있었던 현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전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 현충남도연맹사무처장 권혁주(당시 정책위원장으로 이 사건처리의 실무총괄)의 당원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만약 당원일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간부는 통합진보당당원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하여 당원에 대한 폭언폭행의 경우에 어떤 징계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 바랍니다.

5. 오직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구속도 각오하며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조금도 굴함 없이 전투적으로 활동하여온 우리 코리아연대를 운동권내에서 고립압살하려는 기도에 우리는 우리대오의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연대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위의 질문과 확인요청에 신속·정확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민주노총처럼 답변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준비된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6.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진보노동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선수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이메일 corexy4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13 - 023호

시행일자 2014. 5. 13

수신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참조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제목 전국여성연대중앙간부와 민주노총중앙간부의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등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진보단체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전과 조직활동, 국제연대를 통해 진보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일만 해왔지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여성연대중앙간부가 한국진보연대집행위원회에서 코리아연대의 가입을 반대하였고 이것이 코리아연대를 진보운동권에서 고립·배상시키려는 꾀권적이고 중파적이며 황당한 <반코리아연대담합>의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지난 4월22일 민주노총 스스로가 한 간담회약속을 깨버린 것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와 관련한 문제를 합리적인 대화로 풀기 위해 민주노총사무실을 항의방문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10여명의 민주노총상근자들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취재기자를 폭행한 조정석상근자의 처벌과 폭언·욕설을 한 한석호사무부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의 공식사파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하는 항의공문도 보냈으나 일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가 가입하고 있는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 곧 사실상 제명이나 그에 준하는 징계를 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맞게 우리의 질문과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의 도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4월30일 한국진보연대 4기12차집행위원회회의에 참여하여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건과 관련해 어떤 내용의 반대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발언이 전국여성연대의 강령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회원전체의 의견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서도 확인하여주기 바랍니다.

4. <0000>라는 지역명칭의 정파조직에 속해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여성연대의 000이 민주노동당(또는 상근자)나 <0000>정파조직인사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또는 코리아연대를 제재하는 일체의 안건)이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 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의를 전국여성연대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거나 논의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3항의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을 반대하거나 유보시키는 내용의 반대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5. 한편 2013년 1월6일 아산농민회의 간부 000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성폭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전국여성연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받거나 알고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6. 오직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구속도 각오하며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조금도 굴함 없이 전투적으로 활동하여온 우리 코리아연대를 운동권내에서 고립압살하려는 기도에 우리는 우리대오의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연대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위의 질문과 확인요청에 신속·정확히 답변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민주노동처럼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준비된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7.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진보노동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성평등위원회 입장문

본질은 성폭력이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농활 뒷풀이 장소에서 당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자 충남대련 간부였던 김재환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는 1년 뒤인 2012년 8월 30일, 두 번째 성폭력을 저질렀다.

김재환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 중 김*희는 당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이자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대표였고, 최*은 당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자 충남희망청년연대 사무국장이었으며 한*은, 차*엽, 남*우 역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었다.

2012년 10월 24일에는 당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이자 충남희망청년연대 대표, 대안경제센터 부대표였던 이동근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동근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 중 지*철은 당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이자 대안경제센터 대표였고, 한*혜는 당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자 대안경제센터 이사였으며 한*은, 한*인, 남*우, 방*호 역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었다.

두 개의 성폭력사건은 코리아연대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되고 피해자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지역의 여성활동가인 민주노총 충남본부 소속 성평등위원회 담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두 사건의 모든 가해자와 2차가해자들이 당시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관계로 통합진보당에 성폭력 제소가 접수됨에 따라 충남지역에서는 두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러지게 되었다.

이후 공대위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통합진보당에서 사건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역 내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공대위는 지역연대체인 충남 민중의 힘에 통합진보당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 대한 민중의 힘 차원의 연대활동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활동자제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공대위에 간담회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들과 공대위는 성폭력을 제소하고 그 조사 및 징계과정 중에 피해자측인 공대위와 가해측인 자와의 간담회는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끊임없이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속해있는 대중조직의 절차대로 조사에 응하여 본인들의 의견과 억울함(?)을 주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근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단 한 차례도 통합진보당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김재환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조사에 응했을 뿐이었다.

통합진보당이 2013년 5월 6일 이동근에 대한 제명을 시작으로 김재환 제명, 두 사건 2차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하자 두 사건의 2차가해자들은 전원 '또다른 피해자모임'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자신들이 '운동권 갑'에게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재판확정 전까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확정판결 이전에는 모두 무죄추정'이라는 최소한의 법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전원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여 자신들이 몸담았던 대중조직의 징계를 무력화시켰다.

그 외 '또다른 피해자모임'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이에 더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여 지역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또한, 충남지역 4만 조합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의 사임 및 공대위 해체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였고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조직부장, 교육부장 및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행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2013년 7월 12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폭력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이 하루 속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열사투쟁을 하는 동안에도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 천막농성을 지속했다.

더 이상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공대위는 2013년 9월 25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이 속한 조직(코리아연대, 한 대련, 충남대련,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대안경제센터, 충남희망청년연대, 공주대 총여학생회)에 공문을 통해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지도요청 및 조직입장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조직들은 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수차례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가해자와 2차가해자들은 사과커녕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피해자들을 가해자화 시키며 용서할 수 없는 악의적 행동을 지속해왔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2013년 10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 64%의 공동발의로 '지역 내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현장발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해자 및 2차가해자 11인과 그들의 소속조직인 '코리아연대, 21세기 여성회, 충남대련,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충남희망청년연대, 대안경제센터, 공주대 총여학생회'에 대한 연대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보고받은 민주노총 총연맹 여성위원회와 총연맹 중집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에 관련 자료 및 사고요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건을 발의한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참가 및 배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간담회를 제안하였으며 민주노총은 간담회를 하려면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총연맹 여성위원회 배석하에 진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총연맹 중집 결정대로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자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배석을 한다면 2차가해자 일부의 참석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가 간담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기발송한 공문에 따라 중집 결정대로 집행을 진행하자 코리아연대는 역시나 충남지역의 성폭력사건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총연맹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사무실 앞 1인 시위와 집회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연대의 주장대로 민주노총은 수년전의 뼈아픈 과오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끔찍한 2차가해에 대해 아프게 체득했고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연대파기는 안된다'는 코리아연대의 주장에 맞서 우리는 성폭력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연대를 택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성폭력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사과는 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악질적인 가해자와 그런 가해자를 지지하는 집단과의 연대는 과감히 파기해야 한다. 코리아연대의 주장대로 '연대의 정신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서로의 차이에 성폭력이 포함될 수는 없다.

자신들의 변명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 그들이 대표 및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코리아연대가,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지역본부와 지역본부의 최고결기관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완전히 이성을 잃은 충남본부', '운동권 내 파쇼적 광기'라 막말하고, 조직의 대표로 있던 자들의 성폭력행위에 대해 도의적인 사과를 하라고 하자 맥락도 없이 '패권에 눈먼 종파적인 정파집단'이라며 민주노총을 '운동가로서의 양심을 찾아볼 수 없고 올바른 판단의 기준도 상실한 집단'이라고 온갖 패악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경찰고소 전 '재판확정 전까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확정판결 이전에는 모두 무죄추정이라는 최소한의 법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코리아연대 또한 '여전히 진위공방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이미 1심에서 강간비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가해자 교육 80 시간 이수 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아무리 손으로 가려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본질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와 회원으로 있던 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이다.

우리 민주노총 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최고결기관인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 그들이 소속된 조직이 피해자의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성폭력가해자와 그 집단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 5. 13
민주노총 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경 유 : 사무처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 - 002 (2014.05.15 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동의 건

1. 2013년 1월6일 오후8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계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계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개,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개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개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혼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개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동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과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계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전>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계환폭행강요전>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따라서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개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토론헤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고, 2013년 9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충남시국회의(군)> 주최의 행사에 참여하는(오마이뉴스 9월9일자)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성폭력법>을 방조·묵인·비호하는 것은 명백한 <추가가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성폭력가해자 박정우와 이에 적극적으로 방조한 이연재들 농민회에서 즉시 제명조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폭언·폭행·협박 방조자이자 추가가해를 저지른 장명진은 충남도연맹의장직에서, 당시 정책위원장으로 이 사건처리를 총괄하며 결국 추가가해가 일어나게 하고 사건처리를 무마하려고 한 권혁주는 충남도연맹사무처장직에서 즉시 사퇴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는 피해자 한지은과 김계환, 그리고 충남대련에게 공식사과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더불어 충남도연맹이 문제삼는 <김계환사건>을 바로 잡습니다. 충남대련은 2012년 9월 사건을 접수한 후, 당시 피해자가 사건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간부들 바로 활동정지시키고 2013년 1월에 해임시키는 최고수위의 징계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았습니다. 이를 충남대련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초 아산농민회 이연재가 개입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폭행사건까지 발생되었으며, 관련해서 억울한 <2차가해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또한 <김계환사건>은 처음부터 코리아연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미 충남대련이 해임징계조치를 한 조건에서 더 이상 <김계환사건>과 <충남대련>을 연관짓거나 표현하는 것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계속 유포되고 공론화 될 경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 가장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첨부자료5 김계환해임공고문, 전농충남도연맹발송공문)

6.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련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다음의 두가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첫째, 충남대련은 민주노총충남본부가 이 사건을 다룰 중대위를 구성하고 충남본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며 민주노총여성위원회와 민주노총본부에 전농과의 연대과기와 민중의힘에 연대과기제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충남대련은 상급단체인 한대련을 통해 전농과의 연대과기와 민중의힘에 연대과기제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충남대련이 취할 이 두가지 조치는 충남본부와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을 다루며 취한 전례에 따른 것으로서 이 두가지 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민주노총충남본부와 민주노총에 따진 후에 그 결과에 의거해 제기하기 바랍니다. (첨부자료6 충남본부대결정과 민주노총중립결정)

7. 충남대련은 전농, 전농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가 4항의 세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이 3단체를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001 (2014.5.15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등의 건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계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계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절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개,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개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 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개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혼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개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동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계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건>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계환폭행강요건>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개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한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면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면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상급단체인 한대면이 다음의 긴급조치를 위한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먼저, 한대면은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한대면긴급확대운영위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산하지역대면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고 전농산하의 모든 도연맹, 농민회와의 연대파기의 긴급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안건을 공식제의하여야 합니다. 한대면에 요구하는 이 세가지 조치는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을 다루며 위한 전례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민주노총의 조치가 그릇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됩니다. (첨부자료5 충남본부대대결정과 민주노총중립결정)

6. 한대면은 지역대면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여성간부가 폭행당하고 고통받는데 대하여, 지난 1년4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책임을 진심으로 총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5항의 요구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집행함으로써 중앙조직으로서, 전국적인 학생운동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충남본부의 제의를 그대로 중립에서 결정하며 코리아연대와의 자체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외한 민주노총의 전례를 중요하게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자료5 참고)

7. 이번 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직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월두월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급종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점을 개삼 강조합니다.

8. 충남대면은 한대면이 이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한대면을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전국여성연대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 - 007 (2014.05.15 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등의 건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온과 충남대련간부 김계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온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온·김계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개,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개혁신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온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온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개는 피해자인 한지온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혼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개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동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온과 폭행피해자 김계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온폭행전>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계환폭행강요전>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전농의장 김형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개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였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한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 버젓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면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면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전국여성연대를 비롯한 민중의힘 소속단체들에 이 사건의 본질을 폭로하는 선전을 진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몇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건을 전국여성연대중앙의 공식의결단위에서 논의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농에 강력한 연대파기의 의사들 공문으로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국진보연대에 전농의 가입을 무효화하거나 최소 활동중지하는 적극적인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민중의힘에 전농에 대한 제재조치나 연대파기와 관련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자료5 충남본부대대결정과 민주노총중집결정)

6. 이상의 3가지 조치는 충남대면이 요청한 세가지 사항은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을 다루며 취한 전례와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한국진보연대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른 것인만큼 만약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여성연대가 2중жат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7. 이번 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직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월두월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점을 개삼 강조합니다.

8. 충남대면은 전국여성연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전국여성연대를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농민이 있는 곳에 전농이 있고 전농이 가는 곳에 투쟁이 있다. 농민을 위한 전농, 투쟁하는 전농, 승리하는 전농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80-2번지 통영빌딩 2층 / 전화: 029-6347 전송: 029-6348 이메일: nongsa0424@gmail.com

문서번호 : 전농 2014-05-15-01

수 신 : 코리아연대

발 신 일 : 2014년 5월 15일

저 목 :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코리아연대 관련 결정사항

1.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맹입니다.
2. 전농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2013년 12월 10일 전농 14기 2차년도 9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사항
*충남도연맹의 요청으로 충남대련과 21세기 코리아연대와 연대사업을
중단할 것을 논의 하고 결정함*

3. 이에 전농은 코리아연대와 직접적인 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코리아연대와의 연대사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주요 연대조직인
민중의 힘에서 코리아연대 관련 사안을 함께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연대파기는 〈21세기판 연좌제〉〉 ... 민주노총규탄촛불집회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14일 오후6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건물앞에서 〈연대파기 철회와 폭언폭행 사과 및 징계 촉구 민주노총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는 〈코리아연대는 이른바 〈충남사건〉과 관련해 〈1차가해자〉에 대해서는 코리아연대회원탈퇴와 더불어 스스로 자성하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 지금까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리아연대는 진보진영내 어떠한 단체보다도 가장 도덕적이며 원칙적으로 풀어진 단체중의 한곳이며,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충남사건〉이 지역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민주노총중앙까지 올라왔다는 것이다. 총연맹은 사과와 피해자요구사항을 코리아연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에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 허심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풀자고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민주노총항의방문과정에서 확인됐듯이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산하 지역본부와 민중의힘에 일방적으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1차가해자〉와 〈피해자〉는 민주노총과 전혀 하등의 관계없는,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연대하는 단체의 사람일뿐〉이라면서 〈그런데 미국이 세계경찰을 자임하고 다른나라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민주노총도 운동진영에 월권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다른 단체를 단죄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또 〈민주노총은 〈충남사건〉과 관련된 충남사람들은 이른바 〈충남공대위(충남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선에 들어와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받았다. 그리고 2차피해자로 지목당했다. 피해자이름을 거론하거나 스스로 내부적으로 풀려고하면 2차가해자로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충남공대위〉는 〈2차가해자로〉로 지목된 충남대련여성간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성폭력을 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

과연 이것이 진보진영집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연대는 진보진영에 생명과도 같다. 진보진영의 역사에서 어떤 단체가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단체가 연대파기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단결과 연대를 앞장서서 해왔던, 민주노총에 해를 가하지도, 피해를 주지도 않았던 코리아연대가 연대파기를 당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민주노총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투쟁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풀지 않고 연대파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론매체 등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난 민주노총항의방문과정에서 폭언·폭행을 가했던 것을 사과하고 해당관련자들을 징계하고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연대 이민경회원은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KBS항의방문후 청와대로 갔을 때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했다. 유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 그곳은 그야말로 연대의 현장이었다>면서 <이것을 보면서 민주노총의 연대파기결정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연대할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우리에게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마저 빼앗아 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 기회를 빼앗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인가?>라고 묻고 <사안이 중대할 수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쌍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 아닌가?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 양쪽의 발언을 충분히 듣고 난 뒤 판결을 내린다.>면서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가 요청한 간담회를 백지화로 만들고 연대를 파기하는 그 과정 또한 비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나의 힘이 상대방의 힘차이가 클 때 그 힘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비합리적인 선까지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지금 민주노총의 행위가 〈갑〉질이다. 〈갑〉질의 횡포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기에도 벅찬 시기임에도 민주노총은 연대하는 단체에게 〈갑〉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노동자를 하나로 모아내고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민주노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운동권갑〉질을 그만두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며 노래 〈함께 가자 이 길을〉를 불렀다.

이어 코리아연대 김미성회원은 <〈세월〉호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울분에 차 있다. 이 울분은 전국적으로 박근혜퇴진을 향한 행동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진보진영이 단결하고 연대해 더 큰 실천을 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앞에서 적이 아닌 동지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진보단체들과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을 해왔고 이른바 〈충남사건〉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결정했고, 이에 항의방문하는 코리아연대회원들에게 10여명의 민주노총상근자들은 욕설을 포함한 폭언·폭행을 가했다>면서 <코리아연대는 동행취재한 기사를 폭행한 조경석상근자의 처벌과 폭언을 한 한석호사무부총장의 해임을 촉구했지만 민주노총은 일체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은 쌍방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한쪽입장에서만 코리아연대를 성폭력집단으로 치부하는가?. 〈1차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모든 활동을 중지했고, 그에 속해 있던 코리아충남연대는 자진해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남공대위〉에 속해 있는 아산농민회간부가 〈충남사건〉을 빌미로 〈2차가해자〉로 지목된 충남대련여성간부를 성폭력한 것을 언급하면서 <아산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다.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충

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왜 성폭력피해자인 충남대련여성간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음에도 왜 전농과는 연대파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연대 구인규회원은 <과거 연좌제라는 악법이 존재했다. 자기형제 또는 옆집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던 제도>라면서 <코리아연대에 과거 회원중의 한명이 <충남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연대를 마치 성폭력집단인 것처럼 매도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조합원중 몇몇이 성폭력사건을 저질렀다고 민주노총을 성폭력집단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이상 운동해온 같은 연대단체동지들에게 할 수 있는 민주노총에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을 믿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와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해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의 중앙간부도 아니고 한 회원이 자신의 개인의 잘못에 의한 것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전체를 마치 연좌제로 묶어서 우뚝연대파기를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코리아연대는 10년 이상을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 함께 지역에서 거리에서 함께 투쟁해왔다>면서 <그런데 왜 민주노총이 조합원도 아닌 민주노총소속단체도 아닌 코리아연대에게 일방적으로 연대파기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단호하게 이에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노총의 혁신과제로 이와 같은 분파적 행태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서울여성회 양지윤대표는 <오늘 민주노총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봤다. 민주노총의 연대파기사건의 본질이 성폭력이라고 한다>면서 <애초에 코리아연대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을 들춰내 동지들을 <2차가해자>로 몰고 어떤 문제나 사건에도 <코리아연대>이름만 들어가면 성폭력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에게 한 것처럼 다른 단체에서 그 회원이 성폭력을 저질렀으니 단체가 조직적으로 사과하고 해당가해자를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활동을 정지시키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코리아연대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역시 민주노총이 나서서 대책위를 꾸리고 연대파기를 요구할 것인가? 만약 민주노총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의도는 뻔하다. 오직 코리아연대만을 죽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이 아닌 코리아연대와의 파기>라면서 <물론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의도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민주노총을 추동하고 지역단체를 추동해서 결국 이자리까지 오게 한 일부종파세력들의 의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원회>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 <1차가해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입에 담았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십수년을 운동한 9명에게 <2차가해자>로 몰고 사실상 영구적인 활동정지를 요구했다. 코리아연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등 허위보도하는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참가자들은 <입으로는 단결투쟁, 실제로는 연대파기 민주노총 각성하라>, <이중жат대 들이대는 민주노총 혁신하라> 구호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마무리했다.

2014.05.16 진보노동뉴스

코리아연대 〈이중жат대 들이대는 민주노총, 연대파기 철회하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16일정오에 서울 중구 민주노총건물앞에서 〈연대파기철회, 폭언·폭행사과 및 징계촉구 민주노총 규탄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세월〉호참사 1달째를 맞이해 300여명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의 뜻대로 진실규명이 되기를 심원하며 묵상했다.

이날 규탄집회참가자들은 아산농민회간부가 충남대련 여성간부에게 성폭행을 가한 사건을 폭로하고, 이중жат대에 의한 〈연대파기〉를 규탄했다. 사회를 맡은 코리아연대 김경구사무국장은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와외의 연대파기결정하고 코리아연대의 민주노총항의방문과정에서 폭언폭행을 일삼은 사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코리아연대 양고은회원은 〈세월호참사로 국민들의 큰 슬픔과 분노로 정국을 뒤덮고 있고, 의료·철도민영화등 공공부문민영화로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코리아반도에 전쟁위기가 더욱더 고조되는 상황속에서 진보운동진영은 모두가 단결하고 연대해 민중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재 그누구보다 강하게 연대해왔던 코리아연대와 〈연대파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연대파기한 이유로 이른바 〈충남사건〉이라 불리는 〈성폭력사건〉을 들고 있지만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충남사건〉의 진상을 밝혔다.

양회원은 〈이른바 〈충남사건〉을 말하자면 〈성폭력사건〉은 3건이 있었고, 1건은 코리아연대와 전혀 무관하며, 1건은 코리아연대회원이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아산농민회간부가 충남대련(21세기충남대학생연합) 여성간부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관련기사: 충남대련,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진보노동뉴스〉〉)이라면서 〈하지만 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원회는 충남대련여성간부에 대해 성폭력을 가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고, 코리아연대와 관련이 없는 〈성폭력사건〉까지 관련이 있다며 코리아연대를 〈성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해당 아산농민회간부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충남대련에 연대파기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코리아연대는 사건당사자를 직위해제했고, 사건당사자는 탈퇴했으며, 그와 관련된 조직은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와 연대파기를 결정했는데 그렇다면 충남대련여성간부에게 성폭력을 가한 아산농민회간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중앙이 전능과 연대파기를 왜 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민주노총과 충남본부에서 행하는 행태는 이중жат대를 휘두르며 진보운동단체의 사회정치적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다. 코리아연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진보운동에서 눈막고, 귀막고, 입막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16세기 중세시대에 벌어진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명창엽회원은 〈민주노총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잘되고, 작년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철도파업처럼 힘을 모아 서 진보진영이 단결해 우리민중을 억압하고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심장부를 겨누는 투쟁을 날카롭게 전개하고 싶다. 민주노총과 힘을 합쳐 전개하고 싶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오히려 뒤통수를 쳤다〉면서 〈코리아연대는 정당하게 공문을 통해 주고받으며 간담회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자고 했었던 것을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연대파기하고 민중의힘에 연대파기요청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정국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퇴진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때에 가장 견결하게 흔들림 없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왔던 코리아연대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연대파기결정을 내린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코리아연대를 〈난동꾼〉, 〈시헛말로 쓰레기〉, 〈척결해야 될 암적인 존재〉처럼 여기는데, 코리아연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난동꾼〉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평화적으로 올라가서 〈연대파기〉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코리아연대회원을 먹살잡고 걷어차고 폭언폭행 했던 민주노총내 일부간부들〉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이 이래서는 안된다. 6월지방선거도 있고, 더더군다나 민주노총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6월 2차국민파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런 말도 안되는 연대파기는 결단코 지양돼야 한다. 대화하자.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박근혜정권과 자본과 권력에 맞서서 모두가 다함께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민중을 위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연대투쟁가>를 불렀다.

다음으로 규탄발언에 나선 이민경회원은 <이들이 지나면 5.18광주민중항쟁 34주년이고, 다음달 6월10일이면 87년6월항쟁이 27주년이 된다. 바야흐로 투쟁의 계절로 다같이 연대하고 단결해 사회모순과 구조적 모순에 대해 소리높여 투쟁해야 하는 시기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민주노총의 모습은 어떤가? 단결과 연대를 항상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법부에서는 죄를 묻고 형을 선고함에 있어 3심까지 기회가 있다. 물론 쌍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기간도 절차적으로 보장돼 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고, 또 무죄추정원칙이 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라면서 <<연대파기>의 원인이 된 <성폭력사건>은 아직 재판중이며, 이와 연루된 이른바 <2차기해자> 9명의 활동가들에게 <충남공대위(충남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활동정지를 요구했지만 <2차기해>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과거 조직내 발생했던 <성폭력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가? <성폭력사건>에 연루된 기해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 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하거나 민주노총이 해산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명백한 <이중잣대>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이것이 진정 진보운동의 기동인 민주노총의 모습인가.>라고 꼬집으면서 <지난 노동절대회때 신승철위원장은 단결과 연대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소통하고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민주노총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는 <오늘 12시30분부터 416명이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격려하며 20명의 실종자가 살아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간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촛불을 들고 이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란리본을 달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당하게 민주노총으로부터 연대파기당한, 민주노총이 민중의힘에 공문을 보내 연대파기를 촉구하는 황당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부당하다고 국민여러분과 민주노총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2년 9월과 10월에 벌어진 <성폭력사건>중 1건은 코리아연대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고, 1건은 당사자가 코리아연대회원이었지만 그 회원이 탈퇴했고, 코리아연대와는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에도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중앙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주노총지도부는 제대로, 상식적으로 알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22일 항의방문과정에서 우리들은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민주노총지도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중립결정사항대로만 처리했다고만 반복했다>면서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에게 피해를 가한 적이 없다. 어째서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회원들에게 성폭력집단으로 낙인찍는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집단>이라고 매도한 민주노총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이 이렇게 된 이유는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일부패권분파, 민주노총을 좌지우지하려는 종파들 때문이다.>면서 <민주노총충남본부에 의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내용이 지난해 11월 중집에 보고됐고, 그 중집회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연대파기를 결정했다.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분란하게 처리됐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현주소>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을 향해 <연대파기를 철회하고 폭언폭행을 가한 사무처성원들을 징계 · 해임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민중의힘에게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연대파기안건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1인 시위 · 규탄집회 · 촛불집회보다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 강요말라>, <민주노총은 폭언 · 폭행 사과하고 연대파기 철회하라>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진보노동뉴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세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팩스 02-6280-8815 | 이메일 corez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1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참 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중앙상무위원회)

제 목 전농의 한심한 <연대파기>통보에 대한 확인과 항의

1. 코리아연대는 전농으로부터 문서번호 <전농 2014-05-15-01>,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코리아연대 관련 결정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으면서 전농이 더 이상 300만 농민들의 대변자이자 대표체가 아닌 지도권을 장악한 전농내종파들의 패권적 종파조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종파들의 월권·매도·횡포·중장대과 공문에 비겨있는 그들의 한심함·천박함·야비함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2. 전농공문은 <2013년12월10일> 전농 14기 2차년도 9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충남도연맹의 요청으로 충남대련과 21세기 코리아연대와 연대사업을 중단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함>이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이며 도대체 단체이름도 모른 채 무슨 책임있는 결정을 내렸겠으며 <유형 단체>와의 연대사업중단결정이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수신단체의 이름조차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고 특히 결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통고하는 공문의 한심하고 천박한 수준을 곧 전농지도부의 수준으로 간주해도 되겠는지부터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코리아연대는 결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통고된 회한한 공문을 보면서 다음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9차상무위원회회의록 전체를 공개하거나 9차상무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로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5개월이나 지나서 보내진 공문인 만큼 그 내용과 공문발송시한 등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답변이 없을 시에는 9차상무위원회회의록이 없거나, 회의록이 있든없든 그것을 조작하여 원래는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내용만 있었는데, 최근 코리아연대가 보낸

공문을 본 후 회의를 열거나 일부가 독단으로 <충남대련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중단>이라는 식으로 코리아연대를 추가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작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전농지도부총사퇴감이라는 점도 확인합니다. 둘째, 9차상무위원회회의 참석자와 그 발언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전농과 전농지도부, 그리고 그 안의 종파세력을 결코 등치시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문에 결론만 나온 연대파기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공문에 대하여 우리가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9차상무위원회회의의 <연대파기>결정이 전농회원들의 뜻이나 나아가 300만농민의 뜻을 담은 것인지 그 회의참석자들의 주관적인 견해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4. 전농은 이번 공문에 언급된 그 충남대련의 여성간부를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해 성폭력·폭력·협박한 <농민회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방조자·책임자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공개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남대련이 5월15일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에 함께 보내고 공개한 공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코리아연대는 충남대련이 공문에서 지적인 사실과 그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강력한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구체적으로 1) 가해자로서 자인하고 실행까지 선고받은 박정우는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에서 즉시 제명되어야 하고 2) 적극적인 방조자이자 추가가해자인 이연재는 전농에서 제명되어야 하며, 장명진은 충남도연맹의장직위에서 해임되어야 하고 3) 1년4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코리아연대와의 연대중단>을 확인하는 공문이나 보내고 있는 김영호전농의장도 공개사과하며 의장직에서 사퇴하여야 하고 4)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은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전농은 스스로 이번 공문에서 이미 민주노총이 제의해서 민중의힘의 안건이 된 코리아연대의 민중의힘에서의 <연대파기>제제건에 동의의 의사를 밝힌 만큼, 위 4항에 언급된 <농민회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스스로 민중의힘에서 탈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진탈퇴하지 않는다면, 남코리아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온 그 미국과 수구세력이 자주 보여온 그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남의 눈의 티눈을 뚫라 하며 자기눈의 들보를 못보는> 전농지도부, <사회적갑>과 싸우다 어느새 <운동권갑>이 되어 조폭식으로 월권·매도·횡포를 부리는 전농지도부,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도둑이 메를 드는 식으로 행동하는 파렴치하고 야비한 전농지도부 안의 종파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농은 결코 300만농민운동을 조직·지휘할 자격이 없습니다.

6. 우리는 전농에 단 한번도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전농이 가세하여 이런 코리아연대를 <연대파기>로 고립압살하려는 종파세력들의 월권·매도·횡포·2중잣대에 맞서 반종파투쟁으로 맞서는 것은 최소한의 옹당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투쟁으로 시련을 겪더라도 종파세력이 박멸될 때까지 조금도 굴함없이 계속전진할 것

입니다.

7. 이 공문은 발송 즉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선수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팩스 02-6280-8815 | 이메일 corea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2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참 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제 목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의 촉구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재삼 확인합니다. 민주노총내총파로 인해 우리가 시련을 겪더라도 민주노총자체와의 연대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민회성폭력사건(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의 간부 박정우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공식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활동하는 반면 피해자인 충남대련집행위원장인 여성 한지은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회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아산농민회, 충남도연맹, 전농은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묵인·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과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제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혼제하는 <추가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 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 한대련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전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충남대련의 공문들 참고)

3. 민주노총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결정·집행하고 나아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공문에서 민주노총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일관성·공정성·형평성의 원칙이 있는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만약 민주노총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면, 당연히 위의 <농민회성폭력>사건도 같은 차원에서 다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합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충남본부에 이른바 <충남사건>과 같이 <공대위>를 꾸리고 충남본부대대에서 충남도연맹과의 연대파기를 결정하며 민주노총 여성위나 중집에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결정하도록 제의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지나고 가해자가 인정하며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사건인 만큼, 충남본부의 제의와 상관없이 스스로 중집을 열어 자체적으로 전농과의 연대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주노총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도록 제의하여야 합니다.

4. 충남대련이 공개한 제 단체들에 보낸 공문들에서, <이번 <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앞으로 더이상 정부측이든 자본측이든 누구에게든 <공정성>·<형평성>·<2중잣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역시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미국이 <국제헌병>·<국제경찰>짓을 하고 있듯 민주노총이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노릇을 하기로 작심하고 행동하는 만큼, 그 역할을 똑바로 하여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농민회성폭력>사건을 더욱 강력한 제재내용으로 중집에서 결정하고 바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5. 그런 의미에서, 우리코리아연대는 이번에 열리는 민중의힘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이미 제기한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제안>과 함께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안>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보수정권·자본·보수언론과 똑같은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이 3항과 5항의 요구사항을 5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이번 민중의힘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건에 대하여 민중의힘대표자들이 그 황당하고 어리석은 본질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보다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7. 다시 강조하는데,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황당한 사례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운동권은 독재정권이나 제국주의외세와의 투쟁보다는 내부분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진보운동역사상 민주노총내총파가 저지르고 그에 조직전체가 휘둘린 가장 큰 오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 후과도 보 다시피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한 <연대파기>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코리아연대와 전체운동대오에 공식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코리아연대가 제기한 위 3항과 5항, 7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민주노총의 답변을 48시간 이내에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수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팩스 02-6280-8815 | 이메일 corez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4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통합진보당 대표

참 조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최고위원회)

제 목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의 촉구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 이후부터 언제나 진보정당들의 〈혁신〉과 〈단결〉,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민주노총·전농내총파와 <0000>총파(지역이름으로 불리우는 남코리아 대표 총파) 등으로 인해 우리가 시련을 겪더라도 민중의힘, 진보정당들과의 연대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민회성폭력사건(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의 간부 박정우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공식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직판하장격으로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활동하는 반면 피해자인 충남대련집행위원장인 여성 한지은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회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아산농민회, 충남도연맹, 전농은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묵인·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과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혼제하는 <추가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 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 현대련 등에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전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충남대련의 공문을 참고)

3. 통합진보당은 코리아연대가 이미 공문으로 요구한 아래사항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시 폭행·방조한 아산농민회간부 박정우·이연재, 현장에 있었던 현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현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 현충남도연맹사무처장 권혁주(당시 정책위원장으로 이 사건처리의 실무총괄)의 당원여부와 사건에 대한 보고여부, 통합진보당의 조치여부 등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전농이 이 사건을 1년4개월간 외면하면서 묵인·방조한 것과 똑같은 입장임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 충남대련이 합리적으로 제기한 4가지 요구인 <첫째, 최고위원회차원의 건상조사위구성, 둘째, 최고위원회차원의 당기위제소와 징계, 셋째, 통합진보당 자체적으로 전농과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제의, 넷째, 한국진보연대에 전농과의 연대활동잠정중단제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4. 충남대련이 공개한 제 단체들에 보낸 공문들에서, <이번 <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칠두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000최고위원(또는 다른 중앙간부)이 민주노총간부(또는 상근자)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또는 코리아연대를 제재하는 일체의 안전)이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고 000최고위원이 속한 <0000>지역명칭의 정파조직 또는 통합진보당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보수정당들처럼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5.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코리아연대는 이번에 열리는 민중의힘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이미 제기한 안전을 수정보완하여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제안>과 함께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안>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보수정권·자본·보수언론과 똑같은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코리아연대는 통합진보당이 3항과 5항의 요구사항을 5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이번 민중의힘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전에 대하여 민중의힘대표자들이 그 황당하고 어리석은 본질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보다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7. 다시 강조하는데, 민주노총·전농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민중

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황당한 사례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운동권은 독재정권이나 제국주의 의세와의 투쟁보다는 내부문제로 시간과 역량을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진보운동역사상 민주노총·전농내총파가 저지르고 그에 조직전체가 휘둘리며 저지른 가장 큰 오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 후과도 보다시피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농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한 <연대파기>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코리아연대와 전체운동대오에 공식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코리아연대가 제기한 위 3항과 5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답변과 입장을 48시간 이내에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세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팩스 02-6280-8815 | 이메일 corea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5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참 조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집행위원회)

제 목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의 촉구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전국여성연대와 같은 건보단체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만일 전국여성연대내종파가 코리아연대를 공격하며 코리아연대의 존엄과 명예, 연대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여성연대와 그안의 종파를 엄격히 구별할 것이며 아무리 반종파투쟁을 치열히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여성연대 자체와의 연대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2.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민회성폭력사건(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의 간부 박정우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금줄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공식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활동하는 반면 피해자인 충남대련집행위원장인 여성 한지은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회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아산농민회, 충남도연맹, 전농은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묵인·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과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혼제하는 <우가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 민주노총충남본부·여성위, 한대련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전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충남대련의 공문을 참고)

3. 전국여성연대는 최근 한국진보연대집행위원회에서 코리아연대의 가입을 반대하였고 이것이 코리아연대를 진보운동권에서 고립·매장시키려는 패권적이고 종파적이며 황당한 <반코리아연대담합>의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4월30일 한국진보연대 4기12차집행위원회회의에 참여하여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건과 관련해 반대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코리아연대는 전국여성연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최진미집행위원장이 과연 전국여성연대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발언한 것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둘째, 최진미집행위원장이 과연 이른바 <충남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발언한 것인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의 확인요구에 답변이 없다면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에 맞게 우리의 대응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이 공문을 통해서 명확히 밝힙니다.

4. 만약 전국여성연대가 최진미집행위원장의 언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전국여성연대는 당연히 위의 <농민회성폭력>사건도 같은 차원에서 다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합니다.

첫째, 전국여성연대는 민주노총과 전농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성연대내의 최고의결기구에서 <농민회성폭력>사건을 논의하고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결정하며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제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한국진보연대에 전농에 대한 활동중단을 즉각 제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국여성연대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2중잣대를 적용하며 그 활동의 공정성에 중요한 흠결이 생기며 내외의 엄청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코리아연대 또한 좌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5. 충남대련이 공개한 제 단체들에 보낸 공문들에서, <이번 <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칠두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한국진보연대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른 것인만큼 만약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여성연대가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6. 그런 의미에서, 우리코리아연대는 이번에 열리는 민중의힘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이미 제기한 안전을 수정보완하여 <코리아연대와 연대파기제안>과 함께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안>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보수정권·자본·보수언론과 독

같은 2중궤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코리아연대는 전국여성연대가 3항과 4항의 요구사항을 5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이번 민중의힘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전에 대하여 민중의힘대표자들이 그 황당하고 어리석은 본질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보다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8. 다시 강조하는데, 민주노총·전농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황당한 사례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운동권은 독재정권이나 제국주의 외세와의 투쟁보다는 내부문제로 시간과 역량을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진보운동역사상 민주노총내총파·전농내총파가 저지르고 그에 조직전체가 휘둘린 가장 큰 오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 후과도 보다시피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농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한 <연대파기>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코리아연대와 전체운동대오에 공식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코리아연대가 제기한 위 3항과 4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전국여성연대의 답변과 입장을 48시간 이내에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세동 91-392 101호 | 전화 02-716-8815 | 팩스 02-6280-8815 | 이메일 coreayd21@gmail.com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3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민중의힘 상임대표

참 조 민중의힘 상임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제 목 차기대표자회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안건 상정제기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민중의힘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재삼 확인합니다. 민주노총·전농내부와 <0000>종파(지역이름으로 불리우는 남코리아 대표 분파) 등으로 인해 우리가 시련을 겪더라도 민중의힘과의 연대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민회성폭력사건(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의 간부 박정우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공식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발방지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격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활동하는 반면 피해자인 충남대련집행위원장인 여성 한지은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회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아산농민회, 충남도연맹, 전농은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묵인·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과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혼제하는 <추가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 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 한대련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전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충남대련의 공문들 참고)

3. 코리아연대는 민중의힘소속단체로서, 민중의힘에 엄중히 제기합니다. 만약 민중의힘은 민주노총과 전농이 민중의힘에 제기한 <코리아연대제재안건>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와 똑같은 원리·원칙에서 민중의힘이 <전농제재안건>도 함께 상정하여야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민중의힘은 이번에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전농과의 연대파기>나 그에 준하는 제재를 결정할 것을 코리아연대의 이름으로 공식 제기합니다.

4. 코리아연대는 민중의힘소속단체로서, <농민회성폭력>사건과 이른바 <충남사건>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내고 전농이 가세한 코리아연대제재의 안전과 코리아연대가 낸 전농제재의 안전이 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 두안전을 병합하여 하나의 안전으로 처리할 것을 공식 제기합니다.

5. 충남대련이 공개한 제단체들에 보낸 공문들에서, <이번 <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만큼 민중의힘이 이 <농민회성폭력>사건을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면, 민중의힘은 앞으로 정부와 자본, 외세를 향하여 <공정성>·<형평성>·<2중잣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6. 민중의힘이 말도 안되는 이 황당한 <코리아연대제재안>을 대표자회의에서 다루며 <운동권 재판관>의 역할을 자임한 만큼, 재판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 <2중잣대금지>의 원리·원칙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만약 민중의힘이 위의 3항, 4항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지 않고 6항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코리아연대는 지금까지 하였고 앞으로 할 민주노총과 전농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항의조치들을 뛰어넘는 더 큰 항의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정중히 밝힙니다.

8. 다시 강조하는데, 민주노총·전농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황당한 사례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운동권은 독재정권이나 제국주의외세와의 투쟁보다는 내부문제로 시간과 역량을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진보운동역사상 민주노총내종파·전농내종파가 저지르고 그에 조직전체가 휘둘린 가장 큰 오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 후과도 보다시피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농과 민중의힘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농은 당장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한 연대파기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코리아연대와 전체운동대오에 공식

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민중의힘은 이 황당한 계의를 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받아들인 데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하고 즉시 안건을 취소하겠다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9. <세월>호참사로 온국민이 절통해하고 박근혜정권이 총체적인 위기에 몰려 전국민적 항쟁이 임박한, 더욱이 남북관계가 파탄되어 코리아반도에 전쟁정세까지 조성된 긴박한 정세에, 모든 진보세력이 하나로 단결해 투쟁해도 부족한 판에, 민주노총·전농이 운동권내 분열을 야기시키는 <연대파기>의 황당한 안건을 발의하며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대하여 민중의힘마저 부화뇌동하며 <운동권재판관>노릇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통탄해마지않습니다.

과연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민중, 우리국민이 민주노총과 민중의힘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진심으로 돌아보며 이 소모적인 분란을 시급히 매듭짓고 당면한 반박근혜투쟁, 반전반미투쟁에 매진할 것을 절절히 호소합니다.

10. 참고로, 민중의힘은 민주노총과 한 건물을 쓰고 늘 긴밀히 협의하는 만큼, 이 공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1. 코리아연대가 제기한 위 3항과 4항, 8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민중의힘의 답변을 48시간 이내에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규정

제3조(처벌의 적용범위)

① 가해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맹
2. 연맹·지역본부
3. 단위노조 간부·조합원

② 피해자가 ①항의 적용 범위내 대상이고, 가해자가 민주노총 상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가 총연맹의 간부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피해자가 총연맹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절차)

민주노총은 성폭력 및 폭언폭행 피해자(대리인)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민주노총 상벌규정에 따르되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정 후 피해자의 요청 시 징계 결과를 7일 이내에 공표한다.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임원 중 1명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여성위원회 1명
2. 임원 1명
3. 기타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3명

③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상 조사 후 활동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진상조사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한 담당을 실장급으로 1인 배치한다.

⑥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한석호, 너 프락치지?”

한해를 평가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연말이다. 대다수 사람이 평가와 설계는 뒷전인 채 술독에 빠져 심신을 갈아먹고 있겠지만, 어쨌든 송구영신한다는 연말이다.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이 여러모로 복잡한 시기다. 그래서 이번 글은 가볍게 넘어가려 한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다.

내가 받은 그 술한 혐의들

나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술한 혐의를 받아왔다. 사노맹 때는 극단주의, 좌익편향 등의 혐의를 받았고, 중앙파 구성원이 되고서는 패권주의, 개량주의, 기회주의, 시민주의 등의 혐의를, 민주노동당 분당 때부터는 종파주의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때는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 분노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딱지를 붙이는 그들의 행위와 실천이 과연 나에게 그런 딱지를 붙일 만큼 신실한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버릴 수 없지만……. 하지만 내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가로서의 나의 삶이 나의 뜻과 무관하게 중도하차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다. 나는 한 때 어떤 집단에 의해 프락치로 의심받았었다. 한국 현대운동사에서 한 정파가 다른 정파를 향해 미국CIA 첩자라고 했던 일이 있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을 비판적으로 지지한 NL그룹이 민중의 독자후보를 주장하며 백기완 후보를 내세운 제헌의회파와 일부 PD그룹을 향해 미국CIA 첩자로 비판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오늘 나의 이야기는 그것이다.

장면 1.

1993년 어느 날, 단병호 위원장 수행을 마친 민동원과 나는 소주잔을 기울였다. 당시 전노협쟁의부장이었던 나와 서노협쟁의부장 민동원은 현충련 파업 건으로 수배된 단병호 위원장 수행임무를 맡고 있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민동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단 위원장님 수행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반대했다.”

“……. 왜?”

민동원이 전달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위원장이 단 위원장에게 “한석호는 프락치로 의심 간다는데, 수배 중인 단 위원장의 수행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단 위원장은 “구속되어도 내가 구속되는 것이니, 한석호에게 계속 수행을 맡아겠다.”고 했다.

화내고, 슬퍼하고, 어이없어 하고

장면 2.

사귀는 여성과의 결혼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1995년 어느 날이었다. 결혼을 하기로 한 그녀가 힘들게 말을 꺼냈다.

“###이 나에게 한석호와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프락치이기 때문이래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그녀는 ###에게 소문의 진원지를 물었고, 그 소문의 진원지가 000이란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리고 000을 만나서 따져물었다고 했다.

장면 3.

1998년 어느 날, 울산의 한 술집에서 나는 현대중공업의 윤재건, 김원필 등과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그때 재건 형이 말했다.

“석호야,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000이 너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었다. 석호 네가 프락치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말 믿지 않았고,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었다.”

나에게 그 말을 할 때, 민동원은 화를 냈고, 그녀는 슬퍼했고, 재건 형은 어이없어 했다. 그들은 그런 류의 이야기가 한석호에게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척 걱정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운동가로서의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속한 전노협 입장에서, 그것도 노-자간 대립이 격렬했던 당시 노동운동 상황에서, 그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운동을 하면

서 프락치로 지목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실제 프락치에 의한 국가보안법 조직사건도 많이 있었다. 그런 소문은 한사람의 노동운동을 전선에 서배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담담하게 그러려니 했다. 나는 당시 누가 나에게 개량주의자라고 비판하면 몹시 불쾌해 했지만, 그보다 더 치욕스럽고 위험한 프락치 혐의라는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다. 소문의 진원지인 000에게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프락치가 될 소지가 있는가.”라는 화두를 놓고, 내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분석해 보았다. 아무리 분석해도 그럴 소지가 없었다. 나는 현장과의 결합력이나 역할을 종합할 때, 그런 소문 정도는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정파 이해가 결부되어 있다는 판단도 했다. 전노협 사무총국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 삼삼오오 모여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수배 중인 자신의 수행으로 한석호를 포기하지 않은 단병호 위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현장 활동가들도 나를 배척하지 않았다.

"나중에 술 한잔 하지, 내 사과할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1999년 초, 나는 소문의 진원지였던 000에게 “그 때 왜 그렇게 판단했었냐.”고 물었다. 내가 그 말을 꼬집어낼 줄 몰랐던 그는 순간 당황하고 미안해하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전노협 초기에 내가 안기부 담당을 만났던 것이 근거였다. 박창수 열사가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뒤 안양병원에 서투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내가 구속되지 않은 것도 근거였다. 사노맹 사건이 터졌는데 구속되지 않은 것이 세 번째 근거였다. 나에게 프락치 혐의를 씌운 그의 판단은 틀렸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다.” 나는 말했다.

“나중에 술 한잔 하자. 그 때 정식으로 사과할게.” 그가 말했다.

그는 술 한잔 사갔다고 했고, 나는 좋다고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지켜지지 못했다. 두 사람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영원히…….

안기부 직원을 만나다

이 글을 마치기 위해 그 혐의의 근거들에 대해 쓰고자 한다. 먼저 1990년 초 안기부 직원을 만났던 이야기다. 나는 1990년 1월 22일 전노협 출범과 함께 선봉대 담당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운동 시절의 내가 속한 학교를 담당했던 안기부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번 만나자는 것이었다. 박종철 열사가 죽기 1주일 전인 1987년 1월 초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 고문당했던 기억과 당시의 격렬한 노동운동 상황은 나를 망설이게 했다. 계속 연락이 왔고, 나는 까짓것 별일이야 있겠냐는 마음으로 약속에 나갔다. 만나러 나가는 날 당시 전노협 김준용 사무차장에게 말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뒤처리 부탁드립니다.”

약속 장소인 청량리 맘모스 호텔 2층 커피숍에 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전노협 담당 안기부 직원이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집안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노협 회의자료와 결과 등의 정보를 넘겨주면, 매달 얼마의 돈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집이 어렵다면서요?”

만남이 끝나고 전노협 사무실에 돌아간 나는 김준용 선배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형님, 안기부가 다시는 그런 장난을 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는 말도 덧붙였다. 김준용 선배는 그 직원을 알고 있다면서 씩씩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그 뒤 다시는 내게 그런 전화나 제안은 없었다. 나는 사무총국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것이 뒷날 나의 프락치 혐의의 한 근거가 되었다.

그 일이 다른 근거와 연결되면서 앞뒤 이야기는 모두 빠진 채, 안기부 직원과의 만남만이 남은 것이었다. 한석호가 그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으로 연결되었다.

당시 사무차장에게만 조용히 보고하고 처리했으면 그렇게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의 행동은 옳았다. 그런 문제는 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 계속)

그때 나만 구속되지 않은 이유들

앞의 글에서 밝혔듯, 나는 프락치 혐의를 받을 당시에 덤덤하게 받아들였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대응했다. 글을 쓸 때도 그랬다. 흘러간 이야기로 치부하며 감정의 기록 없이 편하게 글을 썼다.

의지에 눌린 감정들

조그마한 갈등은 있었다. “나를 제외한 누구도 의미를 두면서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꼬집어낼 필요가 있나?”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레디앙〉에 글이 올라간 후,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에, 또 글을 써서 보낼 때까지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레디앙〉에 뜬 내 글을 검색하며 나는 아팠다. 쓸쓸하고 외롭고 슬픈, 서글픔이 물밀듯 밀려와 이를 동안 신음했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몹시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운동가로서, 연약한 심성을 들킬까봐, 그래서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전선에서 이탈할까봐, 의지가 감정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렇지 않다고 한 것은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고, 스스로를 향한 끊임없는 주술이었다.

노동운동에 심어진 정보기관의 꼬나풀이 내가 받았던 혐의다.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노-재(정) 대립이 격렬하고, 대의원대회조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공개 전술과 선봉대의 화염병으로 사수해야 하는 전노협 시절에는 심각한 문제였다. 정보기관이 프락치를 활용해서 터뜨린 조직사건도 여럿 있었다. 나는 전노협 쟁의부장과 조직부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선봉대를 담당했다. 각종 투쟁의 비공개 전술을 기획하고 투쟁현장에서는 아전사령관 역할을 하는 직책이었다. 지도부와 수배자의 행사장 진입과 퇴로를 안내하는 직책이었다.

주문을 걸고 살아온 15년

은밀하게 진행되는 전노협 행사를 원천봉쇄 하도록 만들거나, 단병호 위원장 같은 1급 수배자들을 정보기관에 넘길 수 있고, 투쟁전선의 최선봉에 선 선봉대 동지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 자가 프락치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혁명시기라면 그 혐의만으로도 즉결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단병호 위원장이 그 말을 믿고 나를 수행에서 제외시켰으면 어찌 되었을까. 현대중공업 동지들이 그 말을 믿고 나를 배척했으면 또 어찌 되었을까. 또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많은 동지들이 선봉대 담당을 바꿀 것을 주장했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정보기관과 당사자만의 은밀한 관계로 형성되는 프락치 활동의 특성상, 프락치 혐의라는 것은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프락치 혐의가 전노협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순간, 나는 구석으로 몰리고 매장되었을 수 있다. 혐의가 벗겨지더라도 나는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전선에 서 방황했을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했던 것이다. 진짜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렇지 않다는 주문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처량했다. 초지안 글에서 못 다 한 두 개의 근거가 남았다. 하나는 안양병원에서의 박창수 열사 투쟁 때, 내가 구속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다.

내가 그때 구속되지 않은 이유

1991년 5월 6일, 용두동 전노협 사무실에는 청천벽력의 소식이 전해졌다.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이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박창수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의 전노협 탈퇴공작을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안기부 직원의 거듭되는 탈퇴 화유와 협박에 자해를 하고, 안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전노협과 노동운동진영은 즉각 안양병원에 집결해서 영안실 사수투쟁에 돌입했다. 다음 날 노태우 정부는 백골단을 앞세우고 물대포와 해머 등을 동원해서 영안실 벽을 부수고 시신을 탈취했다. 또한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박창수 열사의 가족과 남상헌, 박순희, 김문수, 김창우 등 10여명이 안양병원 6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병원 마당에서의 항의투쟁과정에서 얻어맞고 기절했던 나도 응급실에서 6층으로 합류했다. 경찰은 6층을 호시탐탐 노렸고, 농성자들은 투신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버텼다. 경찰이나 정보원이 올라오면 삽과 소화기 등을 휘두르며 구타를 해서 내쫓기도 했다.

5월 9일 밤, 대책위에서 보낸 변호사가 농성장에 올라왔고 논의를 통해, 다음 날 농성을 자진 해산하기로 했다. 가벼운 논쟁이 있었지만 가족의 뜻을 따르

기로 했다. 농성자들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전언도 있었다. 그 결정을 한 뒤, 나는 변호사를 따라 먼저 내려왔다. 1층 입구의 경찰에게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속였다.

중환자실의 아버지

내가 먼저 내려온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당시 나의 아버지는 순천향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다. 자진해산이라는 결정과 신변보호 약속이 먼저 내려오는 나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내 사정을 잘 아는 남상헌 지도위원의 재촉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경찰은 농성자가운데 전노협 사무총국의 기길동, 이병학, 김중배와 부산노련 선봉대장 고현석을 구속했다. 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면 구속이었다.

나는 사무총국 동지 몇몇과 경찰서로 구속자 면회를 갔고, 그들은 나에게 조심하라고 했다. 경찰이 “삼을 들고 설치면서 직원들을 가장 심하게 두들겨 팬 사람을 찾는다.” 고 했다. 그 후 경찰은 내가 6층에 있었다는 심증을 굳혔고, 언론을 통해서도 수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는 그 건으로 구속되지 않았고 사건은 유야무야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였다. 경찰이 구속할 것을 미리 알고 먼저 내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오히려 많은 동지들이 나의 프락치 혐의를 동의하지 않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 시대는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을 두들겨 패는 것으로 잘 구속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다가 사진이 찍히고 연행이 되어도 잘 구속되지 않았다.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집회의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전노협과 사노맹

세 번째 근거인 사노맹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다. 1990년 10월 사노맹 중앙위원 남진현을 비롯한 54명이 검거되었다. 전노협 선전부장 차익종은 곧바로 지하활동에 들어갔다. 그는 사노맹의 전노협 책임자였고, 나의 지도선이었다. 얼마 뒤, 차익종은 나에게 말했다. “압수당한 남진현의 컴퓨터에서 악어로 된 전노협 그림이 나온 것 같다. 도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했다. 그러나 나는 도피할 수 없었고, 구속되더라도 남아 있겠다고 했다.

안기부 손에 있는 문서가 실명이 아니라면 1987년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 고문당할 때처럼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가입원서를 쓴 정조직원이 아니고 후보였기에 감옥살이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도피를 위해 전노협을 그만두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것도 판단의 한 근거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발목을 잡은 것은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였다. 운동한답시고 아버지가 가슴에 대못질만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아버지가 눈을 편하게 감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구속되더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위한 귀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며 나는 눈물을 쏟았고, 나를 설득하지 못한 차익종 선배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 뒤 92년 4월 백태웅, 차익종 등이 구속되면서 사노맹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었으나, 나는 그 때도 구속되지 않았다. 지난 연말 차익종 선배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내가 왜 구속되지 않았는지 물었다. 차익종 선배가 말했다. “남진현의 컴퓨터에 있던 전노협 내용에 대해 안기부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나의 프락치 혐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나 마음 깊은 곳의 슬픈 상처

나는 이번 글을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슬픈 상처를 발견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프락치 혐의를 씌웠던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 뜻이나 행동과 무관하게 그들이 나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또한 그러한 식의 프락치 혐의 씌우기는 시대의 아픔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의 아픔이 아니었다. 레드앙에 굴이 뜯겨 뒤편에 뒀던 상처가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그녀는 운동가가 아니지만, 훌륭한 관점과 시각으로 진보운동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다.

“실은 나도 프락치 혐의를 받았어요. 가두시위에서 경찰에 붙잡혀 동료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나는 현장에서 풀려났어요. 학교 동료들이 나를 프락치로 의심했고, 그래서 학생운동을 그만 두었어요.”

레디앙

비망록 <운동권갑>의 2중잣대

<충남>사건으로 본 <운동권갑>과 <종파>의 월권·매도·횡포 그리고 2중잣대

발행_<운동권갑>과 <종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준)